



- 모심의 눈** ● 헛것들이 주는 깨우침
- 기획의도** ● 에너지와 에너지전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 기획특집 - '어떤' 에너지전환?**
 - [좌담] 에너지전환운동의 현장
 - 기로에 선 에너지전환
 - 재생에너지가 대안사회의 에너지가 되려면
 - 민영화와 노동배제가 아닌 체제변화
 - 농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그들은 왜 상어를 끄는가
- 이 슈** ● [인터뷰] 한살림 에너지전환 운동
- 시 선** ● 협동조합기본법 10년, 어디로 갈 것인가
- 특별좌담** ● [모심과살림연구소 창립 20주년 특별 좌담회]
전환의 시대, 모심과살림의 지혜를 듣는다
- 추 모** ● [故 김지하 선생 추모글] 한 오리 희망을 찾아서

정기구독 안내

모심과 살림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담론,
한살림 안팎의 보다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 | | |
|--------------------------|--|---|
| 구독료 1년 1만 5천 원 | 구독신청 이메일 mosim@hansalim.or.kr 전 화 02-6931-3604 누리집 www.mosim.or.kr | 연구소 누리집에서 지난 글을 보실 수 있으며, 과월호 구입도 가능합니다. |
|--------------------------|--|---|



**투 고 를
받 습 니 다** 지면에 수록하고 싶은 글(또는 주제와 구성안)을 보내주세요.
편집부 검토를 거쳐 수록하며, 해당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모임을
지원합니다** 『모심과살림』 독자 모임을 진행하실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모심과살림』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모심과살림』 19호를 읽고 난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의견을 적어주시거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눠주셔도 됩니다. 나눠주신 의견은 차기호 지면에 소개될 수 있으며,
수록된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모심과살림』 독자 의견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심과살림』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주실 곳 mosim@hansalim.or.kr

모심과 살림

19 후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모심과살림 19호 2022년

등록번호 강남, 사00117
발행인 신명호
편집자문위원 신명호, 정규호, 홍덕화
편집부 임채도, 조미성, 최민영
디자인 그린다
펴낸 날 2022년 7월 30일
펴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15 4층
www.mosim.or.kr / mosim@hansalim.or.kr / 02-6931-3609

책값은 8천원입니다.

목차

모심의 눈

- 햇것들이 주는 깨우침 - 신명호 4

기획의도

- 에너지와 에너지전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 조미성 8

기획특집 - '어떤' 에너지전환?

- [좌담] 에너지전환운동의 현장 - 김영란, 신근정, 여형범, 이현석, 임재민, 임채도 18
- 기로에 선 에너지전환 - 홍덕화 40
- 재생에너지가 대안사회의 에너지가 되려면 - 김동주 56
- 민영화와 노동배제가 아닌 체제변화 - 구준모 68
- 농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이무진 82
- 그들은 왜 상어를 끄는가 - 김우창 92

이슈

- [인터뷰] 한살림 에너지전환 운동 - 김정영, 김화정, 용석록, 조경은, 김태열 108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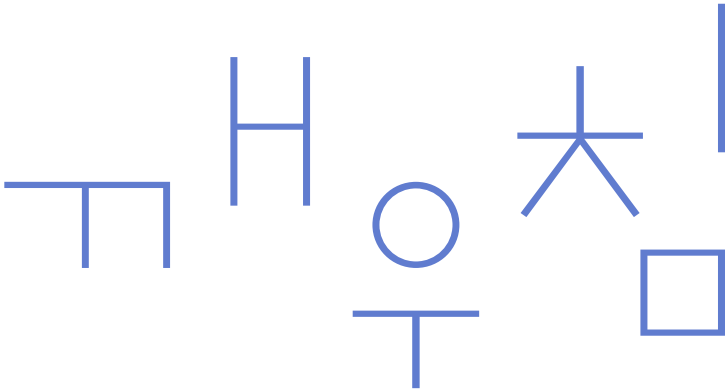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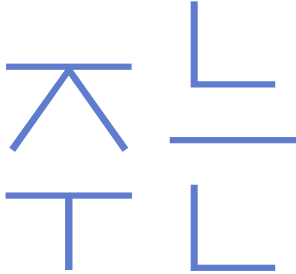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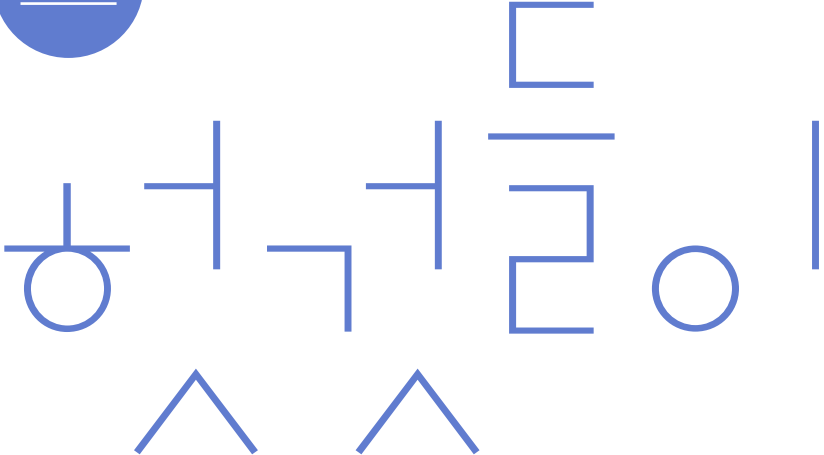
- 협동조합기본법 10년, 어디로 갈 것인가 - 김성오 130

특별좌담

- [모심과살림연구소 창립 20주년 특별 좌담회]
전환의 시대, 모심과살림의 지혜를 듣는다 - 박명수, 황도근, 윤형근, 신명호 152

추모

- [故 김지하 선생 추모글] 한 오리 희망을 찾아서 - 주요섭 178
-



요즘은 예년과 다른, 기이한 날씨를 접하는 일이 잦아졌다. ‘건국 이래 최고의 폭염’이니 ‘5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겨울 가뭄’이니 하는 따위의 기록 경신 소식이 자주 들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예사롭지 않은 기상이변들이 이른바 지구 온난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겠거니, 짐작한다.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고도가 낮은 대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식량 생산이 급감해서 기근이 들고, 빙하가 녹아 드러난 동물 사체로부터 병원균이 창궐하고… 기후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 공포영화가 따로 없다. 그런데도 인류가 탄 열차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기 위한 현실적 조치들은 한 발짝을 내딛기가 힘들다.

작년 가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석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도 결국 ‘탄소 중립’ 시점을 합의하지 못한 채 알맹이 없이 끝났다. 에너지 사용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나라들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탓이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에서부터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만인의 상식이 되어버린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거짓 정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이들은,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때문에 생겨난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는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녹색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한다. 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원인은 지면에 두텁게 쌓인 낙엽과 고사목 때문이지 결코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도 한다(실은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과학자들도 기후 변화가 산불 등을 더 크게 키운다고 했을 뿐, 산불의 직접 원인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이 밖에도 이들은 ‘현재 지구는 전혀 죽어가고 있지 않으며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해가 되기는 커녕 (동식물의 남획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들은 생태계와 기후 변화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과학적 주장들을 ‘종말론적 환경주의’라고 부르면서 환경운동가들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선동가라고 힐책한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자연히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메타연구(개별 연구들의 통계적 분석)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결과들을 종합하면 동료 과학자의 심사를 거친 기후 관련 연구 논문의 97~99%는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이 내뿜는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후 변화의 내막에 관해서는 판가름이 났다고 할 만도 한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몇 년 전 미국에서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의 원인임을 믿고 있는 사람은 미국 성인의 27%에 불과하다고 한다. 과학적 확률상으로는 99% 정도로 틀림없는 사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만큼의 확실성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운동을 공포 마케팅하는 종말론적 환경주의라고 비난하는 책들이 아마존 서점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매스컴은 이런 책들을 용기 있는 양심의 소리라고 추켜세운다. 희한하게도 이런 성향은 보수적 정치 이념과 유독 친화성을 보인다. ‘탄소 배출은 지구에 전혀 무해하다. 기후 변화로 지구가 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식의 달콤한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댐 건설 프로젝트의 선봉에 섰던 P교수는 앞서 말한 환경운동 비판서를 번역 출간하며 널리 알리고 있다. 그는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는 보의 철거를 요구하는 학자들을 향해 ‘보로 인해 오히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본인의 주장이 과학적 진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나의 진실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과학을 소환한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맞부딪칠 때 과학이 진실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

지만 한 시대에는 늘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 인간은 전적으로 과학에 의지할 만큼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적 진실에 입각해서 정치적 입장을 세우기보다는, 역으로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맞춰서 혹은 감정적 선택을 포장하는 건강부회의 수단으로 과학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후손들의 안녕이 걸린 환경 문제에,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 따위가 감히 가르마를 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순진한 믿음은 이렇게 해서 종종 배반을 겪는다. 하여, 건강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이 자꾸 벌어지는 낭패감, 변화에 대한 절박한 기대가 깨져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환멸) 상태가 돼 갈 무렵, 우연히 펼쳐 든 신문의 칼럼 한 구절이 내게 작은 위로를 건넨다: “환멸은 기대의 깨어짐 보다는 진실의 발견에 가깝다. ... 환(幻)/멸(滅), 환상을 멸하다. 헛것이 사라지다. 뜻이 좋구나. ... 현실에 매몰되지도,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는 것이니 모순을 발견하기에 최적이다. 환상을 깨고 기대를 접고 자기 할 일만 하다 보면 적멸(寂滅=사라져 없어짐)의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오늘도 되된다. ‘환멸은 나의 힘!’”¹⁾

2022년 6월

신명호 모심(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1) 김진해, [말글살이] ‘환멸은 나의 힘’, 한겨레신문 2022년 6월 5일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5803.html?_fr=mt3

기획의도

**에너지와
에너지전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이제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각성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는 얼마나 실감되고 있을까? 혹시 우리 머릿속 한 켠에 기후위기는 내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30년이나 50년 후의 일이고, 저 먼 태평양 섬나라나 아프리카, 북극곰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주류사회에서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입으로만 외치고서 실제로는 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는 현상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기후위기는 단지 폭염이나 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로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간의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거론된다. 또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영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기상이변과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인류의 식량 공급은 전반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다. 이를 방증하듯 2022년 전 세계는 주요 곡물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사상 최악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서민들을 생활의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날씨만이 아니라 거의 식량, 전염병,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싶다면,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보다 근본적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후위기의 과학적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이야기하거나 소위 ‘인간의 욕심’이라는 피상적이고 해답 없는 원인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

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로 인해 기후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중 세 가지만 물으려 한다.

첫째, 에너지는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가? 혹은 우리의 행복에 에너지가 필수적인가? 가령 덥고 습한 여름에 에어컨을 켜서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라는 부산물이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쾌적함’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에너지’나 ‘에어컨’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쾌적함과 시원함을 주기만 하면 그것이 에너지든 에어컨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도구, 기술, 수단)이 무엇인지 탐색하지 않고 에너지 그 자체에 목매는 병리적 현상을 우리는 ‘에너지 중독’이라 부른다.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한다면, 에너지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거나 원시시대로 돌아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약간 혼란스럽더라도 여러 선택지를 놓고 결과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장기적인 쾌적함(생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급진적이거나 몽상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를 이용해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경제인류학자인 히켈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문제는 단지 에너지의 종류가 아니다.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여 우리가 화석연료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한다면, 숲을 더 파괴하고, 더 많은 산을 파헤치고, 더 많은 도로를 건설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

들은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생태적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바꾼다 한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지금처럼 에너지를 펄펄 쓴다면 여전히 생태위기를 벗어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총소비량이 증가하더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효율 높은 가전제품으로 바꾸지만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총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 온실가스 배출은 물론 자원채굴과 생태파괴와 쓰레기 배출도 더 가속된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바뀌어야 할 것은 에너지원만이 아니라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어떤’ 에너지전환을 해야 하는가? 이제 기후운동가들만이 아니라 정부, 대기업, 원자력 전문가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외친다. 그러나 각자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지점은 다르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에너지전환의 상과 방식도 다르다. 급기야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원자력업계의 명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한 에너지’다. 어쨌든 다수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권을 희생해서 소수의 원전 사업자들을 살리겠다는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팬데믹이나 식량위기의 어려움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오듯, 기후위기 역시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영향

을 미친다. 나이 든 세대가 평평 쓴 에너지로 인해 어린 세대가 고통을 겪고, 부자들이 평평 쓴 에너지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겪는다. 인간이 평평 쓴 에너지로 못 생명들이 살 곳을 잃고 멸종되어 간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전환 과정마저 가장 책임 없는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위의 세 가지 물음들은 바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도 당연하고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타자의 생존과 행복을 빼앗아 나의 평화롭고 편리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가득 안고, 모심과살림지 19호 <기획특집>은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잡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어떤’ 에너지전환을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이며,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지 물어야 한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며, 누구의 입장이 반영되고 누가 주도하는지, 그리고 에너지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은 진정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로에 서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번 모심과살림지에 실린 글들에서는 에너지전환의 빛과 그늘, 갈등 지점과 고려점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전환의 현장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필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서로 의견도 다르지만, 이들이 공통으로 수렴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묻는

다는 것이다. 정의는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고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의의 기준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모심과살림지에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는 없는지, 약자는 누구인지에 더 초점을 두려 했다.

먼저 기획특집을 여는 글은 에너지전환 운동 현장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재생 에너지협동조합, 정치권, 학계, 지역시민운동 등 오랫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해 오신 다섯 분들을 모셔서 좌담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실었다. 각 현장의 상황과 걸림돌을 나누고, 지난 정부에서의 한계와 새로운 정부에서 시민운동 진영에 닦친 과제들과 실질적 대안을 만들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좌담회 끝에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던 서로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끈끈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홍덕화님의 “기रो에 선 에너지전환”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보내는 경고를, 단순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구조적 변화, 체제전환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을 조망하면서 전력산업에서의 전환경로, 전기 민영화-공영화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지는 “재생에너지가 대안사회의 에너지가 되려면”이라는 글에서 김동주님은 민주주의와 갈등하는 지역에너지전환의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기보다 기업과 국외 자본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 되어버린 재생에너지 현황을 돌아보고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되기 위한 원칙과 조건을 되새기자고 주장한다.

구준모님은 “민영화와 노동배제가 아닌 체제변화”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에 스며들어 있는 노동자들의 피땀을 보여주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외주노

동자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구조를 고발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이기보다 전환을 이끌 주체로서 노동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장하며 사회 공공성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강조한다.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농민에 초점을 맞춘 “농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무진님의 글은 현재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민들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주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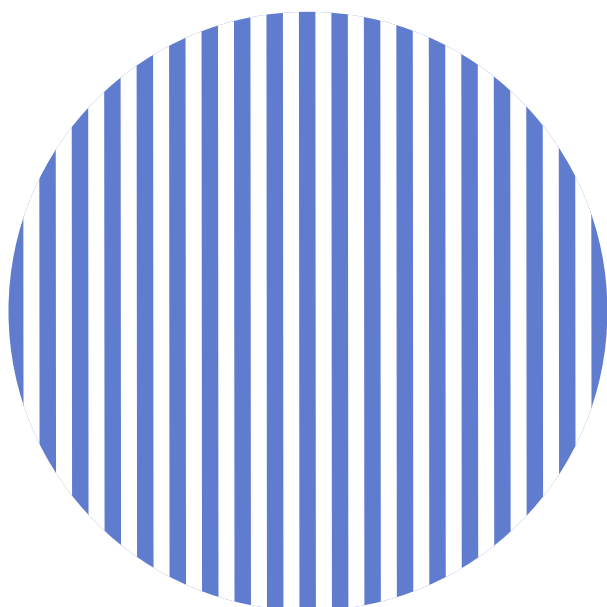
기획특집의 마지막 원고인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는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인 나아리 주민들과 8개월 넘게 동고동락한 김우창님의 글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진행형인 나아리 주민들의 투쟁, 목소리를 내며 싸우고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과정을, 주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을 보며 탈핵운동 진영조차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주민들을 규정짓고 바라보고, 함부로 피해자의 틀에 가두며 대상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원전마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이야기』라는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호는 <이슈> 원고도 기획특집의 연장선에서 있다. 한살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치열하면서도 현장감 있는 문제의식을 원고에 담았다. 누군가는 저항하고 다른 누군가는 대안을 만들지만, 서로 단절되지 않고 긴밀하고 풍부하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에 무력함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살림일 것이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기본법 10년,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는 제목 그대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각 분야 협동조합 운동들의 흐름과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협동조합운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설립 20주년을 맞으면서 연구소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있다. 오래 몸담으셨던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혜를 나누어 달라 부탁드렸고, 특별 좌담회 “전환의 시대, 모심과살림의 지혜를 듣는다”에 그 내용을 담았다. 2022년 5월, 생명운동의 싹을 틔워 주셨던 큰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등지셨다. 마지막 글에서는 고 김지하 선생님을 추모하며 ‘생명’과 ‘생명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조미성 (모심과살림지 편집부)



기획특집



‘어떤’ 에너지전환?

- ① 좌담 _ 에너지전환운동의 현장
- ② 기로에 선 에너지전환
- ③ 재생에너지가 대안사회의 에너지가 되려면
- ④ 민영화와 노동배제가 아닌 체제 변화
- ⑤ 농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⑥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좌담]

“에너지전환 운동의 현장”

참석자: **김영란**(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신근정(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여형범(충남연구원 환경에너지연구위원),
이현석(정의당 생태본부장),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가나다순)

사 회: **임채도**(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김영란



신근정



여형범



이현석



임재민



임채도

좌담회 일시: 2022년 4월 27일

기록 및 정리: 조미성(모심과살림연구소)

에너지전환의 현장 소개

임채도 _ 저희가 모심과살림지 19호 특집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선정했습니다. 주제를 기획할 때(2월)만 해도 중요하기는 했으나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매우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여러 현장에서 에너지전환을 고민하고 활동해 오신 분들을 모시고 에너지전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새로운 운동환경에서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시민사회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 현장의 문제와 운동 방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각 단체들에서 어떤 실천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란 _ 저는 현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로 있습니다. 최근까지 2년 정도 광명지역에너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에너지전환을 하는데 지자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각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데 더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전국에 에너지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세워지고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크지 않은데,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근정 _ 저는 녹색연합에서 일하면서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이하 지역네트워크)를 창립했고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역네트워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며 에너지전환 활동을 하는 지역 단위들이 모여서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중앙에서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역 에너지계획과 정합성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니다. 시민사회가 지역의 풀뿌리 사업을 진행할 때 연대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은 고립되어 있고 중앙의 이슈와는 차이가 큼니다. 출범 당시에는 YMCA,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색연합처럼 큰 단체들이 중심이었

는데, 지금은 지역 단체들이 중심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전남권, 대구 울산 경남 등 12곳에 지역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너지체계를 지역단위의 권한과 책임으로 만들고, 그것을 견인하는 시민 단위를 육성 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광역 단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기초단위에 지역에너지센터가 만들어지며 민간 거버넌스로 운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을 지방선거 의제로 삼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정책질의서와 제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형범 _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외 15개 시군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담당하면서, 에코뮤지엄, 국제개발협력, 에너지전환, 시민과학, 정의로운 전환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의뢰한 연구로는 ‘충남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타당성’ 연구, ‘충남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 ‘충남 기후변화 대책 수립’ 연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 충남연구원 내에 에너지전환 연구회를 만들었고 그때 만난 충남지역 에너지전환 그룹들과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정의·환경정의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시민사회나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스무 가지 목소리>와 같은 대중적인 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현석 _ 저는 시민단체에서 탈핵·에너지, 기후문제 문제를 다루었고, 2019년부터는 정의당에서 생태 에너지 환경문제를 총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019년 그린뉴딜 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그린뉴

1) 원자력이나 석탄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인데 비해,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가 가능함. (이하 각주들은 모두 편집자 주)

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제1과제로 한다는 선거 강령도 채택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보면 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분들뿐 아니라 유권자들인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확정되었고 당장 탄소중립법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탈석탄과 탈핵 관련해서는 새 정권에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정책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민 _ 저는 2018년 출범한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경험하고 나서, 전문가·시민단체·기관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대로 잘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생각지 못했던 지역에서의 갈등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기대응의 방법론과 언어, 전략에 있어 지역, 중앙, 시민단체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위원회’를 만들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어떤 대화와 소통 방식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해결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운동의 걸림돌과 과제

임채도 _ 작년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고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적어도 60%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해야 할 과제에 비하면 에너지전환 과정이 정말 더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해요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별 단체의 문제든, 운동 전체 차원의 문제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지요.

임재민 _ 지역주민들은 에너지전환의 명분과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처럼 재생에너지도 처음 설치할 때는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외지인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면서 느끼는 박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사업자들로부터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태양광에서 연금 나와요.”라고 했지만, 태양광 업자가 수익을 다 가져가고 농민들은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들 때문에 신뢰가 낮아졌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²가 생겼는데 이것은 실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만들어진 독특한 규제 체계입니다. 이격거리, 안전진단과 같은 규제가 많아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어려워지고, 개별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역주민이 아닌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국에 10만 개에 육박하는 발전단지가 만들어질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부동산 등 여러 문제와 엮이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일부에서는 혐오시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배제되고 지자체는 제대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갈등을 본질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더

2)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주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함. 지방차지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곳도 있고, 100m~1,000m까지 다양하게 정하고 조례로 제정된 곳도 있음.

어렵게 만들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근정 _ 에너지전환의 기본적인 책임과 권한의 주체가 지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종합적인 비전이 설정되고 여기서 지자체와 의회, 시민들의 역할이 정해지고, 주민들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얻어갈지 스스로 선택할 때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단위 계획이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에너지생산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단위 에너지계획은 주민들이 시민참여형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수용하는 시민사회나 협동조합이 있으면 좀 더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더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격거리 문제도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고 지역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격거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저희도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란 _ 저는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만들어 자립시키는 데만 8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당시 서울시에서 정책적 지원을 했음에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제도나 정책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 어렵고 갈등이 많습니다. 광명시에서도 공공부지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다 설치한다는 전제 하에 10메가와트 이상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실제로는 1.5메가와트 정도만 설치가 가능했어요.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었고 예외를 너무 많이 두다 보니 안되는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역에너지 계획이 있어도 정작 시민들에게 계획과 목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요. 지역에너지센터도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위상과 산자부에서 보는 위상이 다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생겨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설립할 예

정인데 그에 대한 위상도 다 달라요. 이상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중기 단기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채도 _ 여러 현장에서의 발견되는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에너지전환 기후위기와 관련한 수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거의 유일하게 공약집 첫머리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선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현석 _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당 입장에서는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고 노동자와 같이 분명한 당사자 그룹이 있죠. 소위 정치에서 ‘호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시민은 누구인가요? 기후문제에 누가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들은 기후문제에 투표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진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정의당에서는 공약 첫머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면 계속 이야기할 근거는 부족해집니다. 개인적인 소명으로 활동하는 것이지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만큼 분명하게 기후정의나 탄소중립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RE100이 큰 유행이 있었어요. 윤석열 당선자 선거자료집에도 탄소중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대책이 탈원전 백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시민운동 진영은 아직도 “기후위기 심각해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기후위기를 해결할지, 어떤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지, 기후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의 문제들이 일반적인 한국 사회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대농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태양광을 바라봅니다. 한 예로 전농 농민들이 태양광 패널로 칼(춘향전에 나오는 머리에 씌우는 형벌도구)을 차고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했어요. 임대농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땅 주인이 수익을 위해 태양광 업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농촌사회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농촌에서는 외지 사람들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위기 의식이 있어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와 모순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같이 접근하지 않으면 적절한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민 _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밖에 안 되는데도 재생에너지발전소가 10만 개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전환 현장이 생길 것이고, 그 현장의 모습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협동조합, 일반시민, 기업 중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다를 텐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에 필요한 속도가 있잖아요. 당장 “몇 년 내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령화 등 여러 문제로 농촌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한 곳이 많은데,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해 농민들이 떠나고 공동체가 더 빠르게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기존 지역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이자 시작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에너지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가 더 끈끈해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앙단위의 목표와 논의들만 있지, 지역에서의 경험과 이야기가 부재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만들

어야 합니다.

신근정 _ 작년에 지역네트워크가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5개 지역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 현안과 탄소중립을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와 에너지전환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이 식량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데, 농업 쪽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토론회를 거치면서 몇 가지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세 가지 원칙은 첫째, 재생에너지 확산은 농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 둘째,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도와 기술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현장의 땅이 용도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농지 중심으로, 농지가 전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들이 관철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농업계의 우려가 줄어들 것 같아요. 농민들은 처음에는 에너지전환이 나의 생존권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에너지전환에 동의하니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질 좋은 정보가 제공되고, 제대로 된 원칙이 있고, 손쉽게 도움 받는 기관이 있으면 지역사회 갈등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지역에 주체가 생기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임채도 _ 에너지전환과 우리 농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지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자들도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농업과 에너지전환을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문제들과 지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대안들이 많

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화석연료가 빠져나간 곳을 원전이 메꾸어야 한다는 ‘원전대안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린택소노미³에 기대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반동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큼니다.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현석 _ 가랑비에 옷이 젖다가 떠내려가 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 전에는 탈원전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번 당선인 진영에서조차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SMR⁴을 기술적으로는 이야기하나 현실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경향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오히려 탈원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되었고, 탈원전 이슈가 양당의 진영 논리에 맞물리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정권이 탈핵을 선언할 때 제대로 탈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최종적으로 탈핵을 선언한 것이고요. 그래서 탈핵의 저변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진보라는 분들 중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보수 진보를 넘어 탈핵을 고민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형범 _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그 부지에 SMR을 설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시민단체나 의회, 행정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발전소가 들어올 때도 지역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폐쇄 후에도 지역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발전공기업들이 소유한 발전

3) Green Taxonomy는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를 뜻한다. EU는 2020년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를 만들고 2022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확정안에는 원전을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했으나,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로, 2021년 공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제외되었으나, 2022년 5월 발간된 새정부의 국정이행과제에 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 소형모듈원전(SMR)은 대형 원전 10~20분의 1 이하 크기인 전기출력 100~300MWe(메가와트)급 이하의 원전을 말한다.

소의 부지 용도는 전적으로 발전공기업이 결정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문화·연구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뒷받침할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노력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임채도 _ 시민사회 주도권이 낮은 상태에서 예전 새마을운동 하듯 목표를 정해 놓고 돌격하면, 설사 탄소중립이 달성되더라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민참여의 틀을 만들어갈 것인지, 에너지전환 운동의 돌파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그런 희망이 보입니까?

김영란 _ 광명에서 지역에너지센터를 2년 하면서 보니, 시민들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문명과 자본주의와 과소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 의지와 마음에 비해,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이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어디서 만나서 어떤 틀로 거버넌스를 할 것인가, 아직 그 경험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에 과감하지도 못합니다. 지역에너지센터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었는데, 행정·회계처리하는 다 기존 시스템으로 운영하니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지역네트워크 움직임들은 급속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방향을 돌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더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신근정 _ 경기도는 시민참여 조례안과 탄소중립 주민발의안을 만들기로 했고, 서울도 동북5구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안 주민조례를 만들거나 주민들이

의회와 협력하는 식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4년 전 지역네트워크가 출범할 때만 해도 중앙 단위 운동이었는데 이제 광역단위 에너지운동들이 많이 생겼고, 얼마 전에는 녹색전환연구소가 17개 광역지역을 다니면서 토론회를 했어요. 이렇게 운동이 지역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저변이 넓어지는 속도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무역장벽이 내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집 베란다 태양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간 점검 지점들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서 녹색전환 10대 과제를 뽑는 공론장을 열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나 재생에너지 설치 과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교통, 건물, 지역 순환 경제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들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총론에만 관심이 있고 각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각론을 이야기하는 전문그룹이나 퍼실리테이터(촉진자)도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서 녹색교통이나 녹색건축을 주제로 토론했다면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서울에서 불러야 해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 에너지계획을 세울 때도 각론을 아예 빼거나 원론적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역을 보는 사람들과 지역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총론적으로 제도화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시민들의 저변은 넓어지고 있고, 각 지역 단위별로 주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중앙의 단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채도 _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사이의 역할분담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자료에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매뉴얼을 잘 만들

고 활동가들은 지역 거버넌스에 집중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역에서 이 운동을 한 발짝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형범 _ 지자체 입장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큰 사업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어색하더라도 시민사회와 협치를 했지만, 이제는 굳이 어색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후의 정부에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관련된 지역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역 주체를 만들고 많이 만나야 한다는 신근정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여력이 없어 역량이 쉽게 갖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각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현장의 정책 조합을 구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자 그룹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소하거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연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개별현장에 개입해서 연구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대학이나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과 같은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연구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더 밀착한 형태로 운영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도 2-3년 전부터 시민과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 운동 진영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주체들이 더 확장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인권 등 그 주제를 에너지뿐 아니라 연관 영역으로 넓히고 사례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임재민 _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전환이 나갈 방향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 알지만, 왜 해결이 어려울까요? 저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운동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을 많이 뵈웁니다. 소수의 운동가들이 신체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지치고, 그분들에게는 정보와 자료가 많이 쌓이지만 시민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최근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관련 영상이나 강의도 많아졌는데, 그런 자리들이 의제를 다양화하기도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르고, 너무 많으니까 실천하기도 전에 지치는 상황도 생깁니다. 시민사회 안에서 각 단체의 역량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통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할 것들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시민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란 _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생각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합니다. 초기에 에너지계획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후 실행할 때는 시민들에게 권한이 없고 그냥 자문기관이 되어버립니다. 지자체가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지역에너지 센터도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점점 행정조직과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가와 정치가들 사이에 사전에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운동 진영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에너지전환 의제를 대부분 가져갔지만 잘 실현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의제만 뺏기고 그에 대한 대응이나 비판, 감시도 어설프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한 성과도 있었지만, 방향이 다르게 가거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로감마저 발

생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비판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개방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 평가와 새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운동의 과제

임채도 _ 지금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큰 정세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하에서 그린뉴딜, 탄소중립위원회 등 여러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있었는데,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부분과 한계에 대한 지적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서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현석 _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의 첫발을 디딘 것은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탄소중립·기후위기·그린뉴딜·탈핵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회자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전 정부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다 뒤집힐 정도로 법률이나 제도 등이 매우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토대뿐 아니라 인적, 산업적인 부분과 국민 여론 등 다양한 토대를 만들어야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뒤로 돌릴 것이냐, 하면 탈원전 같은 것은 뒤로 돌릴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환경단체나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새 정부 공약 중에 ‘2035년도 내연차 등록금지’가 있어요.⁵ 이것은 정의당이 이야기한 ‘2030년 내연차 판매금지’보다 더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 공약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항의하는 성명서 한 줄 안 썼습니다. 어찌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반대되는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환 과정,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생길 여

5) 새정부 국정이행과제(2022년 5월 발간)에는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수정되어 있다.

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담론 수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서 더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속도와는 차원이 다른 자본의 속도를, 시민사회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길 여러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근정 _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야 하고, 그것은 난방, 교통 등 생활 전반에 해당합니다. 수요를 일단 감축해야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음에도 재계와 야당을 달래야 하니까, 총론은 탄소중립이라고 말하면서 각론에서는 부동산 짓고 경유차 공장 준공시키는 식으로 다르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탄소중립의 방향이 정확하게 숙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수요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강동구는 온실가스 감축의 80%를 수소발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교통에서도 자동차 줄이고 도로를 개편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는 쪽 빠고 마치 전기차로 바꾸기만 하면 탄소중립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한계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도 비슷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10년 동안 ‘원전하나줄이기’ 하면서 하드웨어를 거의 만들지 못했어요.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정성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정량적인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집수리하고 도로를 바꾸면 마치 회색 경제인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10년이 지나고 보니, 폭염과 한파가 오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이 누구나 동의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하고자 했지만, 실제 거의 성과는 없었던 거죠. 정부뿐 아니라 시민운

동진영도 상상력이 부족하고, 그러한 상상력 부족으로 디테일한 정책 설계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자력이나 CCUS⁶만 이야기할 때 시민사회가 맞받아칠 상상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결국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한계는 첫째 수요 감축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 것, 둘째 에너지효율화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도록 투자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한 것도 여전히 한계입니다.

임재민 _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덧붙이자면 성과를 포장하다 보니 실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회피했고, 갈등을 회피하다 보니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인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비난을 피하려 하다 보니, 사실상 에너지 수요 감축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상력을 위한 공간과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만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얼마 전 삼성, 롯데, SK 같은 대기업들이 인수위에 RE100할 거라고 서신을 보냈어요. 기업이 전기자동차로 바뀌야 한다고 판단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시민사회가 그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명분이 꼬입니다. 보수정권이 탄소중립 시기를 당겨오면서 원전을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견제하면서 지역과 농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긴장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빠르고 빠른 모델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사례를 한

6)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국에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만 한다’는 프레임에 묶이면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되더라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나 잘한 점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전환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합의점과 계기는 만든 것 같아요. 그 합의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실행수단은 만들지 못했지만요.

김영란 _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를 제도권에 확산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기대도 많이 받았죠. 특히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면서 시민에너지발전비율이 15% 정도 공식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행된 것은 0.1% 수준입니다. 당위와 목표는 설정했지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을 전혀 만들지 못했어요. 말로는 시민참여라고 하지만, 결국 사업자들이 가져가서 갈등만 높이고 보수가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도 면에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칙이 나타나고 갈등이 커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형범 _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도전하지 않았고 논쟁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려면 경로 변화를 거부하는 ‘거부점’이 무엇인지, 변화를 확산하는 ‘지레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탄소세와 같이 거부점과 지레점으로 작동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탄소중립 그린뉴딜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실제로는 성장담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변화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린뉴딜이 큰 사업 같지만 지역에는 이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조, 2조씩 지원받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전환과 결합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진영에서 사회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지, 실패해서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안에 온실가스를 충분히 감축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분명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을 때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사회시스템을 배타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뀔 것인가, 용인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로까지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지역으로

임채도 _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의 첫발을 떤데도 디테일이 약했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점은 공통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사회 안에서도 내부의 관점과 시각들을 정리하고, 공통의 실천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현석 _ 새 정부 5년이 어떻게 갈지, 분명한 것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전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큰 담론의 싸움이였다면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지역까지 내려가서 싸워야 할 텐데, 우리의 준비는 그에 비해 늦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고

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도 _ 가장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반성도 가장 많이 하시네요.(웃음)

신근정 _ 우리 역량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 안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숙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해 싸우는 단체, 대안을 만드는 단체들이 각각의 운동 영역을 서로 안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의 문제 중 함께 풀어야 할 것은 중앙으로 가져오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만들고 언론이 필요할 때는 언론을 활용하고, 교육도 중구난방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배분하면 더 힘을 모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새 정부가 ‘핵’이라고 하는 싸움판을 벌였는데, 이게 막 싹트고 있는 풀뿌리운동 역량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충남은 SMR 들어오면 완전히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대안을 고민하던 분들이 갈등에 대응하느라 어마어마한 일거리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돼요. 역할 분담을 잘하면 지역에서 대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부담을 덜고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야겠지요?(웃음)

여형범 _ 최근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이나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자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관심은 반갑지만 진지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 가서, 지역의 문제를 풀고 지역사회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지역도 삶이 현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역으로 와서 활동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 _ 지난 두 달 동안 뉴스는 보지 않고 클래식만 들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도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이 못하는 걸 지적하는 일

은 잘 해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빠진 부분이 뭐였는지 점검하는 일은 덜 한 것 같아요. 자족하고 안주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오늘 좌담회를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 닷할 때가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더 치밀하게 나누고 연대는 더 잘해야 하고 현장에서는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재민 _ 무엇인가 비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일이 되도록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도 필요하고, 디테일도 필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그 일을 할 사람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합니다. 단체들 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속도가 다르겠지만, 각자의 마음과 방법을 존중하면서 함께 하면 지치지 않고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많이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채도 _ 오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농업·먹거리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발전량 기준으로 6%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비중이 전체 농업의 약 6% 정도예요. 친환경 먹거리는 흔해졌지만 그 중 공동체에 기반해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은 드물죠.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영역이 일반화될 것인데, 공동체에 기반한 에너지 운동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실 텐데 긴 시간 토론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곧 다시 뵙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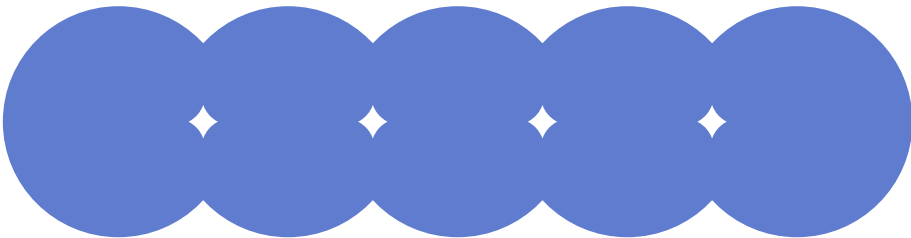
기रो에 선 에너지전환



홍덕화(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일하며 에너지전환을 주춧돌 삼아 “전환”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체제전환이 던지는 질문들을 곱씹으며 전환 정치와 탈성장 연구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주요 연구로 “커먼즈로 전환을 상상하기”, “전환 정치의 이정표 그리기: 생태적 현대화와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의 분기점과 교차점”,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등이 있다.

✉ deokhwa.hong@gmail.com



기후위기, 전환 경로를 묻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인도는 5월부터 50℃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들이닥친 때 이른 폭염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국내외 기사를 종합해보면, 올여름 북반구 국가들은 고통스러운 여름을 피할 수 없을 듯싶다. 에어컨은 커녕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는 곳에 사는 이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덩달아 전력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기록적인 폭염이 어느새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3월 초 울진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과 같다. 무서운 기세로 숲을 태우던 산불은 민가를 지나 핵발전소 앞까지 들이닥쳤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석탄화력발전소, LNG 기지 등 에너지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울진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 “에너지 벨트”가 무너졌으면 파급효과는 동해안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 산불이 초고압송전탑 주위를 에워싸면서 전력망이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끊기는 일이 수십 차례 발생했지만, 다행히 순차적으로 일어나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¹ 앞으로 산불에 대비해 에너지시설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되겠지만 기후위기가 가속하면서 예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지표는 이미 차고 넘친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포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펴낸 제6차 보고서가 가까운 예다. 제3 실무그룹이 5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의 완화”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사항부터 몇 가지 짚어보자.² 첫

1) 이상복, 2022. “울진 산불 때 한반도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 『이투뉴스』 2022.3.28.

2) 자세한 내용은 IPCC Working Group 3. 2022.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https://www.ipcc.ch/report/ar6/wg3/> 참고할 것. 제3실무그룹 보고서의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이 길잡이가 된다.

김현우, 2022. “기후변화 요약본에는 담기지 않은 탈성장: IPCC 보고서와 성장의 한계.” 『프레시안』 2022.4.11.

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하지 않고 1.5°C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계획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기온은 1.5°C를 훌쩍 넘긴 2.4°C ~ 2.7°C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5°C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 둘째, 핵발전,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저렴하지 않을뿐더러 감축 잠재량도 많지 않다.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적 측면이나 감축 잠재량에 있어 핵발전, 탄소 포집 및 저장보다 훨씬 더 유용한 감축 수단이다. 셋째,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산업구조, 생활양식 등을 포괄적으로 바꾼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 항공을 철도로 대체하고 장거리 비행과 교통량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감축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IPCC 보고서가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이야기하는 일이 대단히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여겨볼 곳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수요 감축이다.

“기후변화의 완화” 보고서보다 먼저 발표된 제2실무그룹 보고서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그리고 취약성”은 사회구조적 변화 없이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지 되묻는다. 그간 IPCC 보고서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쟁점이 제2실무그룹 보고서 곳곳에 등장했다.³ 정의(justice), 평등(equality), 형평성(equity)과 더불어 식민주의, 자본주의, 권력관계 등이 기후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훑어보면, 탈성장과 맞닿아 있는 주장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3) IPCC Working Group 2.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https://www.ipcc.ch/report/ar6/wg2/>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민정희. 2022. “IPCC 보고서를 통해서 본,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 활동가학습플랫폼 판(<https://npo-pan.kr/>).

IPCC 실무그룹 보고서가 시사하는바,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는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폭넓게 바뀌야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반복되는 기후위기 경고는 체제 차원의 변화 없이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지 되묻고 있다.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우회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체제 전환(system change)은 기후정의 운동의 구호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할 쟁점으로 변해가고 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에너지전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체제 전환은 반복적으로 소환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전환 운동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전환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자.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은 다시 탈핵으로

2020년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전반부를 이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2022년 새롭게 들어섰다.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전장을 핵발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거나 탈석탄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선언이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물러설 조짐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절성이 계속 논란거리로 남겠지만 당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곳은 감축 수단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를 보면,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 “NDC 달성 방안 수정”, “에너지믹스 조정”, “속도와 실현가능성 우려 해소”가 반복해서 등장한다.⁴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 적극 활용”, “무탄소 전원 원전 활용”이다.

이미 현안으로 등극한 사안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4)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3>를 참고.

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 상향”,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 조기 창출”, “계속 운전 신청기간의 5-10년 전으로 변경” 등이 국정 과제의 추진 방향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마지노선이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무너진 것이다. 물론 정부와 핵산업계가 기대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법적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난한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핵발전 정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기반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선언 이후 핵발전소 수출,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 지원 등 탈핵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여당 안팎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대선 국면에서는 “감원전”으로까지 후퇴했다. 초기의 기대와 달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역시 큰 진척이 없었다. 핵발전 정책의 흐름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소형모듈형원전 노형 개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연구 개발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이은 것이다.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역시 2000년대부터 유사한 시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새롭지 않다.

탈핵운동이 확인하게 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인 핵발전 축소 정책조차 지지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핵산업계와 보수 진영의 저항은 드셨고, 민주당 진영의 입장은 이중적이고 모호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는 핵발전 정책의 일시적인 지연·교착 국면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빛바랜 탈핵 선언은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운동의 현실을 보여준다. 보수 정부로부터 탈핵 정책을 끌어낼 때 탈핵으로 가는 길이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탈-탈핵 정책이 이제 막 시작점을 지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시작으로 각종 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곳이 당분간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투의 최전선이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탈핵운동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까닭이다.

핵발전 정책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⁵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탄소중립 선언, 한국판 뉴딜로 이어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은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 목표가 법제화되고,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인지예산제도,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등이 관련 법과 정책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탄소흡수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논쟁적인 사안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탈석탄 시기, 내연기관차 규제 등 전환 속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다툼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전환 정치가 전환의 속도나 수단을 둘러싼 경합을 벗어나는 일이 점점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잇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일이 늘 것이기 때문이다.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은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5) 문재인 정부 시기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흐름은 다음을 참고할 것.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2022.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미래3 제21권: 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1>

전환 경로, 피할 수 없는 쟁점

지방선거 기간 “전기 민영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단서를 제공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이 아마도 전기 민영화 논란을 촉발한 지점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미묘했다. 이재명, 송영길 등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이 전기 민영화를 비판하는 데 맞서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의원이 전력시장 개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⁶ 199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역사가 반영된 전기 민영화 논란은 전환 경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기 민영화 반대는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한다. 20년 넘게 민영화 반대는 저렴한 전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수사로 쓰였다. 문제는 저렴한 전기가 환경비용을 외부화한 결과라는 점이다. 또한 값싼 전기 요금은 전력 수요 관리의 유인을 낮춘다. 다시 말해, 값싼 전기 소비는 환경오염과 피해의 전가, 낭비적 소비를 대가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운동진영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다. 에너지전환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뿐더러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비용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출 책임과 지급 역량에 따라 비용 부담을 차등화하는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회환경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기요금 현실화는 어디까지나 논의의 출발점일 따름이다. 전력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효과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전의 적자가 쟁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랜 기간 한국은 강력한 판매가격 규제를 바탕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왔다. 문제는 연료비가 급등할 경우 한전이 감수해야 하는 적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연탄, LNG 가격 상승이 장기화

6) 박다솔. 2022.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전력 민영화 동조 논란.” 『참세상』 2022.4.29.

될 경우 한전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긴 논란 끝에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되어 국제유가와 유연탄, LNG 등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정부 부처의 반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 사이 국제유가와 유연탄,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영업 손실이 급격하게 늘었다.

다만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한전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 이익은 치솟고 있다. 한전이 발전공기업과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이익과 손실을 재배분하는 것과 달리 민간 발전사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상승에 따른 차액을 추가 이익으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주요 민간 발전사의 영업 이익이 이미 작년 한 해 영업 이익을 훌쩍 넘겼다는 소식이 들리는 이유다.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가주의 요금 원칙”은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낸다. 민간 발전사의 초과 이익을 억제하는 수단이 없는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민간 발전사가 초과 이익을 얻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현실화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전력산업구조에 따라 전환 비용으로 부담한 전기요금이 배분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민영화의 의미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력공기업의 소유권 매각으로 “전기 민영화”를 좁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영화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공기업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의 진입을 쉽게 만들어 전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민영화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지분 구조상 공기업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시장 논리가 강화되고 민간 기업과 민간 자본의 산업 지배력이 높아져도 공기업의 소유권을 매각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7) 윤종성. 2022. “한전은 7조 8000억 적자인데, 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잔치.” 『이데일리』 2022.5.20.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우회적 민영화’의 길을 걸어왔다. 민간 대기업 소유의 LNG, 석탄화력발전이 늘면서 민자 발전의 비율은 어느새 30% 안팎에 이르렀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전력공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가 허용되면서 전력 판매 시장의 빚장도 열렸다. 전력판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다. 전력거래를 매개로 한 신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중개 거래나 수요 관리가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전기요금 인상이다. 한전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경우 기업 PPA의 유인은 떨어지고 중개 거래나 수요 관리 역시 탄력을 받기 어렵다. 이른바 체리피킹의 문제도 남아있다. 기업 PPA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이나 여기에 함축된 다른 의미는 기업 PPA를 통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특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핵발전과 화석연료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재생에너지에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복잡한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전환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배분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즈음에서 재공영화(remunicipalization)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한전 독점 해체 요구가 환경운동진영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발전소, 송전탑 등 에너지시설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한전의 문제점들은 한전 독점 해체를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 아울러 전력공기업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누구나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에너지 민주주의로 사고하는 움직임이 싹텄다. 그러나 전 세계 사례를 놓고 보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 민간 대기업에 의한 (재)독과점화가 진행되는 일이 잦았다. 분산형 에너지기술 자체가 누구나 전기를 생산하는 세상을 열어주지는 않았다. 또한 민영화

진행되면서 가격 인상, 노동조건 악화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공기업보다 민간 기업을 규제하기 힘들다는 점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재공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재공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로 확장된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의 확산은 대기업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가운데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차등화 되어 있지만, 대기업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면서 재생에너지 보조금 역시 이들에게 몰리고 있다.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주도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참여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필수적이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혜택 역시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먼저 흘러간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볼 필요가 생긴다. 달리 말하면, 태양과 바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과 같다면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 낸 이익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투자하지 못한 동료 시민은 향유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질문이 제기된다.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도마 위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펴낸 국정백서에 따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2020년부터 빠르게 늘어 2021년 138개소에서 추진되었다. 주민 참여 사업의 비율은 신규 건설 태양광 설비 용량 기준 0.1%(2018년)에서 11.5%(2021년)로 증가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비교한다면 주민 참여 사업은 반길 만한 일이다.⁸ 그러나 지금의 사업 방식을 최선이

8)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2022.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미래3 제2권: 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1>

라 말하긴 어렵다. 현재 주민 참여는 지분 투자와 이익 공유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즉 주민 참여는 사업 이익의 일부를 배분함으로써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잦다. 이와 같은 이익 배당 모델을 시민 참여, 나아가 에너지 민주주의라 치켜세우는 것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납작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⁹⁾

나아가 주민 투자 참여와 이익 공유 모델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뒤집어 질문하면, 주민 투자와 이익 공유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속에 담긴 환경 불평등과 희생의 전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현실로 잠시 눈을 돌려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시설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확산하고 있지 않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태양광발전이 집중된 지역은 전남, 전북으로 전국의 40% 이상이 이 지역에 있다.¹⁰⁾ 그 뒤를 잇는 곳은 충남, 경북, 강원이다. 경제성이 높은 곳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밀집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에너지 전환의 이름 아래 환경부정의(不正義)가 재생산된다.

투자자 모델에 기초한 주민 참여마저 쉽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외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곳이 많다. 에너지협동조합, 지역에너지센터, 지방정부를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의 난관이 현실의 복잡함을 가릴 수는 없다. 지역에너지전환은 중요한 출발점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일례로 더 큰 전력망과의 연계없이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전력산업 자유화

9) 에너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홍덕화. 2019.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과 에너지 커먼즈의 가능성.” 『ECO』 23(1): 75-105.

10) 송광섭. 2022. “기업 적은 호남에 태양광 왕창, 전기 남아 발전소 멈출 판.” 『매일경제』 2022.4.28.

가 공동체에너지(community energy)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우회적 민영화로 가는 길과 중첩되는 현상은 지역에너지 옹호가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지역에너지전환을 막연히 긍정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추진되는 맥락과 조건을 따져 묻고 “어떤”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역에너지센터,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상황은 지역에너지전환의 모델을 더 세밀하게 따져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공영화로 돌아가면, 지역에너지전환과 공기업, 공공부문의 관계는 아직 모호한 게 사실이다. 현재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은 민간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는 관료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한전 독점 해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공공부문과 시민 참여에 기초한 모델을 결합한 전환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나아가 사회운동의 현실의 고려할 때, 공공(公共) 협력은 상당히 비좁은 길임이 분명하다. 공공협력이 에너지 전환이 마주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답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가 확산하면서 소규모 전력 거래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공공협력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는 거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에너지전환의 토대가 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 반대편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오랜 비판에 기대어 기존 모델로 돌아가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공공협력을 내건 다른 길은 아직 막연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새로운 과제들이 쏟아지고 신속한 전환을 요구받는 것에 비해 공공협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의 난점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근거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의 가치가 재조명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환적 공공성에 기초한 전환 경로를 찾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델이 없기에 막

막할 수밖에 없지만, 전환 운동의 과제로 반복적으로 소환될 것이다.¹¹⁾

체제 전환으로 가는 길 찾기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나아갈수록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벌어진다. 두 정부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겠지만 이를 관통하는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수용하되 탄소중립과 충돌하는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탈핵에서 “감원전”, “탈원전 폐기”로 이동해가는 것을 더하면 한국 사회의 지배적 흐름이 그려진다.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토건사업과 녹색성장, 탄소중립은 대립하기보다 공존한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내에서도 토건사업과 탄소중립은 충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것에 비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발전 정책의 차이는 모호할 때가 많다. 우회적 민영화의 역사를 고려하면 “전기 민영화”를 놓고 다투는 것이 다소 뜬금없게 느껴질 정도다. 어쩌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명칭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이 대립하지 않음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 4대강 사업과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제외하면 녹색 성장과 탄소중립은 엇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시장을 겨냥한 산업육성, 토건사업, 저렴한 인프라의 결합은 선별적인 녹색성장이 한국의 지배적인 전환 경로로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탄소중립·녹색 성장에 함축된바, 전환은 이미 자본과 국가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탄소중립은 물론이거니와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마저 자본과 국가의 언어로 쓰이고 있는 만큼 뭉툭하게 해석할 경우 상황을 오인하기에 십상이다.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담론과 사회운동의 필요성은 점점

11) 공공협력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 홍덕화. 2021.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협력의 방향 탐색: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44: 59-96.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불평등을 문제 삼으면서 해결책을 배출권 거래제로 한정할 경우 과시적 소비와 제국적 생활양식이 비용 지급의 문제로 뭉뚱해진다. 돈으로 오염할 권리를 사는 것 아니냐는 오래된 비판이 당연한 문제로 되 돌아온다. 나아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예산 이내로 총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와 같은 탄소비용 부과와 배출량 할당이 현실의 권력 관계 속에서 가능한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 수단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지 않고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면 체제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차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는 원인, 실질적인 감축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배출 제로의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체제 전환은 질문을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권위 있지만 동시에 줄곧 보수적인 해법을 내놓은 IPCC 보고서마저 자본주의, 식민주의, 권력 관계를 겨냥하기 시작한 만큼 체제 전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자원 채굴-생산-수출-소비-폐기의 지구적 연쇄를 재편하고 제국적 생활양식 대신 탈성장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몽상처럼 취급되던 주장들이 현실적인 요구로 분출하는 일도 늘 것이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현실을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는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¹²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3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 중 첫 번째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그러나 질문을 “1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로 바꿀 경우 기후변화는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에 밀려 세 번째 과제로 꼽혔다. 아예 “1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로 질문을 바꾸면 기후변화는 8가지 선택지 중 7위

12) 윤지로. 2022. “먹고사니즘에 밀려, 불타는 지구 여전히 미래세대 몫으로.” 『세계일보』 2022.5.23.

로 내려앉았고, 경제성장이 압도적으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후보 선택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환경 공약을 후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채 3%가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환 정책, 나아가 전환 운동은 녹색성장의 유혹에 쉽게 휘말린다. 전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큼 매혹적인 선택지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탈성장론자들이 강조하듯이, 녹색성장을 주창하는 이들이 가정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부분적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역사적 추세 자료에 비춰볼 때, 자본주의의 성장 압력을 물리치고 탈동조화가 전면화될 가능성은 없다.¹³ 녹색성장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 가장 신화적인 이야기일지 모른다.

신화를 대체할 이야기를 써가는 것은 전환 운동의 몫이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30년”과 “1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부터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선별적 녹색성장과 연동되어 있고, 성장주의의 역사·제도적 조건을 파헤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체제에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생산의 저렴화는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즉 수출주도 성장은 저렴한 노동, 무상 돌봄과 저복지, 저렴한 인프라를 조건으로 했다. 이와 같은 재생산의 저렴화를 감내하게 만든 것은 고수출-고성장-고용 확대의 순환이었고, 이것은 삶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생활보장체제였다. 넓게 보면, 토건사업 역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매개로서 생활보장체제의 일부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민주화, 신자유주의화를 거치며 변화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대안적인 생활보장체제는 요원했고, 고수출-고성장-고용 확대의 순환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는 허물어

13) Hickel, Jason and Giorgos Kallis. 2020. “Is Green Growth Possible?” *New Political Economy* 25(4): 469-486.

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선별적 복지가 확대되고, 토건사업과 저렴한 인프라가 지속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까. 대단히 단순화된 이야기지만 생활보장체제의 문제는 전환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체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에너지전환에서 시작하더라도 더 넓고 큰 전환 속에서 사고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전환은 기로 위에서 있다.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이 가속할수록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은 가열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에너지운동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계속 물을 것이다. 실용적 불가능주의(pragmatic impossibilism)와 급진적 현실주의(radical realism)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예고된 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⁴ 다른 한편으로 기후·에너지운동이 환경운동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마주하는 일이 늘 것이다. 에너지, 교통, 농업, 생태·환경 사이의 교류를 넘어서 생태적 전환과 젠더, 소수자, 노동운동의 교차점을 찾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환 정치의 또 다른 요소인 전환 주체 형성, 전환 동맹 구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어떤 길이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좌충우돌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크다. 체제 전환을 이정표 삼아 서로의 접점을 늘리며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무모하게 느껴지는 체제 전환이지만 대담한 변혁 없이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는다면, 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14) 홍덕화: 2021. "전환 정치의 이정표 그리기: 생태적 현대화와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의 분기점과 교차점." 『ECO』, 25(1): 131-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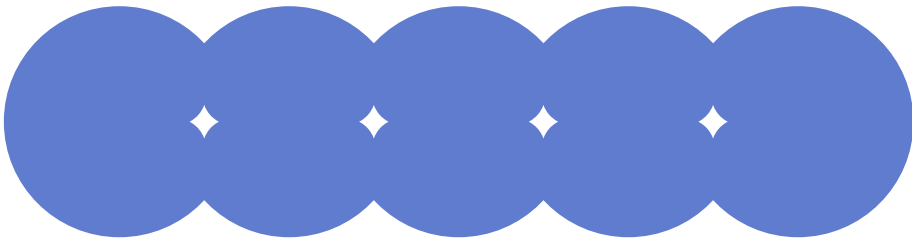
재생에너지가 대한사회의 에너지가 되려면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사회학 박사)

자연과 사회의 관계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직장인. 문학박사(환경사회학 전공). 저서로 『총으로 글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2013),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사』(2017)가 있고, 국가 및 지역의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지금은 기초지방정부 대표기구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 ecodemojeju@gmail.com



초헌법적 주민상생협약?

며칠 전, 내륙 산간의 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왔다.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 서명을 했는데도,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몰래 풍력발전 사업자와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하려 했다고 한다. 협약서 내용을 보니, 사업자가 얼마간의 돈과 현물을 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변적인 배상 또는 보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건설 및 발전단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그림자, 장비의 이동, 항공장애 등, 전자파, 저주파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사업 추진·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구두,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게재 등 그 형식을 불문)도 하여서도 아니되고”, 만약 주민 중 일부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지원받은 보상총액과 그에 대한 연 5% 이자 등을 주민들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풍력발전사업자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공사 시작 이후 수백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활동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막대한 손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민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일반시민의 처지에서 본다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말할 권리를 자본가의 수익창출을 위해 돈 몇 푼에 틀어막으려는 초헌법적인 짓거리일 뿐이고, 하물며 당사자인 주민들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연대보증 노예계약문서다.

어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을까? 복잡하게 말고 간단히 생각해보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했고,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했다. 이왕이면 대규모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전기를 소비하는 도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가가 저렴한 농어촌 지역이 사업부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목건

설공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허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모든 발전소, 송전탑 등 전력설비,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들은 최소 수십 년간 해당 공간을 점유하면서 지역의 자연과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 가만히 있을 주민이 누가 있는가? 당연히 물어보고 따져본 다음,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를 경제적 문제로 치환해버린 주민참여 REC 가중치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시민참여’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대자본 위주로 형성된 기존 에너지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반영이 부족함에 따라 에너지 시설물의 개발·운영 관련 사회적 갈등이 벌어졌고, ‘시민참여’가 에너지체제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시민참여·주민참여는 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결정, 집행과 환류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주권’이자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보급의무화제도(RPS)¹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한 ‘주민참여’는 이런 분야가 아닌 단순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인접 주민이 주식·채권 펀드 형태로 ‘투자’에 참여할 경우,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² 즉, 에너지주권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1) 2002년 시작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도입된 현행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제도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기업(한전 발전회사 및 민간발전회사)은 매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비율에 맞춰 총 전력생산량의 일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회사가 그들의 전력생산량만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시장에서 구매해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과징금을 낸다.

2)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 시 REC 가중치를 사업자에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한 제도다. 설비용량 1,0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지분비율 10% + 총사업비 2% 이상’ 또는 ‘지분비율 20% + 총사업비 4%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축소·치환해버리고 있다.

REC 가중치는 단순히 주민의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하면 좋겠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주권자로서 에너지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말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은 재산 소유 여부 및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권자로서 우리 동네에 세워지는 에너지시설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참여’는 정치적 참여가 더 중요하며, 이를 경제적 문제로만 치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올해는 RPS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된 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간 REC 가격은 안정적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0원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REC 추가 가중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 투자 이익 실현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불확실한 REC 가격에 기반하여 주민들을 투자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도 물어봐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제도³가 무엇이 부족했기에 주민참여 REC 제도를 도입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게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족하고 부정확한 정보와 사업자 불신, 주민의견 수렴부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주민참여 투자 REC 추가 가중치라면 현상파악을 피상적으로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돈으로 주민 수용성을 얻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시점부터 가동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반경 5km 이내) 주민들을 위해 발전본부별로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지지난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을 산출해 각 발전본부와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익공유인가, 자원공유인가?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대규모 투자금에 대한 장기저리대출⁴ 등은 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 또는 일종의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금이므로 시장제도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 공유’도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학에서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3가지 요소로, 원료·노동·자본을 꼽고 있고, 각 투입요소에 따른 이익을 지대·임금·이자라고 한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입되는 원료는 핵·화력발전사업과는 달리 바람과 햇빛이라는 자연적 요소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초기에는 이렇게 투입되는 자연 에너지를 ‘무상’(공짜)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리드패리티⁵ 달성 등 재생가능에너지 전기가 기존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전력판매 과정에서 가격 차이에 따른 손해는 발전사업자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서, 무상의 자연에너지원의 투입에 따른 이익은 특정 사업자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즉, 적정이윤을 제외한 차액만큼 전력거래단가를 낮춰서 재생가능에너지가 더 빨리,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익공유’는 사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갖는다.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온 자연에너지인 바람과 햇빛의 기여에 따른 편익 배분이 아니며, 오히려 사업자가 무상의 자연력에 따른 이익인 지대를 탈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2021년 지원규모는 총 370억 원으로, 대출기간 및 이자율은 20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분기별 변동금리(1.75%)다.

5)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석유·석탄 등을 쓰는 화력발전 비용과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그리드 패리티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따라서 ‘이익공유’가 아닌 ‘자원공유’가 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 에너지자원
에 대한 개발권을 오랫동안 자연을 벗 삼아 살아온 인접한 지역주민에게 우선으
로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하며, 주민들이 기술과 자원 측면에서 여의찮을 경
우, 그 개발순위를 보다 더 외부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반대급부인 자원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지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배되는 과도한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무상의 원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선적
접근권을 인정한다면, 차액 일부를 지역사회의 에너지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너지 자립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 문제의 구조보다는 현상을 문제 삼는 프레임

기초 지방정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주택가와 도로
등으로부터 몇백 미터의 거리를 뒤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몇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
했다.⁶ 사업자로서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
로, 이것을 소위 ‘이격거리 규제’라고 일컫고 있다.

‘규제’라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격거리 규제’라는 표
현은 기초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기초 지방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일부러 막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신설했을까? 오히려 주민 민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수세적 대응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전기사업 허가 등 에너지 관련 권한이 없는 기초정
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능동적 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시장·군수의 권한인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우회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한다.
문제의 원인을 ‘기초 지방정부의 이격거리’로만 본다면, 이는 이격거리 조례 개정

6) 2021년 10월 4일, 국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
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갖춘 지자체는 129곳이다.

이 증가한 2017년 이후의 상황, 즉,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거시적 배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⁷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역사회에 끼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진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업자들의 지역사회와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묻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기초 지방정부에 REC 가중치 인센티브를 주거나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기초 지방정부의 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없애려고 시도해오고 있다.⁸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인데, 이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또 개발행위허가의 근거 법인 도시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법 체계상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녹·녹 갈등? 에너지시설물이 진짜 녹색인가?

재생에너지는 핵/화석연료에 비해 전력생산과정에서의 방사선 누출의 우려가 없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녹색’의 성격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짜 녹색인 생태계와 비교하면 같은 녹색은 아니다. 태양광발전 패널을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의 옥상이나, 산업단지의 지붕이 아니라 농지와 초지, 산지에 설치한다면 불가피하게 하부공간의 부지정비를 위해 기존 형태와는 매우 이질적인 경관으로 바뀌게 되고, 자연생태계의 생명

7)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 수는 2014년 1곳, 2015년 4곳, 2016년 8곳, 2017년 22곳, 2018년 90곳, 2019년 122곳, 2020년 128곳으로 지속 확대됐다.<전자신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129곳…정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2021년 10월 5일. <https://www.etnews.com/20211004000024>

8) <이투데이>, “중구난방 태양광 이격거리 100m 상한 추진”, 2022년 1월 7일.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992>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육상풍력발전기도 바람을 잘 받기 위해 산의 정상부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대한 구조물을 운반하기 위한 진입도로, 발전기를 조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변 공간은 원형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운영 중에 발전기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타워를 지나칠 때마다 ‘쉬익~ 쉬익’하는 소음과 함께 햇빛에 가려지는 면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겨난다. 해상풍력발전기도 건설과정에서 부유사와 함께 발생하는 소음은 돌고래와 같은 해양동물의 서식 등 해양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킨다. 수명이 다 된 태양광 폐패널이나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산업 폐기물이고, 일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⁹

위와 같은 이유로 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녹-녹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조 녹색과 상대적 녹색을 구분 짓지 않은 것이기에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즉 “자연생태계 보전 > 재생에너지 > 핵·화력발전”이라는 순위를 일단 인정하고 사태를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농업의 출현과 시작한 인간의 문명은 본래 농지 개간에서부터 자연생태계의 인위적인 개입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그 속도와 규모가 나름대로 지속가능했던 농업사회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자연에 대한 수탈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본의 본성, 그리고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에 따른 국부유출?

오히려 에너지전환 운동이 불가피하게 재생에너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하고, 돈이 된다면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

9) 물론 그렇다고 수백 년에서 수만 년을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방사성폐기물과 비교할 정도는 안 된다. 또한 산업사회의 모든 폐기물의 독성에 비해 유독 태양광발전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일 뿐이다.

사업도 할 수 있고, 신에너지로 분류된 연료전지사업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두산 에너지(구두산중공업)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모든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가장 대표적인 재벌기업이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천지역 해상풍력 발전 사업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덴마크의 ‘오스테드’(Ørsted)는 원래 명칭이 동에너지(‘DONG: Denmark Oil & Gas’)로 이름 그대로 화석연료 회사였지만, 2022년 1월 기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량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사이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할 예정인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도 과거 이름은 스타토일(Statoil)로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기업이였다.

한편 이렇게 외국자본의 국내 재생가능에너지사업 투자는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준 맥쿼리 계열의 GIG(Green Investment Group)도 공격적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인수하고 있다.

이런 일은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 초기부터 있었던 일이다. 2006년 98MW 규모로 준공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육상풍력이었던 대관령 풍력발전(㈜강원풍력발전)의 경우, 초기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외국자본이었고, 그중 전체 지분의 30%를 투자했던 곳은 일본계 마루베니 상사였다. 당시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적용되던 때였고,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일부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금으로 차액을 지원해주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RPS 제도로 바뀌었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은 국민이 지불하는 것이기에 사업투자에 따른 이윤은 최종적으로 외국자본의 소유자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내 산업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되려면

‘탈석탄·탈원전’의 기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 지구적인 물결은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참에 그동안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기를 잠시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화의 청사진 없이 중앙정부와 외부기업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던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것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세력들은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흘리고 있다. 본격적인 상업용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최근 들어서야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또한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도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환의 원칙을 되새겨보자. 에너지원은 핵·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권리 보장, 대량생산·소비체제의 극복과 에너지 수요의 대대적인 감축,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의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 결국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절대선’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에너지체제 전환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부차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 에너지는 그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제공받는 에너지 서비스(빛, 열, 동력 등)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품위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따라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만든 전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동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만가지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몰락해 가는 농어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멈추고, 이윤추구에 대한 욕망을 정지하고, 못 생명들과 원탁에 앉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그들의 말로써 소화해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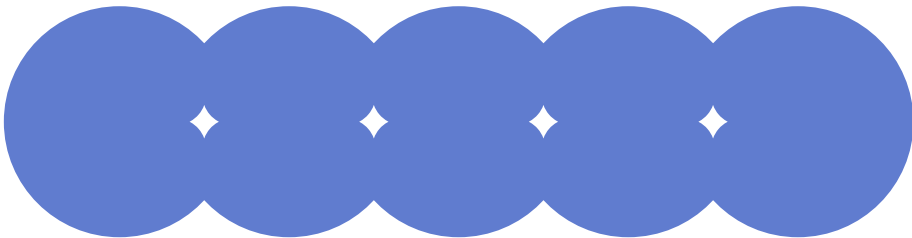
민영화와 노동배제가 아닌 체제 변화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 정의동맹>, <플랫폼C>에서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민주주의, 생태사회 주의를 열쇳말 삼아 활동한다. 쓴 책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 운동』과 『기후정의선언 2021』(공저)이 있고, 노동조합의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salaitda@gmail.com



두 가지 장면

장면1.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다. 입사 3개월 차였던 그는 야간에 혼자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용균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을 희망했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동료들과 함께 인간답게 일하고 싶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그의 죽음은 발전소 노동 현장에 만연한 위협의 외주화와 비정규직의 현실을 드러냈다.

사고 후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22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2021년 12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에 섰다. 한 노동자는 변화하지 않은 현실을 증언한다. “설비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이 숨진 그 현장 속 지옥 같은 낙탄이 쏟아지는 모습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밖에서 안 보일 뿐입니다.”¹ 그새 정권도 바뀌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면2. PPA와 전기 민영화

2021년 3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그린피스>는 “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필자가 활동하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대기업 특혜-판매시장 민영화, 기업 PPA 법안 통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른 이행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다른 기업에 전기

1) 윤상문. 2021. “여전히 하루 6명 숨져!... 故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 『MBC』 2021.12.7.

를 판매할 수 있는 PPA 제도가 허용됨으로써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에너지전환이 지상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 에너지 전환의 방법론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의 경제 구조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활용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입장이 한 편인 반면, 부정의한 경제·사회 체제를 변화시키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른 한 편에 있다. 즉,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대립하는 것이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² PPA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구멍이 생겼다는 경고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로 드러난 노동자 착취와 PPA로 불거진 전기 민영화 시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구조적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글에서 노동 착취와 민영화라는 주제어에 주목하며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탐색해 본다.

수익성 경쟁 속에 외주화 진행

올해는 에너지 민영화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다수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2022.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인수위 경제2분과)』

해 2002년 2월 25일 발전과 가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포했다. 특히 발전노조는 4월 2일까지 37일간의 파업을 벌여 민영화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민영화 반대 시민주체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민영화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철도, 물, 의료 등 다른 분야에도 추진하려던 민영화 계획이 중단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민영화는 은밀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민영화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영역이 담당하던 사업을 사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매각 외에도 시장개방, 민자사업, 민간위탁, 규제 개혁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2002년 파업으로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중단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은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등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이른바 ‘우회적 민영화’나 ‘은밀한 민영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 개혁 압력도 증가했다. 공기업에 민간기업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사회적·환경적 목표보다는 수익성 추구 중심으로 내부를 재편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기업에서 외주화와 비정규직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는 6개로 나뉜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높일수록 경영평가를 잘 받고 경영평가는 성과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전공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외주화와 비정규직 활용에 나섰다.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운전·정비는 <한국발전기술>이 입찰받아 운영 중이었다. <한국발전기술>은 2011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만들어졌으나, 2014년 12월에 남동발전이 <칼리스타캐피탈>이라는 사모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했다. 자회사를 만든 것도, 매각한 것도 정부 정책을 따른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발전·정비시장 경쟁 도입 대책’을 수립해, 2013년부터 일부 발전소 설비를 민간업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발전소 핵심 설비인 터빈이나 발전기에 대한 관리는 <한전KPS>(한전의 자회사로 공기업)가 맡고, 비핵심 설비부터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

이었다.

외주화와 경쟁 입찰은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도록 만들었다.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은 “점점 구역의 소음 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 시는 2인 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이 위험하고 비상시 컨베이어벨트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2인 1조 근무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해 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다.

발전소의 운영과 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최저가입찰제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덜 받고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줄였다. 인력을 줄이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을 줄이는 만큼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한 업무에 1명만 투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이윤을 위해 전력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착취당한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피땀도 스며들어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내몰리는 노동자들

노동자 착취 구조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 2019년 정부는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불가피한 석탄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노동자의 일자리다.

최근 밝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³ 정부는 3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24기의 LNG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데 여기서 생겨날 일자리는 3,024개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일대일 전환을 가정했을 때, 전환불가

3) 산업통상자원부 용역 보고서, 2021.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인원은 4,91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인원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쇄되는 발전소와 신설되는 발전소 간에 시간 차가 있고, 또한 지역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에 폐쇄되는 충남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대체할 LNG발전소는 경북 구미에 지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LNG발전소 전환 불가 인원 4,911명 중 정규직은 1,211명이고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협력업체 소속이 3,690명이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 외에 연관 업체나 지역 상권에서 일하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할 경우 “1만 7,467명의 취업유발 감소 인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 대상 직무전환 교육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웠고, 교육 내용도 이론 위주라 효과적이지 않았다. 보고서가 지적하지 않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전환이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경력을 쌓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전혀 다른 업무를 배워서 재취업하기는 사실상 매우 힘들다. 중년 노동자가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이전보다 낮은 임금의 더 열악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2008년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나온 까닭이다. 직업훈련과 일자리 앞선 위주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반복되었다.

이런 문제의 바탕에 노동구조가 있다. 한국의 노동구조는 ▲유연화되고 분절화된 노동시장 ▲기업별 교섭 체제 ▲노동배제 체제라는 특징이 있다.⁴ 노동자 10

4) 이창근. 2021.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적 제약과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동연구원

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노동시장에서 고용 불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다수다. 또한 한국 노동구조에서 임금과 고용 등 주요한 노동조건은 기업별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개별 기업을 넘어서는 산업적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다. 노동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대상일 수 있어도, 변화를 이끌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민영화와 노동배제에서 벗어난 대안이 필요

민영화와 노동배제 구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체제를 바꾸고 불평등을 진지하게 다루려면 우리에게 여기에서 벗어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이슈화된 민영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인수위원회>가 4월 28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포함했다. 인수위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시장 구조 확립”을 위해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화 한 것이다. 민영화가 논란이 되자 인수위는 하루 만에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한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반론은 타당한가?

2002년 민영화 반대 파업과 이어진 투쟁으로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과 천연가스 수입 산업에 민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20

년 동안 일관되게 펼쳤다. 그 결과 오늘날 발전산업의 30%가량은 사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입도 20%가량을 대기업들이 잠식했다. 매각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사기업에 이전되었다. 현재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해당 산업에서 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를 넘어 5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은밀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된 것이다.⁵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발전 부문만 경쟁체제인 현재의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다. 1999년 정부가 확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①발전 경쟁 ②도매 경쟁 ③소매 경쟁이라는 단계를 거쳐 전체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계획이었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세 번째 단계인 소매 경쟁에 해당하는데, 한전과 경쟁하는 전기 판매사업자가 생기면 도매 경쟁이 자연스럽게 완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작성된 『전력산업 발전방안』에서도 판매시장 개방에 따라서 전력산업의 전 과정에 “경쟁 압력”이 발생하여 발전회사에까지 “효율성 향상, 정비 일수 감소,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⁶ 요컨대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 아닌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의 전체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5) 민영화는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지, 공공부문을 수익성 기준에 따라 재편하려는 시도이다. 매각 또는 사유화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 가지 방식이지만 민영화 자체가 아니다. 민영화는 짧은 시간에 완료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민영화의 수단은 ▲매각을 통한 ‘사유화’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등을 통해 사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는 ‘자유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으로 변모시키는 ‘상품화’ ▲공공기관을 영리기업처럼 운영하도록 개혁하는 ‘기업화’, ‘상업화’ 내지 ‘내부적 민영화’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공공금융이 뒷받침하는 민자사업 등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또는 P3) ▲운영 권한을 사기업에 이전하는 ‘민간위탁’ ▲영리병원 허용처럼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개방하는 ‘규제개혁’ 등 매우 다양하다. 민영화의 핵심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이윤 논리에 따라 생산되고 유통·판매되도록 재편하고, 민간자본과 민간금융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모두 민영화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영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민영화가 결합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전력산업 발전방안』.

민영화를 통한 탄소중립?

세계적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추진된 민영화의 논리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비용 감축, 소비자 선택권 확대, 사회적 편익 증가였다. 민영화해서 다양한 기업이 경쟁하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외려 민영화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주(州)에 따라 전력 판매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소매 경쟁이 존재하는 주와 아닌 주가 있는데, 판매시장이 개방된 주가 그렇지 않은 주보다 가정용 전기의 평균 요금이 더 비쌌다. 민영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변화하자 최근에는 가격이 아니라 환경이 민영화의 주된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는 한국에서도 최근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치인과 에너지 전문가, 나아가 시민사회로까지 그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발신되는 근원지는 에너지전환의 선도 지역인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1996년 에너지 내부시장 지침을 통해 발전소를 상업적인 기업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한 도·소매시장이 경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송전망과 배전망은 분할되었다. 비슷한 조치가 IMF나 세계은행을 통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유럽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력산업과 공공부문이 민영화되었다. IMF 위기 직후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된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개편도 그 일환이었다.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 체제가 사유화·자유화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넘어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면 유럽식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민영화가 탈탄소를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여 20년간의 유럽 전력 민영화를 평가한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⁷⁾ 이 보고서는 한국에 그간 편향된 내용으로 소개된 유럽 사례에 대한 대안적 정보를 종합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신화는 단 하나도 유럽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첫째, 유럽의 민영화는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못했다. 민영화는 경쟁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해서 전체의 효율이 커질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도식적 논리에 기반했다. 민영화·자유화 → 경쟁 촉진 → 효율성 향상 → 가격 하락. 그러나 20년간 유럽이 경험한 현실은 달랐다. 소매 전기요금은 2008년 이후 연 3%씩 상승하였다. 전체 가계지출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도 평균 6%로 상승했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상승하자 에너지 빈곤층도 늘어났다.

둘째, 민영화는 경쟁을 촉진하지 못했고 소비자 선택도 제한되었다. 소규모 발전사와 소매기업들은 대기업들에 인수·합병되었다. 2003년에는 7개 대기업이 등장했고 2009년에는 5개 대기업이 유럽 전력시장을 지배했다. 반면 시민들이 전력공급업체를 바꾸는 비율은 아주 미미해서, 2016년 기준 6%에 불과했다. 다양한 요금제도는 선택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충분한 시간과 기술을 갖지 못한 고객들은 희생양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대부분 국가가 전기요금 가격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송·배전망의 분리가 효과 있다는 증거 역시 없다. 전력 자유화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전력 시스템을 분리(unbundling)하는 것이다. 그러나 송·배전망 분리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송·배전망 분리가 가격 상승을 야기하거나, 각 부문 간의 조정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었다.

넷째, 시장경쟁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대립적이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 까닭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고정가격을

7) 베라 웨그먼. 2019.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 박주형 옮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사회공공연구원.

보장해주고 의무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투자를 촉진 하지만, 시장경쟁은 축소한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는 시장경쟁을 통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여러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를 없애고 경쟁적 시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다. 전력 민영화 초기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EU 15개국에서 전력 부문의 일자리가 약 25%에서 30%가량 감소했다. 투자 규모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통계 모델링에 입각한 낙관적 전망은 근거가 희박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어디서 창출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 사회권력을 통한 체제 변화

민영화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실현되지 않았다. 노동, 환경, 경제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민영화의 결과는 매우 나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적인 전력 생산과 관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이다. 이윤만을 쫓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와 배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긍정적 가능성은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결합할 때 달성될 수 있다. 결국 에너지 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우리나라 노동 구조의 변화를 동반할 때만 가능하다.

에너지 산업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민영화를 막고, 이미 민영화된 영역을 재공영화해야 한다. 그때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무상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기업에 의해 추진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거둔 이익을 사업자와 금융투자자가 독점하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바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화해야 한다.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을 참고하여 전국화함으로써 사기업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진행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폐해는 공유화를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회공공성 모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각지의 1,408개 (재)공영화 사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공영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 첫째, 운영비와 인프라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환경적 목표를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넷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여 사회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진전시켰다.⁸ 또한 (재)공영화를 통해 열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정치적 실험과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해서 이런 장점을 현실화해야 한다.

에너지 체제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때 해고를 전제하고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은 한계가 많다. 선해고 후교육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전과 발전공기업 체제를 개혁하고 통합하면서, 개혁된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에너지전환 과정에 필요한 일자리가 다수 생겨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서도 공공적으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 오히려 막대한 양질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

8) 사토코 키시모토 외. 2020. 『공공이 미래다: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 이재훈·장영배 옮김, 사회공공연구원·공공운수노조·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이런 변화는 하나의 영역에서 달성될 수 없다.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법을 검토하고 ‘사회적 권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전략은 복합적인 사회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손쉬운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노동조합은 스스로가 협소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 노동자 전체를 위한 조직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대안적 사회적 권력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공공성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영화된 사업의 재공영화, 민주적이고 대안적인 사업모델의 구상 등이 그 일이다. 이런 운동과 정책의 현실화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업권력을 약화하고 대안적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길이다.⁹⁾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지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민영화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 속에 뿌리 튼 기업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우리에게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대안이다. 그러한 전환의 과정을 통해 자연과 노동을 착취하며 성장해온 기존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기술과 시장에 의존한 손쉬운 해법은 작동하지 않았다. 체제 변화를 지향하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해법이야말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

9) 구준모. 2021. “정의로운 전환 논쟁.”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플랫폼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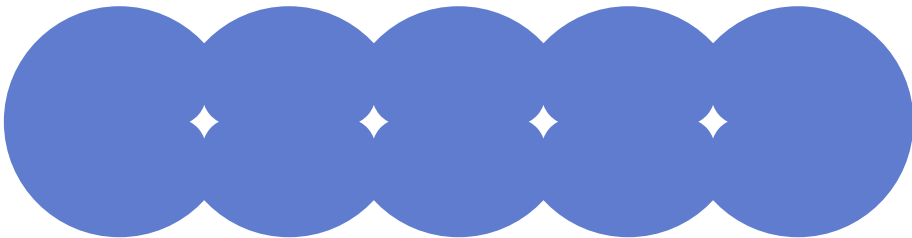
농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이무진(해남군농민회 조직교육위원장)

1995년부터 해남에서 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남군농민회 사무국장,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전농 정책위원장을 2020~2021년 2년간 역임하고, 다시 열심히 농사짓는 활동가이다. 현재의 고민은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대농 중심의 농정을 중소농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적 과제에 농민이 주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80%에 이르는 수입 먹거리 의존을 국내 자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m01048726290@gmail.com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현재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 혁명 이전보다 1℃ 상승하여 극한 기상이변, 홍수와 범람, 폭염, 가뭄과 용수 부족, 사막화, 열대 풍토병과 매개체 감염질환 급증 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간이 초래한 ‘인위적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이전 시대의 ‘자연적 기후변화’와 구분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기후위기의 근본책임은 자본주의와 기업에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후위기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회를 잃게끔 했다. 신자유주의 고조기였던 1990~2015년 동안 전 세계 소득 상위 1% 인구가 배출한 탄소는 소득 하위 50% 인구의 배출량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소득 상위 10%가 배출한 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52%를 차지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기온 상승을 2℃ 내에서 막기로 결의하였다.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일련의 상황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인위적 결과물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고,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기적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은 자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농업환경을 살펴보더라도 인간 삶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초 냉해와 7-8월의 집중호우, 올해 1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본 월동작물 등 기상재해로 인한 극심한 농작물 피해는 인간중심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 놓은 기후변화와 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하였다. 2021년 한국에서는 6월 25일 초여름에 우박이 내렸고, 미국 서부지역과 캐나다에서는 살인적인 폭염이, 시베리아에서도 30℃가 연일 넘는 기상이변이 속출했다. 2022년 현재 계

속되는 남미의 극심한 가뭄은 곡물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현실화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한국 정부(문재인 정부)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뿐만 아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과 급격한 기후변화를 통해 느끼는 일상의 위기감은 개개인들에게도 에너지전환이라는 목직한 주제를 시급한 과제로, 본능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전환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현재에 있게 한 자본의 탐욕에 복무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또는 산업 전환은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전환의 과정을 “정의로운 전환”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계급 또는 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과연 있는가? 특히 재생에너지의 보고라고까지 일컫는 농촌과 농업에서 현재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햇빛, 바람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배 불리기 정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에너지전환이 이렇게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기후위기 범죄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전환을 이뤘던 주체로 인식하고 오히려 막대한 사업권과 에너지주권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은 수익이 없으면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신안군 풍력사업은 SK, GS, 한화 등 대기업 집단이 중심이 되고 이를 전남도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전남지역의 공유자산인 자연생태계를 독점하면서 안정적 소득과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실천 계획은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과정만 담고 있다. 더욱 암담한 사실은 급격한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의 개입은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환경론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론자들이다. 필자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농수산단체 간담회에서 확인한 사실은 ‘공공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고 실현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연구자와 정부 관료 그리고 일부 환경론자들이었다. 필자는 이 간담회를 통해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농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현재 농업과 농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산과 바다 등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은 개발 찬반으로 갈리면서 갈등과 분열이 심해져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농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주된 소비처인 수도권 인근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 선로를 설치하면서도 농촌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개발 이익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 농어촌은 수도권의 에너지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염해 간척 농지는 한화, SK 등 굴지의 대기업이 직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20년간 일시금 임대료 지급, 년 임대료 평당 6,000원이라는 조건으로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염해 측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60cm의 심토 측정값 만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결정하며,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양 염도가 5.50dS(데시지멘스)/m인 지역이 전체 농지 면적의 90% 이상일 경우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최장 20년간 설치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척한 농지도 그 정도 심토에서는 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분양된 간척지라면 현재 조건에서는 어느 곳이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상태이다.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육지에 설치하는 경우, 산 정상까지 자연을 파괴해야 하고 주민 삶의 터전과 이격거리도 매우 짧다. 또한 바다로 나가면 이격거리라는 개념조차 없다. 전기를 소비하는 분야나 사람은 먼 곳에 있고, 주민들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논리이자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인 전남, 경북, 충남 세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중은 전체의 44.5%이다. 전기 수요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생산량은 15.4%에 불과하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권 빌딩 옥상이나 공장 옥상에는 보이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넓은 부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을 이유로 농촌에서는 매일 늘어나고 있다. 향후 15년 후면 전체 농지의 84%가량이 상속, 이농, 투기를 통해 비농민소유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듯이, 현재 농지소유 상황을 보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말이 현실적이지 않다. 구체적 통계는 없으나 자경 농업인이 임차한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가량이 남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재도 대다수 농지가 임차 농지이기 때문에, 지주가 임대료를 받기보다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더 높여 받아,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농지를 빼앗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용도 이외로 농지를 활용하여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꾼들에 의해 농지가 농민들의 것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는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공개한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발전공기업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최대 2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부지의 지가 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농지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생활 공동체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마을에서 힘 좀 쓰는 몇 명에게 술 사 주고 밥 먹이는 로비를 벌여 마을 주민 간 찬반이 극심하게 갈리고 결국 마을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는 위기를 맞이하는 곳도 있다. 이장은 찬성하는데 노인회장과 지도자, 부녀회장은 반대하는 마을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어떠해야 하나?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우선 탈화석연료, 탈원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정당하고 필연적인 과정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현재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이므로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소유할 수 없는,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수 조건인 바람, 태양, 물 같은 중요한 공공재가 특정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이용 목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개발의 모든 결정권, 운영권, 분배권을 자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국민)에 돌려줘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의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환경파괴와 비용은 줄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다. 그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집중식 공급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별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로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당장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농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급격한 전환을 이루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식량자급률이 19%에 불과하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전 세계 식량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식량위기 상황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대책은 무엇일까? 현재 벌어지는 원자재 가격과 식량(곡물) 가격 폭등은 싸게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오류인가를 잘 보여준다. 에너지를 먹고 살 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연 파괴가 아닌 도로, 공장, 주택, 빌딩, 아파트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

농민이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고 농민이 스스로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농업, 농민에 대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공공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¹⁾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량 자급이

1) 전국농민회총연맹 2021년 대의원대회 자료집 중 “공공농업은 국민과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과거 농정은 국가가 주도하고 농민이 이에 수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공농업은 국가와 농민이 함께 식량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개념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농업의 경쟁력만을 강조했던 지난 세월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가가 농업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농업의 지속성 강화와 기후위기 해결, 식량주권 실현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농민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공농업이다.”

가능한 방향으로 농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제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전체의 3% 정도 비중이고 나머지는 토지이용 변화(농지 전용 등), 산림 파괴, 가공/포장/운송/소비 과정에서의 배출로 12%가량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낮은 농산물 가격-과잉생산-많은 먹거리 손실(유통/가공)과 음식물 쓰레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 농민의 생계 보장, 농업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의 연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무조건 크고 때깔이 좋아야 높은 가격을 받는 경매제도뿐만 아니라 못난이 등 유기재배를 한 농산물도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농산물 유통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또한 농안법에 직접거래 도매상 방식이 가능하게 해놓고도 전체 농산물의 37%가 거래되는 대표가격이 결정되는 가락공영도매시장에서는 도입을 못 하게 농식품부가 막고 있다. 농산물이 비싸든 싸든 경매 수수료만 받아도 돈을 버는 유통법인의 로비가 농민의 가격결정권과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크고 때깔 좋은 농산물만 생산해야 하는 생산구조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이 20.2%에 머물고 식탁에 올라가는 80%의 수입농산물 운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서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만 줄이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먹거리 또는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자급형 먹거리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이 주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농민수당 등 농업과 농민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증진하고 생성하는 보상과 대가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생산을 통해 식량공급과 탄소중립의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실행할 때 사회적 보상이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정책은?

우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고 실행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목표한 식량 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을 지키기 위한 농지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근본적 가치와 탄소중립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농가소득을 결부하려면 농지가 농민의 것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발전시설은 농지훼손과 농지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지를 훼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특히 자본의 수익을 위해 전남, 충남 등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염해 절대농지 발전시설을 허가한 농지법 개정(2018년)은 바로잡고 원래대로 불허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공영화,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지역 분산형 전기공급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

구체적 농업, 농민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은 이렇게!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과 농민이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환경친화적 영농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와 약제를 덜 사용하는 영농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36,000개 농촌마을에 마을자립형 100kW~300kW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총 3.6GW~10.8GW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인근 도시지역에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 각자의 마당이나 창고 지붕, 건물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마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수익을 마을운영비 등 공적으로 활용하면 REC 단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규모 시설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 매입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통 농촌마을 30가구에 가구당 3kW 계약하고, 100kW면 마을 에너지자립이 가능하며, 36,000개 마을을 이렇게 할 경우 신고리4호기가 1년 생산하는 에너지(875MW)의 4배, 즉 원전 4개 분량인 3.6GW를 생산할 수 있다.

급격한 전환의 시대다. 이런 결과를 인류에게 가져다준 자본의 탐욕은 그대로 둔 채 전환해야 한다고 외치거나, 자본을 활용해야 급격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인류 생존을 위한 거대한 전환의 과정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값싼 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환은 자본의 탐욕이 만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인류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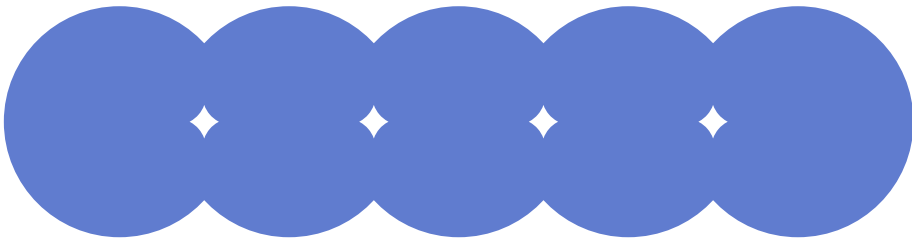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김우창(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활동을 통해 그동안 고민해보지 못했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 밀양송전탑 갈등, 핵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 등에 관심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전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갈등 관리전략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변화와 공동체 붕괴」,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느린폭력 드러내기」 등과 저서 『원전마을』이 있다.

✉ wcvictory920@snu.ac.kr



나는 왜 월성을 연구하게 되었나: 밀양에서 월성으로

이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이 글이 기후변화의 위협성을 설득하기 위해 동원된 북극곰들처럼, 핵발전소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저 일회성으로 소비되지만 결국엔 우리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이야기로 다시 잊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도, 글쓴이의 과장이 들어간 픽션이나 소설이 아닌 핵발전소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고민, 오랜 싸움을 바탕으로 한 실제 이야기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어쩌면 이 글은 나와 같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산지소(地產地消) 혹은 신토불이(身土不二).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특히 대도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한 유토피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내가 번 돈으로 직접 사는’ 소비자의 삶에 익숙해졌고, 보통은 지역에서 기른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는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비단 먹고 입는 것만이 아닌 거의 모든 분야의 ‘상품’들을 이런 방식의 교환 혹은 외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에너지 혹은 전기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내가 나만의 방에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간단히 꽂는 것만으로 핸드폰을 충전하고, 노트북을 켜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전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져, 이곳까지 왔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솔직히 나도 잘 몰랐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내가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송전탑, 핵발전소 등 에너지(전기)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가를 고민하니 ‘밀양’이라는 하나의 단어, 사람들, 그들의 삶이 떠올랐다. 밀양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나의 삶과 변화를 들어주기 바란다. 나의 학부 전공은 국문학이었고, 이 글을 접하는 대다수 사람처럼 전기, 에너지에 대한 고

민 없이 그저 쉽고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하는데 만족하는 소비자로서 살아왔었다. 그러다 70대의 평범했던 촌로가 왜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자신이 평생을 일구어 온 밭에서 죽어가야 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나의 삶도 바뀌기 시작했다. 100미터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이 그의 논과 밭, 마을 한복판을 갈라서 설치될 예정이었고, 그 끝에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신고리 핵발전소와 그 전기를 소비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있었다. 우리의 일상과 그들의 고통 사이의 ‘관계’가 지워지거나 가려진 채, 나는 나만의 ‘독립’된 것처럼 보인 방에서 살아왔다. 아마 핵발전소에 대한 관심과 전기를 쓰는 것에 대한 부채감은 여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로 일할 때 월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밀양에서 할매할배들이 한국전력과 정부를 상대로 수십 년을 싸워왔듯이, 2015년 5월 월성에서도 누군가는 자신들의 삶을 걸고 한수원, 정부와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들의 싸움을 이해할 수 있는 내 공감의 폭과 너비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밀양 할매할배들의 10년이 넘는 투쟁을 봐왔던 나로서는, 핵발전소에 반대하고 싸우는 월성 주민들의 싸움도 ‘당연한, 응당 그래야만 하는’ 당위적인 인정 투쟁으로 생각했었다.

월성 주민들을 다시 떠올린 것은 비교적 최근이었다. 핵발전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나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던 것은 한수원 노조만이 아니었고 그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이었다. 물론 밀양에서도 송전탑 공사를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싸우는 주민은 소수였고, 보통 다양한 이유로 대다수 주민이 결국엔 송전탑 공사에 합의했던 것처럼, 한수원 노조와 함께 핵발전소 최인접마을에 사는 주민 대다수 역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케이트 브라운(2021)은 미국과 소련의 플루토늄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주민들

스스로가 “풍요와 경제적 발전을 원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위해 시민권과 생물학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플루토피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¹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 역시 핵발전소가 인접한 마을, 지자체, 주민들은 보통 핵발전소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해 결국에는 핵발전소를 지지하고 찬성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건설까지도 희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²

그런데, 마을 주민 대다수가 핵발전소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수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월성원전 인접 지역 이주 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한수원이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곳에서 소수의 주민들은 핵발전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아프고 병든 몸을 걸고 이주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이 궁금했다. 왜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가, 왜 나는 그들의 삶을 잊은 채 살아(도 괜찮았는가)왔었는가를 묻기 위해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 일상 및 반대운동을 기록하고 연구하기로 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는 보통 연구자가 몇 번, 짧은 기간 현장에 머물며 인터뷰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연구만으로 연구자는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연구자)는 서울/수도권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핵발전소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 온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며 삶과 연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최대한 좁히기로 했다. 삶이 곧 연구이고 연구가 곧 삶인 인류학의 주요 연구 방법인 에스노그

1) 케이트 브라운. 2021. 우동현 옮김 『플루토피아: 핵 재난의 지구사』 푸른역사.

2) 김경신. 2011.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위험인식/이익인식 분석: 부안과 경주의 설치지역과 유치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라윤. 2017.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과 위험의 사회적구성.” 전남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황보명·윤순진. 2014. “원전 입지와 온배수로 인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변화: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47: 46-83; 황정화. 2020. “원전입지공간의 생산과 주민의 전략적 실천: 울진군 북면 주민조직의 반핵, 친핵활동을 중심으로.” 『ECO』 24(2): 41-89; Kuchinskaya, Olga. 2014. The politics of invisibility: Public knowledge about radiation health effects after Chernobyl.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Masco Joseph. 2004. “Mutant Ecologies; Radioactive life in post-cold war new mexico.” Cultural Anthropology 19(4): 517-550; Pidgeon, N, Henwood, K, Parkhill, I K, Venables, D and Simmons, P. 2008. Living with nuclear power in Britain: a mixed methods study. Cardiff: Cardiff University.

라피(Ethnography)를 통해 최대한 그들이 되어보고 싶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하물며 탈핵을 지지하는 나조차도 핵발전소를 비판하는 이유는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 가능성, 인권의 문제 등 여전히 추상적이었고 모호했다. 그래서 나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2021년 7월 초까지 약 8개월간 경주시 양남면 신서리라는 곳에서 머물며 연구를 진행했다. 이곳은 월성 핵발전소 단지가 위치한 양남면 나아리, 나산리에서 3~4km 떨어진 마을이었다.

핵발전소 인접 마을에 산다는 것의 의미: 왜 그들은 관과 상어를 끄는가?

2019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월성>은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과 상여시위 등을 담았다. 이 영화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309, 문무대왕릉 3, 황분희의 집 1’과 같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장소와 숫자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³ 이 숫자들은 월성 핵발전소와의 거리(km)를 나타낸 것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핵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발전소와의 거리감은 많은 시민에게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핵발전소와 그로 인한 위험조차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지만, 반대로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위험과 불안을 매일, 매순간 일상에서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경주는 보통 ‘천년의 고도’라는 역사적이면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졌지만, 그곳엔 핵발전소도 있다(아마 많은 사람이 월성 핵발전소가 경주에 있는지 모를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가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한수원과 월성 핵발전소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홍보관’, ‘원전 수용성 전화 설문조사 안내’,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교육 훈련생 모집’, ‘월성 청소년 합창단 모집’에서부터 ‘발전소’

3) 남태제·김성환. 2019. 영화 <월성>.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라는 이름의 음식점까지, 이 지역은 월성 핵발전소와 결코 뗄 수 없는 공간이다. 특히 한 해 경주시 예산의 10%-20%에 해당하는 원전지원금을 비롯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존재는 핵발전소가 위치한 자치단체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핵발전소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렇게 한수원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 지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서, 한수원과 월성 핵발전소를 비판하거나 이들에게 '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이 지역에서 왕따가 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자, 때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월성원전 인접 지역 주민이주대책위(이하 이주대책위)는 2014년 8월 만들어져 현재까지 8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이자 원동력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수원의 '원전 안전 신화'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후 발생한 국내의 핵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은 안전을 담당하는 한수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한수원의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참여했던 것 역시 그들이 했던 이주 투쟁이었으며 그들은 매주 월요일 월성 핵발전소 남문에서 출근 시간대에 상여시위를 진행했다. 2014년 이주대책위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마을주민의 30% 이상인 100가구가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보통 경주 시내와 울산 북구에서 온 연대자들을 포함하여 스무 명 남짓의 주민들이 관과 상여를 끈다. 8시쯤이면 주민과 연대자가 농성장에 모여 '이주만이 살길이다'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8시 20분이 되면 관과 상여를 끌고 도로 위에 나선다. 농성장에서 월성 핵발전소 남문까지의 거리는 400미터가 채 되지 않으며, 보통 40분 정도면 이들의 출근 투쟁도 끝이 났다. 그러나 이들은 굶은 날씨에도 눈, 비를 맞아가며 관과 상여를 끌었다. 사실 처음에는 이들의 활동과 삶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여관찰 하기 위해 매주 상여시위에 참여하였고, 겨우 남문 앞에서 멈추고 다시 농성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여시위



<그림 1> 이주대책위가 월성 핵발전소 남문에서 상여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때로는 비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왜냐하면, 관과 상여를 끄는 이차선 왕복 도로 위에는 출근하는 많은 차량이 우리 뒤에 있었고, 때론 ‘뺑’ 경적을 울리며 우리를 빠르게 지나쳐 가기도 했다. 그러다 선두 행렬이 남문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동안 내 뒤의 ‘무관심한 혹은 심드렁한’ 표정의 운전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느낌이 참 복잡미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고작 남문 바로 앞이며, 다시 아무런 소득 없이 농성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출근 차량들의 그 무관심한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계란들의 바위 치기’라는 말이 생각나곤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서야 닳고 닳은 관 위에 적혀진 자신들의 직함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보통,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라고 강조하며, 이주를 요구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상여시위에 나선다고 말했다. 처음에 나는 이 상여시위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했고 왜 아무런 소득도 없어 보이는 이 투쟁을



<그림 2> 바퀴가 달린 바렌 관위에 적힌 '처사 국장 지구'

계속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 장례식처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자신들의 직함과 함께 관위에 적은 '처사 국장지구(사무국장의 관)'를 통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해왔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사는 게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 옆에서 죽지 못해 삶을 사는 것이니까. 이게 죽음이지 뭐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몸에 나쁘고 위험한 방사능에 노출된 채 살고 있잖아.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견거나 피켓만 흔들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것을 하자고 했지. 죽음이 제일 의미가 크잖아. (황분희 인터뷰 중)

즉, 상여시위란 '이미 핵발전소 옆에서 죽은 것이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울분과 분노, 슬픔 등을 표출하고 수년째 이주를 요구하는 것을 의

미하며, 특히 상여위에 올려놓은 핵발전소 모형은, 자신들의 장례와 함께 핵발전소에 대한 장례를 함께 뜻했다. 즉, 상여시위를 통하여 그들은 매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며,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주’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도망칠 수조차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의 삶에 대해

“그냥 이사 가면 되지 않아요?” 이들 상여시위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적지 않게 들었던 질문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관해 연구했던 연구자들조차 나에게 ‘굳이 이주를 요구하는 상여시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위험하다면, 그냥 이사를 가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사실 처음에는 나도 이해가 잘 안되었다. 그러나 이주대책위는 단호하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한수원의 말따나 ‘안전하게 가동 중’인 상황에서도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배출되어, 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암이나 백혈병 등에 걸려 수술받거나 죽었다는 건강권과 관련한 절실함이었다. 두 번째는, “거래 자체가 없어서, 아무리 이사를 하려고 집을 내놓아도 거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이주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는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되는 거야. 30년 전에는 이 마을이 양남면 전체에서 제일 비싸게 팔렸거든. 근데 핵발전소가 들어선 이후로는 다른 곳이 20배, 30배 오르는 동안 여기는 변한 게 없어. 오히려 나빠진 거지. (김진일 인터뷰 중)

실제, 양남면 부동산 거래현황(2006년~2020년)과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1996년~2020년)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핵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먼 마을일수록 부동산 거래도 많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높아졌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나아리, 나산리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공시자가 변화는 낮은 편이었다. 실제, 부동산 거래까지 구두(계약)로 마친 뒤, 실제 계약만을 남겨 둔 주민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5.8 지진으로 거래 자체가 취소되어, ‘위험한 곳에서 도망갈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등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 그 자체였다. <KBS 추적 60분>은 2015년 3월 21일에 방영된 ‘원전과의 불편한 동거, 원전과 갑상선암’ 편을 준비했고, 이 방송에서 나아리(반경 1km), 하서리(5km), 경주 시내(30km 이상)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 5명씩의 소변 속 삼중수소 농도와 지하수를 채취해 비교했다. 결과는, 앞선 부동산 거래 및 공시지가와 유사하게, 핵발전소에서 가깝게 사는 주민일수록 소변에서 더 많은 삼중수소가 발견됐고, 식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이주대책위는 나아리 주민 40명의 소변검사를 요청하였는데, 이때 황분희 씨의 가족 모두도 참여하였다. 2016년 1월 21일 대책위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놀랍게도 40명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특히 당시 다섯 살이었던 황분희씨의 손자에게서 40명 평균(17.3 Bq/L)이 자 성인보다 높은 수치인 17.5 Bq/L이 검출됐다.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던 황분희씨도 28.1 Bq/L를 기록했고, 갑상샘항진증을 앓고 있던 그녀의 남편 역시 24.8 Bq/L를 기록했다. 물론 현재까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평가는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 ‘바나나 몇 개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와 ‘장기적으로 저선량에 노출될 때 위험하다.’와 같이 대조적이며, 쉽게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위험성을 함부로 배제하거나 ‘안전하다’고 쉽게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⁴

4) 김우창. 2022. 『원전마을』. 한티재.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에 있어 삼중수소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물질이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물질로서, 방사능물질 붕괴 시 방출되는 베타입자 즉 전자는 그 에너지가 작아 신체 외부에서 방출되는 경우에는 피부를 투과하지도 못할 정도의 에너지이다. 그러나 신체 내부에서 붕괴할 때는 그 입자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비교적 짧은 거리의 범위까지 투과하지만, 거꾸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범위가 짧으므로 단위 거리당 전달되는 에너지 밀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의 관점에서 내부 피폭을 검토하는 경우,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라돈의 알파입자와 같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황분희 씨의 경우에는 울산에서 살고 있던, 딸 가족들에게 이곳에서 함께 살자고 권유했던 자신을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의 요청으로 인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던’ 핵발전소 인접 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의 건강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주’를 요구하는 과정은,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주요구를 하고 소변검사를 요구했던 자신이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모순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마치, 가슴기 살균제처럼, 자기 가족을 위해 사용했던 살균제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황분희 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책망하게 만드는 순간을 마주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순간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상여시위와 이주 요구를 하는 더 강한 동기로 작용하여 보이지 않는 위험과 위협에 대항하여 매주, 매일 싸워 온 삶을 지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주를 요구하나?

그러나, 한 가지 (나로서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역에서 탈핵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들은 대체로 “나는, 우리는 탈핵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자신들의 ‘상여시위’와 ‘이주요구’가 탈핵운동과는 다르다는 단호한 대답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탈핵운동’은 당연해 보였고, 오히려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대체로 무관심했기에 그들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연구자인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 혹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지는 “한수원과 월성 핵발전소를 향해 시도했던 지난 8년간의 다양한 요구와 활동을, 그들은 스스로 탈핵운동이라고 왜 규정하지 않는가?”라는 연구 질문과 함께, 왜 그들은 ‘이주’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묻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싸움과 삶,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맥락과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핵발전소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하는 세력과 운동(반핵, 탈핵)까지도 지역이 아닌 중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다소 예민할 수도 있을 이 주제에 대해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지난 6-7개월 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바탕으로 ‘탈핵이 아닌 이주를 요구하는 이유와 맥락’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민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였는데, ‘생계와 피폭문제 사이에서 건강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 ‘탈핵의 현실가능성에 대한 모호함과 이주요구의 현실성’ 등이었다.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 주민들의 직업구성은 주로 자영업(식당)을 운영하거나 핵발전소 종사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수원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식당 고객의 대부분이 월성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노동자들이기에 지역주민들이 한수원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주민들이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한수원을 비판하는 순간 ‘블랙리

스트 혹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⁵ 이주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이 탈핵을 요구할 때,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왔던 문제들, 특히 농수산물에 대한 피폭문제까지 언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주대책위는 탈핵을 외치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수산업 혹은 식당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핵발전소 폐쇄’나 탈핵을 적극적으로 외치지 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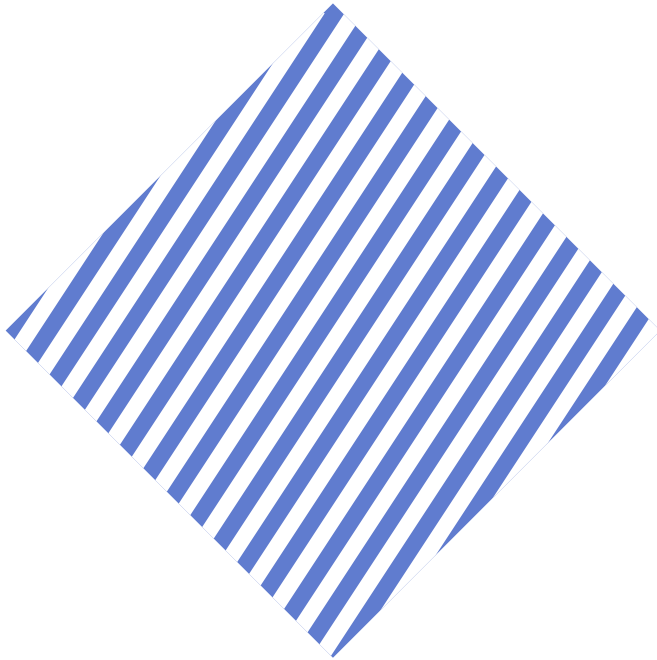
더욱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인데, 이들은 ‘탈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탈핵’의 정의는 모호하거나 없는데, 정부나 사회가 생각하는 탈핵의 개념은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않고 오래된 핵발전소는 가동 중단하여 장기간에 걸쳐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주민들은 핵발전소를 월성1호기와 같이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폐로’를 결정한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탈핵은 단순히 오래된 핵발전소의 가동중지에 머물지 않고 ‘폐로와 핵폐기물 처리 및 보관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때, 폐로에 대한 기술은 현재 갖고 있지 않고 고준위 핵폐기물도 십 만년 이상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위험을 해소할 기술이 없으므로, 주민들로서는 ‘막연하게 대책이 없는 탈핵’을 외치기보다는 ‘이주’를 외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유일한 대안이 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중앙 중심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보통은 핵발전소만 중단하라고 말하지, 그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라고 말했다. 즉, 탈핵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경제, 사회적인 문제와 터부시되어왔던 피폭문제를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고, 무엇보다 폐로 및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과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탈핵운동의 한계를 언급하며, 주민들은 ‘탈핵’을 외치고 싶지만, 더욱 현실적인 ‘이주’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5) 오마이뉴스, “맥스터 찬성 가게는 홍보, 한수원의 원전판 ‘화이트리스트’논란”, 2020-07-02.

우리의 안락과 일상을 위한 그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월성에서 지내면서 추상적인 핵발전소의 문제와 위험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위험의 순간들을 경험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 ‘내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이 공기, 음식, 물속에 방사성물질이 들어있을까, 들어 있다면,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월성에서 수도 없이 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은 단순한 ‘과장과 음모론’만이 아니라 그들 몸에 새겨진 질병과 수술의 흔적 혹은 삼중수소 수치로 드러났고, 실재하는 위험과 불안은 이들이 이곳에서 싸우는 간절한 이유이자 가족을 위해 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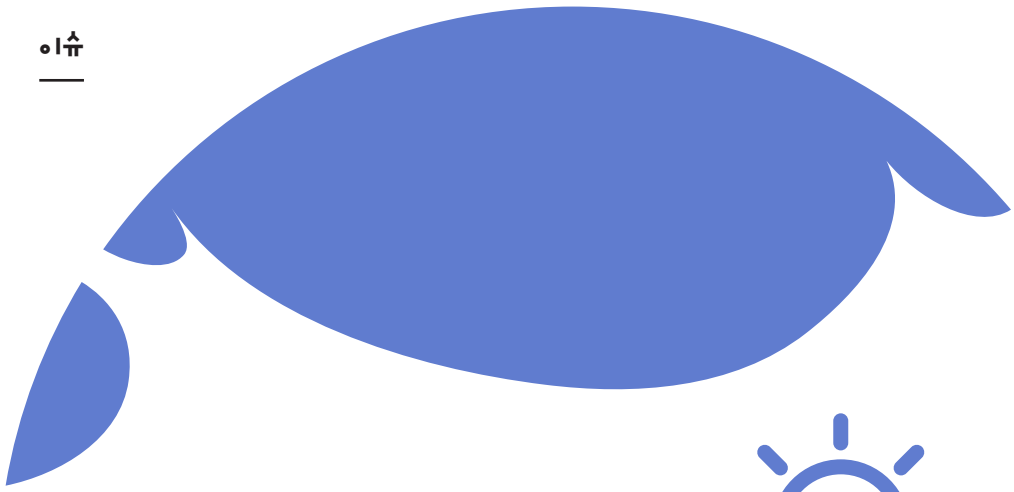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당연한 일상과 평화롭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 누군가는 핵발전소가 보이는 지역에서 8년째 상여시위를 통해 이주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삶들의 모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고리, 월성, 영광, 울진 핵발전소에서 생산되어 밀양을 비롯한 전국의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그들의 고통과 일상화된 위험에 침묵해선 안 될 것이다. 그들은 한수원이 지배하는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시끄러운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탈핵단체에 세뇌당해 위험하다고 외치는 사람’ 취급받으며 싸우고 있다. 전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내가 느끼는 부채감과 문제의식을,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을 쟁취하기 위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들의 투쟁과 이주요구에 대한 공감과 지지와 연대를, 당신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가장 최근의 상여시위는 2022년 7월 25일로, 그들은 2,892일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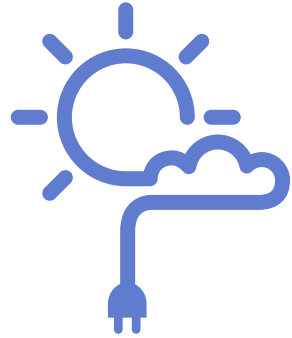


한살림 에너지전환 운동



[인터뷰]

한살림 에너지전환 운동



첫번째 인터뷰: 한살림 울산 생협. 2022년 5월 6일

면담자: **김정영** 이사장, **김화정** 전 이사장, **용석록** 조합원(탈핵신문 편집장)

두번째 인터뷰: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2022년 5월 11일

면담자: **조경은** 사무국장

세번째 인터뷰: 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 기후위기대응팀. 2022년 5월 16일

면담자: **김태열** 팀장

진행 및 원고 정리: 최민영(모심과살림연구소), 김진아(한살림연합)



한살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 운동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 한살림에서 에너지전환 운동을 하는 곳 중 우선적으로 세 단위를 인터뷰하면서, 한살림에서는 어떤 에너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고민이 서로 닮아 있으며,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이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사람은 다 세상이 바뀌는 걸 바라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실천해 나갈 때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작을 해왔으니까요.” - 인터뷰 중

탈핵운동

● 울산 한살림의 탈핵운동

김화정 _ 울산은 핵발전소로 둘러싸여 있어 탈핵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울산 한살림 조합원들이 탈핵 활동가인 경우가 많고, 울산의 다른 탈핵단체들과 연대해서 활동해왔어요.

용석록 _ 한살림이 탈핵운동에 연대했던 것 중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 북구 주민들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투표를 조직화할 때, 전국 한살림 많은 지역에서 지지 성금을 보내주셨던 것이예요. 그만큼의 후원금을 보내려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조직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깊었죠. 또 다른 사례로 2018년에는 한살림에서 조합원들에게 탈핵을 많이 알리려고 탈핵관련 소책자를 만들더라고요.¹ 한 단체가 독자적으로 탈핵 책자를 만드는 곳이 많지 않았

1) 한살림 조합원 학습자료-탈핵 소책자. <http://www.hansalim.or.kr/?p=48169>



왼쪽부터 김화정(한살림 울산 전 이사장), 용석록(탈핵신문 편집장), 김정영(한살림 울산 현 이사장)

는데, 한살림 안에서 탈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는 증거죠.

김화정 _ 조직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가능했던 이유는 23개의 지역 한살림 생협들이 각자 자기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되, 공동으로 해야 하는 투쟁 의제가 결정되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중 하나로 탈핵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살림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의제로 몇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후원금 조직이 가능했고, 조합원들에게 이걸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소책자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 기후위기와 탈핵

용석록 _ 최근 기후위기라는 큰 의제를 다루면서 탈핵은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한살림뿐 아니라 많은 환경 단체에서 기후위기대응팀과 탈핵팀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둘을 묶어서 담당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담당자들이 탈핵 보다 기후위기 쪽에 비중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화정 _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운동 진영조차 기후위기와 탈핵을 통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기후위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피부로 느끼는데, 탈핵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석록 _ 저는 언론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이런 이슈는 국가가 나서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광고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핵발전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있으며 인류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핵폐기물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김화정 _ 기후위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죠. 그런데 핵문제는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전기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만의 문제처럼 보여요. 핵폐기물은 이미 현재의 문제지만 당장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언론이 기후위기와 핵발전에 대해 대중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이와 같아요. 기후위기는 모두의 문제로써 자본과 국가 차원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접근하지만, 핵발전은 이익을 얻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을 구분하고 이익을 얻는 집단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요.

용석록 _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죠. 2017년까지 5~6년간 모든 단체의 중심은 탈핵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화두가 있었어요. 2016년 7월에는 규모 5.0의 울산 지진과 8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연달아 있었어요. 그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했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했는데, 임기 5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때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도 탈원전은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탈핵이 생명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탈원전을 무조건 반대하고, 심지어 기후위기 운동 진영에서도 탈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탈핵운동이 더 어려움에 부딪친 것이죠.

● 탈핵은 왜 어려울까

김화정 _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탈핵은 이익을 축소하기 때문에 접근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국가 제도나 정책으로도 정부가 여전히 그걸 방어해주고 있어요. 반면 국민 입장에서는 탈핵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탈핵운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은 핵발전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전기요금 현실화밖에 없어요. 전기요금이 지금 너무 싼데, 핵발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산정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면, 기업이나 국민들이 핵발전소와 관련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는 말을 못 해요. 오히려 반핵 진영에서 ‘탈핵하면 전기료 폭탄’이라는 논리를 펴고 이는 대중의 생활 안정성과 연결된 것처럼 다뤄지죠.

김정영 _ 지금 대기업이 값싼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탈원전을 해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모두의 문제가 되려면

용석록 _ 탈핵 진영에서 회의하다가 ‘그럼 원전을 서울에다가 지어라, 핵폐기물을 서울에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한 것이 ‘서울에 원전 찬성 하십니까’, ‘가져가라 방방곳곳’ 캠페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핵폐기물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갈

이 책임을 저 달리는 거예요. 수도권 사람들이 전기 많이 쓰는데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가둬져 있는 게 가장 문제예요. 서울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야 해요. 특정 지역의 편의를 위해 다른 지역이 희생되어서는 안돼요. 캠페인이나 운동이 단체들마다 불붙듯 벌어져서 서울이 별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져야 해요.

● 한살림과 탈핵

용석록 _ 한살림은 농(農), 생명, 생활을 연결하는 운동이죠. 생산자 중심의 농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 철학에 탈핵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죠. 탈핵의 기본 가치인 ‘안전’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죠. 한살림이 처음 생겼을 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운동을 한 것처럼, 탈핵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도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한살림이 탈핵운동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지역 시민들이 정말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접할 수 있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대면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김화정 _ 생협 조합원들을 윤리적 소비의 주체로 강조하는데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한 몸으로 통합적으로 보잖아요. 이것이 제가 한살림운동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탈핵 에너지 운동을 하는 것은, 조합원 스스로 윤리적 소비자를 넘어서서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여야 한다는 한살림의 철학적 기반으로 보면 이게 충분히 설명되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석록 _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한살림이 탈핵 의제를 주요하게 잡아간다면, 소비

자 중심의 수요 관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탈핵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기를 아껴 쓰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미 욕망의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항감이 엄청날 것이거든요.

김화정 _ 한살림 조합원들은 최소한 이런 의제를 통해 자기 삶의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탈핵운동과 에너지 운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살림운동의 관점에서 개인의 삶과 연결해줘서 끊임없이 자기 문제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정영 _ 한살림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과 자연 만물, 다음 세대까지 관심을 두고 서로 보살피는 운동이잖아요. 탈핵도 그래요. 여태 기성세대가 사회적 혜택을 다 받고 이제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설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해요.

무엇을 해야 할까

김정영 _ 한살림 안에서도 원전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니까요. 한살림은 가치적으로 탈핵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지역 주체들이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안해줄 필요도 있어요. ‘우리에게 태양광, 풍력 등 대체할 에너지원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함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 제안들을 보여드리는거죠.

김화정 _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접할 수 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탈핵운동으로 다수자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살림은 80만 조합원과 지역조직 26개라는 기반이 있어요. 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탈핵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생활

에 탈핵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기획해보면 좋겠어요. 한살림 사람들은 생태적인 삶, 순환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용석록 _ 한살림의 가치와 연결되어 조합원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 생각해본다거나, 매장 물품에 ‘우리는 탈핵 세상을 지향합니다’ 이런 문구를 쓰는 등, 한살림의 가치와 지향에 맞게 여러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거죠.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다양한 입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합원에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요. 빨리 에너지전환을 해야 하고, 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설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조합원님들은 힘들어하세요. ‘아니 나보고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아파트 부녀회에서 안 된다는데 나 혼자 태양광 패널을 지을 수도 없고,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하라는 거지’, 이렇게 불편해하시죠.

지금 한살림 조합원님들이 80만에 가까운데 이 많은 조합원이 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조합원 모집을 할 때도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이고 재생 에너지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전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았



조경은(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생긴 문제를 갑자기 시민들 탓인 것처럼 메시지가 전달되면 황당한 거죠.

그래도 지금은 어쨌거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건 다 공감하세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도 저희가 계속 조합원들을 만나고 교육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탄소를 줄여야 하고 1.5도를 지켜야 하고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걸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 효과가 더 좋고 공감하시는 분들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우리는 왜 위기를 내 눈앞에 현실로 직면해야만 이것에 공감할까요.

● 포용하고 긍정하는 말 걸기

조합원들이 저희 물품을 드시는 것도 사실은 가까운 먹을 거리를 통해 탄소를 줄이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넷제로를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조합원에게 “빨리 탄소 줄여야 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당신 덕분에 지금 탄소 배출이 줄고 있다,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같이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이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시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면, 앞으로는 함께 참여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의를 했어요. 조합원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여 자긍심을 심어주고, 한 명이라도 더 동참시키고, 힘든 점에 대해 더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방향이 운동성 확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탈핵 서명, 이런 해야 할 것들만 요구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조합원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한 생협을 꾸준히 이용하고 머물러 있던 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쪽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2천만 원 정도 고액 출자금을 내신 조합원이 계세요. 저희 출자 상한선이 2천만 원인데, 배당 3% 하면 60만 원이에요. 3.5%면 1년에 70만 원이 넘어요.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고액이란 말이죠. 이렇다 보니 배당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할 때 말 걸기 위해서는 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당 3.5% 줍니다, 일단 조합원 출자하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합원들의 출자금 덕분에 우리가 한살림 생산지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해야 해요. 더 나아가 조합원이 “너희 뭘 하는데”하고 물으면 “조합원님들 이렇게 자금 출자해 주신 것으로 발전소 짓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전환 교육도 하고요, 인도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발전소도 지어줘요”, 그러면서 사진도 보여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하고도 이 재생 에너지 발전소 운영이 잘 돼서 조합원님한테 배당까지 몇 프로 해드려요.” 그러면 조합원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출자한 게 애네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나는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배당을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당을 해야만 출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근데 그 언어를 전달할 때 우리가 앞뒤를 잘 맞추는 거죠. 그렇게 내 메시지도 전달하고 원하는 메시지와 정보를 주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배당률이 몇 프로인지 나는 이거 돈 출자해서 나중에 원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대신 앞 단을 잘 얘기하면 본인이 굉장히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걸기 기술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하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에 따라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지 공부가 필요해요. 저는 MBTI도 공부하고 비폭력 대화도 공부해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어떻게 말걸기를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한

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10%, 아니 0.1%라도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게 저희가 운동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더 전문적이어야 해요. 아무리 보수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주면서 긍정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10%라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탈핵운동을 하든 에너지전환 운동을 하든 내 식대로 내 사고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조합원이나 시민이 봤을 때 제가 편향된 사고를 가진 거예요. 너도 편향되고 나도 편향되면 대화가 안 되고 접점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물꼬를 틀려면 한쪽이라도 조금 더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말 걸기가 돼야해요.

● 한살림의 에너지전환 운동 전략

한살림에서 잘 해왔고 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연대를 하거나 교육받으러 가면, 강사들이 한살림에서 재활용 옷 되살림 운동하는 것과 같은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주세요. 한살림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한살림만 몰라줘요.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2012년 창립해서 2018년까지 엄청나게 잘했는데, 우리는 자랑도 못하고 칭찬도 안 해요. 그냥 우직하게 묵묵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입사해서 보니까 이걸 아닌 거예요. 그래서 SK 사회성과측정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그동안 한 업적을 그냥 실었을 뿐인데,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상도 많이 받고 4년 동안 2천만 원 지원도 받고 있어요.

햇빛발전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한살림도 그래요. 그동안 병 재사용, 우유 팩, 옷 되살림 등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매우 많은 것을 실천하고 함께 운동했는데 조합원도 모르고 외부에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린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나 지금 훌륭하구나’, 이런 긍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한살림에서 조합원한테 뭘 자꾸 더 하라고 하지 말고 조합원 당신 정말 잘했다는 메시지를 좀 주

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왜 그것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동참해야 하고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메시지를 고민해서 꾸준히 시민한테 발신해야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내부의 운동성을 가져가되,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하지 않은 수준에서 최대한 공감을 끌어내 참여시켜야 한다고 봐요. 운동가들이 공감도 끌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저들은 이렇게 안이하고 협조적이지 않을까’라고 원망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탈핵운동도 계속 해왔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핵발전 관련 일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감시하고 폐기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야 해요. 고준위핵폐기물뿐만 아니라 저준위핵폐기물, 장갑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지도 단체별로 시민들이 계속 감시해야 해요. 지금 시대에 정부는 계속 두드리고 계속 항의를 하는 규모 있는 시민단체를 우습게 볼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어떻게 시민한테 공감받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에는 환경운동이나 먹거리 운동, 시민운동을 할 때 그냥 내 열정과 피켓을 가지고 목소리 터져라 외치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도 전문적 기획과 마케팅으로 시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드 뉴스 한 장도 어떻게 와 닿게 전달할지, 어떻게 눈길이 머물게 할 것인지 디자인하고 문구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등, 더 전문적인 기획과 마케팅,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내보내야 해요.

●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외부 연대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에너지산업을 더 탈중양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한전이 계속 독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모여 전국 시민 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합회 차원에서 전국 시민들

이 모였고, 제도 개선 위원장, 이사회 등 각자 역할에 따라 국회에 법안 발의도 하고 작년에는 청와대 청원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요. 사실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못 내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확장성을 갖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탈중앙화가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민영화의 형태로 추진된다면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비율을 줄이도록 견제해야 해요. 전국연합회도 규모가 조금 커지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먼저 간담회 요청을 해요.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민사회 조직이 규모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해요. 에너지 협동조합 만드는 진흥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협동조합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전국연합회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 저희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시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면, 그 중 50%라도 햇빛발전소 하나는 올리면서 전국 시민 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힘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립을 지원하고 발전소를 올리고 자리잡을 때까지 그분들에게 멘토 역할을 계속해요. 사실은 그 일이 손이 많이 가고 바빠지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정말 다들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확장하고 있어요.

한살림 기후위기대응팀

● 조합원의 정서를 고려하기

한살림에서 직간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고, 포장재와 같은 폐기물이나 화학농약, 첨가물 같은 환경독성에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기후위기대응팀 업무 배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팀원이 3명인데, 한 명만 (온실가스)직접배출원(스코프 1)과 간접배출원(스코프 2)을 관리하고 두 명은 자원순환, 포장 등 기타간접배출원(스코프 3)을 관리해요. 사실은 조합원들이 에

너지나 온실가스에 관심이 없다가 보다는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대중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서적인 외면이나 단절도 있으면서 피로감도 높대요. 언론 기사에서 늘 기후위기 이야기, 온실가스, 폐기물, 이런 내용을 너무 많이 노출시키니까 이제 그만 듣고 싶은 마음, 피로감이 높아져서 외면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막힘을 터보자,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후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것이 우리가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기후법상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²



김태열(한살림 기후위기대응팀 팀장)

● 온실가스 배출, 직접 혹은 간접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을 작성할 때 생협(유통부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생산 부분이나 소비 부분도 직접배출이 아닌 기타간접배출(스코프 3)에 해당해요. 실제로는 물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기타간접배출의 비중이 커요. 1차 생산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친환경 농업을 해오신 분들은 정서적인 반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왔는데 왜 지금 온실가스 배출원 취급을 받느냐.’하는 거죠. 정부에서 내놓는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법들도 눈에 물 대면 메탄이 나오니 물 대는 기간과 양을 줄

2) 한살림 기후법상운동. http://www.hansalim.or.kr/?page_id=56485

이라는 건데, 전통적인 벼농사 방법과 달라 정서적인 반감이 커요. 1차 농업 생산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하려면 배출원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막혀요. 사실 업무적으로는 기타 간접배출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돼요. 우리 한살림은 유통보다 생산과 소비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기타간접배출원이라고 하면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하지만 조합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기타간접배출원은 자기 생활에서는 물품 이용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문제예요. 그래서 포장재뿐만 아니라 저탄소 소비생활 실천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 가정집은 온실가스 배출 구조가 간단한 편이죠. 직접 배출원은 가스 사용, 자동차 연료 사용이고 간접배출은 전기 사용이죠. 가스보일러 생각해보면 연소로 인한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감이 올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생산과 폐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소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 한살림 운동과 사업의 다각화

앞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점점 운동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초고도 기술 사회로 가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어요. 많은 사회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한살림 초기의 문제의식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연결돼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그저 ‘나만 잘되면 된다, 나만 발전하면 된다, 나만 잘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나와 연결된 존재들을 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한살림운동은 이 단절된 연결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온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한살림은 외형적으로는 물품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연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운동이 진행되어 온 것의 결과로 보아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업과 활동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살림은 성장은 해왔지만,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한살림만의 길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 대중적인 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이런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생산과 소비 운동을 하면서도 문화 사업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고 우리끼리만 알고 끝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해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을 더 많이 흡수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물품 사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건 입소문으로 퍼진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생물다양성, 토종 종자 같은 주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살림이 노력해 온 분야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나 활동 측면에서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한살림 물품 사업 부문은 친환경인증, 참여인증 등 인체와 생태계의 환경 독성에 대응하는 체계가 실무적으로 잘 짜여 있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는 체계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해요. 채식 물품을 확대하거나 포장재 재사용,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물품 개발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재생에너지 전문 협동조합 또는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확장하면서 한살림 각 부문이 넷제로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봐요.

조합원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실천 캠페인과 더불어 조합원 생활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생활 에너지 전환 컨설팅 등 기후위기 대응 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 탈핵과 외부 연대활동

한살림이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연대 활동은 크게 탈핵운동과 GMO 반대 운동 정도를 들 수 있어요. 국내 탈핵운동은 사실 여러 가지 신념들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중 미군 핵무기 반대 운동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게 평화 운

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민족주의 운동이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었죠. 현재는 남한에 핵무기는 없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거의 없어졌죠. 또 탈핵은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현재 한살림이 참여하는 탈핵활동은 크게 두 가지 탈원전과 고준위핵폐기물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사실 탈원전 운동은 한국 사회 전체의 탈핵 진영과 결합하고 있는데 결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반면 고준위핵폐기물 반대활동은 해당 지역에서는 사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렬한 활동을 하죠.

지금은 한살림 내에서 탈핵운동에 불이 잘 붙지 않아요. 한살림 조합원들 전체로 보면 핵발전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핵발전 문제는 일반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알기도 어렵죠. 그래서 찬핵진영도 그동안 시민 의견은 무시하면서 일부 학자들과 산업 세력에 의해 커 온 거잖아요. 한살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탈핵운동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활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살림 탈핵활동을 지역별로 어떻게 결합할지 환경 활동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 기후위기대응팀에서 어려운 점

한살림연합에 기후위기대응팀이 꾸려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든 것은 각 업무 부문이나 각 조직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들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기후위기대응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살림 물품 사업에 대해 각자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일도 각자의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해요. 그동안 환경 독성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 업무 체계가 잡혀 있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은 아직 각 계획에 스며들어 있지 않고 별도의 일로 취급받고 있어요. 한살림 전체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설정했으니, 앞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요청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를 정리하며

이상 한살림 에너지전환 운동을 크게 탈핵운동, 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위기대응의 세 단위로 파악하고 각 그룹을 만나보았다. 한살림 구성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에너지전환 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 즉 운동의 확산을 위해 각 단위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에 더 인터뷰의 초점을 맞췄다. 위 정리에 담지 못한 각 단위의 소개와 구체적 활동 내용은 모심과살림연구소 누리집에 올라온 링크로 정리해두었다³⁾.

인터뷰의 소재는 한살림 에너지전환 운동이지만 여러 고민들이 녹아 있다. 무엇을 문제로 볼지, 실천과 제도 사이의 갈등, 운동의 주체 형성과 조직화 지원, 국가와 시민사회와 개인 사이의 고민, 한살림 실무자·생산자·조합원 사이에서의 고민, 운동성 확보와 확산 사이의 고민, 개인의 실천과 공동 실천 영역 사이에서의 고민 등을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 운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 사회 체계나 구조에 저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운동에 적용해보면, 탈핵운동은 저항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고 햇빛발전을 비롯한 기후대응 실천들은 대안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인터뷰를 관통하는 문제는 저항과 대안의 단절이 있고, 저항과 대안 안에서도 각각 분열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구조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저항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만큼이나,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중요하고 이 둘이 연결

3) 탈핵운동: http://www.mosim.or.kr/notice_study/4202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http://www.mosim.or.kr/notice_study/4205

한살림 기후위기대응팀: http://www.mosim.or.kr/notice_study/4207

되어 있어야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 저항 안에서도 탈핵운동이 다시 탈원전과 고준위핵폐기물 반대로 나뉘고, 지역의 고준위핵폐기물 반대는 해당 지역만의 일로 다뤄지는 단절은 왜 발생할까. 왜 대안에서도 에너지 생산, 공급, 소비가 다 쪼개어져서 다뤄지고, 온실가스 감축도 주체에 따라 분리되어 다뤄질까.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을 토대로 성급하게 이 질문들에 답을 해보자면, 쪼개고 단절시키는 가장 큰 힘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이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운동을 하는 이유, 저항에서부터 운동의 방향성 대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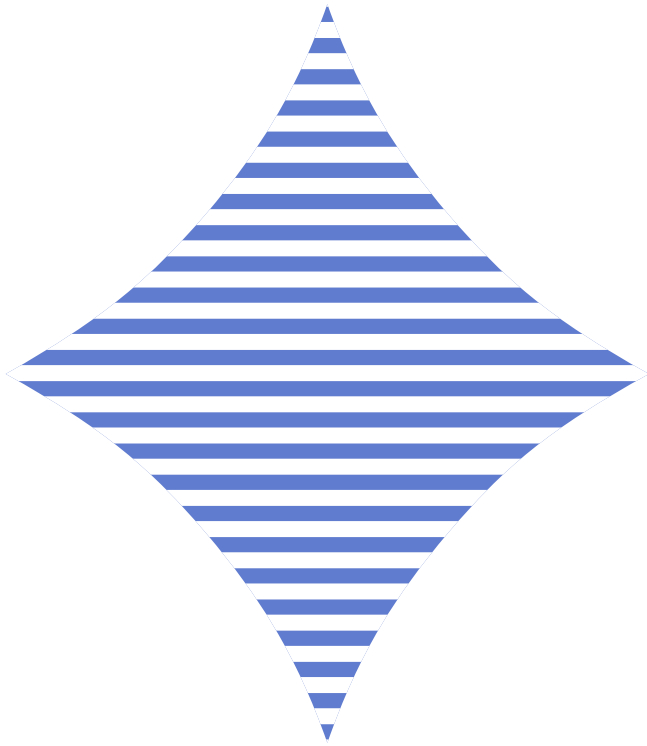
사회적 인식으로는 쪼개지고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연결 속에서 무력한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그 연결 속에서 기계 부속품처럼 함께 돌아가는 것이 편하지 튀어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하는 핵발전을 정당화하는 담론은, 바로 이렇게 단절되고 무력한 개인들 다수가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점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운동에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문제 삼으며 대중들에게 죄책감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방식은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현실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인식 자체가 우리의 연결성을 파편화하고 개인화하고 지역화하는 담론의 틀을 더 강화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에너지 구조의 중간 단계를 잘라서 도시 중심의 소비와 지역 중심의 생산을 분리시켜서 핵발전을 특정 지역의 이슈로만 틀 지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단절된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인식 차원에서 단절되었던 저항과 대안을, 쪼개진 저항들과 쪼개진 대안들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 이때, 인터뷰에서도 나왔듯,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 하

기 위한 적절한 말하기이다.

한살림에서도 개인과 개인, 조직과 개인, 실무자, 조합원, 생산자는 서로의 책임과 권한 영역을 구분 지을 뿐만 아니라 분리하고 있다. 구분은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분리하지 않고 같이 챙기고 신경 쓰는 말하기를 할 때 운동은 그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하지 않을까. 현실에서 모두가 모든 것을 같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의 일로 같이 인식하고 연결하는 말하기가 필요해 보인다.



시선



협동조합
기본법 10년,
어디로
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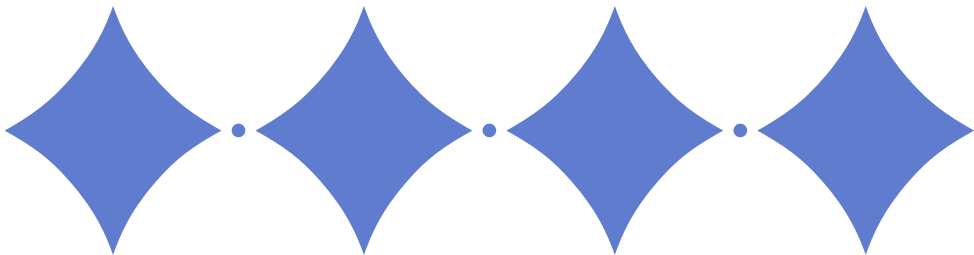
협동조합기본법 10년, 어디로 갈 것인가?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일을 30년째 하고 있는, 자칭 협동조합주의자다. 1992년 『문드라곤에서 배우자』(역사비평사)를 번역 출간한 후 저술, 교육, 컨설팅을 통해 한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협동조합관련 책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1993, 나라사랑), 『문드라곤의 기적』(2011, 역사비평사),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2013, 겨울나무) 등을 포함하여 총 8권을 썼다. 한국경제 전체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기준 10%가 되는 그날까지,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기후위기, 고령화의 3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날까지 협동조합운동을 해 나갈 생각이다.

✉ ksofive@hanmail.net



운이 좋았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다. 1992년부터 ‘법도 없이’ 협동조합 운동을 해온 필자와 초기 활동가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했다. 법이 통과되던 날 밤새 잠을 못 이루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운동은 1995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와 비슷하게 농협법, 신협법, 수협법, 생협법 등 몇 개의 특별법을 둔 채 그 이외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막고 있던 일본에서는,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 헌신했던 활동가들에 의해 대략 1980년대 초부터 이 운동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농협 개혁운동과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을 주로 전개했던 활동가들이 일본의 법제정운동을 참고하여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너무 힘들고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 협동조합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몬드라곤협동조합에 대해 강연을 하고 다닐 정도로 협동조합운동에 애정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정작 입법권자인 국회의원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 법의 제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전국 어디에서나 국회의원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농협이 바로 그들이었다. 농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을 발의할 용기 있는 국회의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절묘하게 중첩된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2008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 상품거래가 무너지면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협동조합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위기 극복 노력이 UN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수많은 일반 거대 은행들이 경영위기를 맞아 노동자를 해고하고 여전히 파생상품거래에 매달리고

있을 때, 협동조합은행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래 협동조합은행에서 파생상품거래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구성된 지 1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협동조합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늘 인식하게 평가했던 UN은 유럽협동조합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UN은 2009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오늘날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부터 배우자!”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정부였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한국 또한 양극화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 방법론 중 하나로 1990년대부터 유럽의 보수 정부들이 채택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은 한국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입안자들은 다소 제한적인 성격의 ‘사회적기업’ 제도를 넘어서는, 더욱 크고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완화정책이었다.

셋째, 오랫동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농협 내부에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문제를 둘러싼, 일종의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했다. 약 30여 년 이상 끌던 농협개혁의 핵심주제, 즉 신경분리제도화가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고 농협 전체는 이 과제를 정부와 원만하게 푸는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넷째, 집권당의 김성식 의원, 제1야당의 손학규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이 이 법을 공동 발의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농협의 선거 영향력 밖에 있는 선거구 국회의원이었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따라서 농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분들이었다. 현재의 협동조합기본법 뼈대

는 주로 김성식 의원이 제안한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사회복지정책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담당자들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정부부처 중 가장 강력한 부서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를 협동조합 주무부처로 낙점한 것으로 보아 이명박 대통령도 이 법의 제정과 향후 대처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이 짧은 시기에 중첩되었고 농협이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새로운 협동조합 금융사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5인 이상이 모여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어떠한 업종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제도가 만들어졌다.

협동조합기본법의 특이점과 그 의미

협동조합기본법은 5인 이상의 ‘비슷한 목마름’을 가진 발기인들이 모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그 사업을 통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발표한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서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어떤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인 ‘지역사회기여 원칙’을 아예 협동조합의 정의로 격상시켜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협동조합 선진국인 유럽에서조차 198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매우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즉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을 법체계 전반에서 매우 높게 다루는 것으로 이어졌다.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

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는, 특이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한국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상식의 견지에서는 좀 특이한 법인격이라고 봐야 한다.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공공적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60%를 수익지향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립인가권과 인가취소권을 정부가 행사한다는 점도 매우 특이하다. 내가 아는 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협동조합법인이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에 익숙한 필자 또한 처음엔 이것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10년 정도 지난 지금이야 그것의 현실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양한 정부 정책 실행의 통로로 삼으려 이런 식으로 설계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위탁사업의 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 것은 이런 사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5인 이상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광역단체장에게 신고필증을 득하여 활동하는 일반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전통적이고 전형적이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법인 이외에 하나의 보편적인 선택지를 더 갖게 되었다. 이제 그는 협동조합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생협동조합의 낮은 작동률, 하지만 희망의 씨앗들이...

지금까지 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무려 25,000여 개에 달한다.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20만을 넘었다. 약 9년여에 걸쳐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생겨난 것은 180년 세계협동조합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100여 년 정도 지난 후 협동조합 역사가들은 이것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벤처기업보다 약 3년 정도 더 긴 스타트업 기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스타트업 기간을 보통 7년 정도로 잡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직 그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다.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협동조합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태중에 있는 협동조합 중 약 50% 정도가 제대로 ‘작동’(‘성공’이 아니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처럼 매일매일 협동조합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현장전문가의 관점에서는 그 작동률이 아직 20% 이하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초기 5년 동안 작동률은 10%를 밑돌았었다. 그나마 중간지원기관이 활성화되고 실패의 경험이 공유되어 ‘준비된 설립’이 늘어난 최근 들어 좀 높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이 설립되어 실제로 작동하는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설립 7-9년 차에 접어든 신생협동조합들 중 태중을 빠져나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협동조합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동 중인 협동조합의 약 10%에 해당하는, 즉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 중 약 2%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협동조합의 성장역사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전통적으로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일반기업의 성장경로와 좀 다

른 성장경로를 갖는다. 이것을 협동조합의 ‘점프식’ 성장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어떤 신생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목마름을 확실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질 때 그 협동조합은 짝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 협동조합모델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전국의 잠재 조합원들에게 복사된다. 그렇게 생긴 다수의 유사협동조합은 연합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규모를 키우고 사업모델을 고도화시킨다. 이럴 때 1년 사업규모가 5억 원 남짓하던 협동조합이 10억 원, 20억 원, 40억 원,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100억 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다. 영국의 로치데일 소비조합이 그러했고 독일의 라이프라이젠 신용조합이 그러했으며 농협, 수협, 생협의 성장역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몇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가보다는 설립된 협동조합 중 성장잠재력을 갖춘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신생협동조합 중 그런 짝수 있는, 점프성장이 기대되는 협동조합들이 일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가 부딪친 주요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과제와 협동조합운동의 대응

새로 생겨난 협동조합이든 오래전부터 활동하던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은 조합원 편익을 높이는 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 사회가 부딪친 보편적인 과제들에 응답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배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성장 전망은 그 사회의 보편적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냐,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가 부딪친 주요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양극화의 심화, 둘째 심각해지

는 기후위기, 셋째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문제다.

1) 양극화의 심화와 협동조합운동의 대응

1998년경 IMF 구제금융 사태부터 본격화되어 2008년 금융위기 국면을 거쳐 최근 코로나 사태와 수도권 주택가격급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 지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소득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함께 자산 부문에서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및 곡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협동조합운동은 이러한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한 협동조합은 매우 짝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법인택시 시장에서 벌어지는 택시협동조합운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약 24만여 대이고 이 중 16만 대는 개인택시, 8만 대가 법인택시다. 법인택시 중 택시협동조합은 총 68개로 이들이 운행하는 택시는 약 4,000여 대이다. 보통 법인택시의 평균 운행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 약 50%에서 이후 약 30%로 내려앉은 상태이나 택시협동조합의 운행률은 95%를 넘고 있다. 현재 법인택시 시장전체에서 택시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시장점유율은 단순하게는 5%이나 실질적인 운행률 기준으로는 이미 10%를 넘어섰다. 대구지역의 경우 40%를 웃돌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10년 이내에 택시협동조합은 법인택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

인택시는 자영업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 법인택시 노동은 막장노동으로 치부되고 있고 60세 이하 노동자들의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구모델’로 불리는 택시협동조합 조합원기사들의 소득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아졌고 노동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수많은 법인택시들이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택시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막장노동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탈출구가 마련되었고 양극화 완화를 실천한 모범적인 협동조합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양 및 돌봄 시장에서 요양보호사와 돌봄 노동자들이 조합원 주체로 참여하는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책임노동에 종사하기 전 이들은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낮은 급여에 비싼 수수료를 떼이고 뒷돈까지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회사의 주인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들 사업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다. 이들은 단순고용노동자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고 스스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조합원 노동을 통해 노동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 흐름 또한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명백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설립된 신생협동조합의 상당수는 소위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강사,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래머, 문화예술인들로 대표되는, ‘고학력에 우아하지만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홍보와 공동사무국 구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여 소득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협동조합은 이

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협동조합의 한국식 모델도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소득증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나 이 흐름이 커지고 이들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 생각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활성화 흐름 또한 매우 뚜렷해지고 있다.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소협 아카데미)이 만들어져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활로 모색 작업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를 보아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기는 하나 이들의 사업 전망 또한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코로나 기간 동안 일반 소상공인들의 휴·폐업률에 비해 협동조합으로 뭉쳐있는 소상공인들의 휴·폐업률은 현저하게 낮았다. 몇 년 전부터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꽃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의 전개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 코로나 사태가 닥쳐 주춤해진 상태이기는 하나, 코로나 이후 이 흐름의 공격적인 전개 양상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덧붙여,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자활 운동에서의 적극적인 협동조합설립 움직임 또한 명확해졌다. 지역자활센터 자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대상자들의 자활근로 이후 자활기업설립에서 협동조합법인 선택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었다. 광역 단위의 자활기업협동조합과 전국단위의 자활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자립과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서 협동조합운동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활근로 대

상자, 프리랜서 노동자들, 택시 및 돌봄 노동자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소득과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뛰어들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대표적인 ‘씩수 있는’ 신생협동조합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운동 전체의 지혜와 용기가 모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기후위기와 협동조합운동의 대응

기후위기 문제에 정면으로 맞부딪쳐 자신의 존재의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협동조합운동이 사회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협동조합운동은 생협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생협운동은 여전히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신생협동조합 중에서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협동조합들이 점차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이들의 성장세는 최근 들어 매우 놀라운 상황이다. 물론 아직 단위협동조합의 규모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로 담론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상당한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제로웨이스트와 자원 재활용을 추구하는 협동조합들의 숫자도 점차 늘고 있고 사업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소셜벤처와 청년협동조합의 창업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볼 수 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도 있다고 생각한다.

3) 급격한 고령화와 협동조합운동의 대응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룬”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영양과 돌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양 시장에서 횡행하는 상업주의와 수익 우선 경영행태는 직접적인 영양수요자로 바뀐 부모님 세대와 그들의 자식 세대(우리 세대)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그나마 그 서비스에서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요양시설은 전체 요양시설의 1%에 머물러 있고 현재의 정부 재정 상태에 비추어 이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보건복지부에 의해 청사진이 구상되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수요에 비해 그 실행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이 시장에서 최근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통합돌봄 체제의 구축 문제다. 이 중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졌거나 갖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덜 들어가는 방문요양 및 돌봄서비스와 함께 질 좋은 서비스(‘존엄케어’라 부른다)를 갖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최근 순천의료생협이 운영하는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모델과 익산의료사협이 추진하는 존엄케어 요양병원 설립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29개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와 경영자 중 지역 통합돌봄 시스템에 의료사협이 직접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는 하지만 이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 정도가 아직 낮은 것이다. 필자로서는 이게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기는 하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제시될 때 안성의료사협이나 안산의료사협 같은 다소 규모가 있는 의료사협들부터 시작해 전국의 모든 의료사협들이 이 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초기적 전개

신생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별, 유형별, 업종별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대개는 지역협의회와 전국협의회, 유형별 연합회와 업종별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먼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에는 약 10여 개의 업종별 연합회와 지역연합회 조직들이 느슨하게 참여하고 있고 지역단위로는 약 50% 가까운 지역에 협동조합협의회나 사회적경제협의회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연합회 조직은 3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이 모이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수가 생겨나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협동조합 네트워크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합회는 꽤 많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연합회답게 작동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다. 가장 큰 원인은 연합회에 참가하는 회원협동조합들이 아직 초기사업단계라 연합회 분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회원조합의 분담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연합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연합회 운동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조합의 기본적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세계협동조합 운동의 경험에서도 이미 입증된 것이다. 비슷한 사정으로 전국협의회와 지역협의회들은 대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자구적인 대응체계로 작동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아직 영성하다.

필자는 2013년부터 몇 년간 회원조합들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협동조합연합회를 의욕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몇 차례 제동을 건 적 있다. 사실 그 상황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고정적 예산이 필요 없는 비상설 협의회와 포럼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질 필요는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 내에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좀 더 긴밀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

신생협동조합들을 위한 인프라는 서서히 매우 느리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법률적 지위, 금융지원제도, 지원기관 운영 및 협동조합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1) 협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일반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법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 확인증이 발급되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약 4년여 전부터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도 있다.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회기말 결산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법인과 동일률로 법인세를 내고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과 이용배당을 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전체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투자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어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위탁 및 운영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으로 쉽게 인증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때 고유의 목적사업계정으로 적립하여 법인세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정부의 조달 부문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물론 관련 지원조례가 있는 지방정부에 한해서다.

2) 금융지원제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광역 단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은 보증서 없이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공장이나 건물을 구입할 때 장기저리로 용자해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가끔 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약 6백억 원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의 협동조합들에 수년간 여러 차례 저리용자를 해준 적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준으로 볼 때 현재의 금융지원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들이 성장을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3) 지원기관운영 및 협동조합교육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 내에 협동조합본부가 활동하고 있고 전국 광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들이 지역 내 협동조합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주로 협동조합 교육과 컨설팅 지원, 협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한시적 공모사업 제공 등이다. 광역 차원에서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

하는 곳은 현재 서울과 대구 두 군데이다. 특정 분야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전국 10여 개 ‘소협아카데미’가 있고 과기부가 운영하는 과기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있다.

초중고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대학 중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상지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 있으나 그 규모가 아직 작다. 협동조합을 가르치는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몇 군데 개설되어 있다. 협동조합 관련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몇 군데 있다.

전반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은 협동조합 역사가 깊은 유럽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젊은 협동조합 연구자들을 양성하여 협동조합 연구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대학교 학부과정은 많이 부족하다.

선배협동조합과 후배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협동조합지역사회론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전 8개의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선배협동조합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후배협동조합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둘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그 감도는 매우 약하고 접촉 국면은 제한적이다.

1) 농협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동조합이다. 단위조합 1,140여 개, 전체자산 750조 원, 1년 평균 사업액 약 600조 원, 조합원 수 200만 명의 세계적인 협동조합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농협 중 규모에서 3위를 자랑한다. 1960년대 관제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이름은 협동조합이었으나 사실상 ‘농업공사’의 역할을 해오다

1988년 민주화된 이후 협동조합의 꼴을 갖추기 시작했다. 협동조합 나이로는 이제 서른다섯 살 정도 된다.

농협은 엄청난 자산과 사업액, 농촌사회에서의 가공할만한 영향력 등에 비해 실상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만 조합원의 평균연령은 72세이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1/4은 이미 요양시설에 계시고 10년마다 약 100만 명의 조합원 자연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해 지역 내 후배협동조합들과 연대하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건 ‘멀쩡한’ 조합장이라면 모두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후배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에 인색하다. 필자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에서 농협이 후배협동조합들과 연대기구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독려하는 법조문 때문이다.

후배협동조합의 처지에서 보건대 농협 선배들이 펼쳐주는 우산 안에 후배협동조합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게 틀림없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김제시의 사회적경제 예산보다 김제지역 농협들의 지역사회 기여 예산이 약 10배 이상 크다.

2) 신탁

1960년대부터 들불처럼 타올랐던, 가장 오래된 민간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을 지닌 선배협동조합이다.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운동의 주체로서 자리 잡아왔으나 IMF 직후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어려워졌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의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 지역운동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잃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회복세가 뚜렷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지역

내 후배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다. 일단 후배협동조합들로서는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생협

가장 가까운 선배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4개의 연합회로 나뉘어 있어 지역 내에서 생협활동가들 간에 갈등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인 연대기구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지역도 꽤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후배협동조합들의 후견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연합회의 회원조합으로서 후배협동조합들과의 접촉 국면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선배협동조합이다.

4)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의 제기와 실천

선배협동조합과 후배협동조합들의 연대와 협력은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친교 한다고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1980년 레이들로 박사의 문제 제기, 즉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전체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배협동조합과 후배협동조합들은 공동의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공동실천의 과정에서 연대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위상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필자가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농촌 혹은 도농지역에서의 공동프로젝트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 통합돌봄 사업’의 전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사협이 이 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존엄케어를 지향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후배협동조합들만의 힘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농협이나 신협, 생협 등 선배협동조합들이 나설 때 매우 손쉬워지는 일이다. 사실 농협의 경우는 자기조합의 조합원 복지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이나 도농지역의 신협과 생협도 조합원 복지나 조합원 부모님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로 인해 지난 9년간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은 훨씬 풍성하고 역동적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누렸고 그 기회를 통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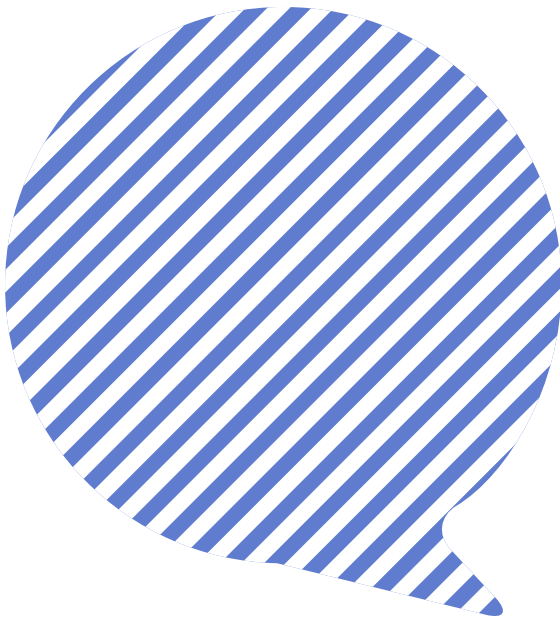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고령화 같은 현재의 주요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과제들에 대응하고 일정한 역할을 해낼 때 협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위상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미 신생협동조합 중 이러한 사회적 과제 대응에 집중하는 싹수 있는 희망의 씨앗들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는 한, 시간이 갈수록 이 협동조합들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규모화를 이룰 것이며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싹수 있는 신생협동조합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 수준은 낮고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이 문제에 계속 천착해 들어가야 하고 정부 또한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워낙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분단국가이다 보니 거기에만 기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력갱생의 원칙을 가져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선배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배협동조합들이 그나마 기댈 곳이라곤 앞서 나간 선배협동조합들밖에 없다. 선배협동조합과 후배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주의자들의 오래된 꿈, 즉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일구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후배협동조합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선배협동조합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선순환연대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연대와 협력은 깊어지고 강해질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후배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접근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거 아닌가? 선배협동조합들과 좋은 관계 트기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필자에게 협동조합운동에서 결국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언제나 머뭇거리림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한국의 협동조합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 기준 10%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현재 약 12%인데요. 현재 한국은 3%를 약간 넘었습니다. 그중 농협이 2.7%이고요. 그런데 농협은 성장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나는 신생협동조합과 선배협동조합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것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생협동조합의 성장잠재력은 이미 감지되기 시작했고 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워낙 다이내믹한 사회니까요.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의 비정하고 차가운 시장경제가 조금은 따뜻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좌담



전환의 시대,
모심과살림의
지혜를 듣다

특별 좌담회



박맹수



황도근

“
전환의 시대,
모심과살림의 지혜를
듣는다
”



윤형근



신명호

좌담 일시: 2022년 5월 24일 오후 3시

참 석: **박맹수**(모심과살림연구소 초대 이사장, 현 원광대학교 총장)

황도근(모심과살림연구소 2대 이사장, 현 상지대 교수, 원주생명협동교육관장)

윤형근(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사 회: **신명호**(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기록 및 정리: **임채도**(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신명호 _ 모심과살림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박맹수, 황도근 전임 이사장님들, 그리고 연구소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님을 모시고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형식을 띠거나 결론을 예비하기보다 연구소가 창립된 배경과 걸어온 길을 중심으로 한살림운동의 시대적 역할과 연구소의 과제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기가 정말 어렵는데요, 우선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박맹수 총장님께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당시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생명문화운동과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출범

박맹수 _ 아무래도 제가 연구소 초창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미리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왔습니다. 제가 장일순, 박재일 선생님을 모시고 받은 가르침 중 하나는, 원래 한살림이 출발할 때 세 방면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유기농업과 한살림농산, 둘째는 당시 최열 씨 등이 주도한 환경생태운동, 그리고 셋째 생명문화운동이 그것입니다. 이 세 흐름이 모여 ‘한살림모임’이 만들어지고 ‘한살림선언’(1989)을 발표하게 되었지요.

저는 당시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막내로 모임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일본 유학을 가게 되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고 그해 11월 7일 ‘한살림모임’에 편지를 보내 박사학위를 마친 보고도 드릴 겸 인사차 찾아보였습니다. 당시 한살림 내부에서는 ‘한살림모임’의 생명문화운동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윤형근 선생도 당시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2002년 3월 15, 16일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전국생명운동가모임이 열렸어

요. 그때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죠.

그 모임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면서 ‘한살림이 커지니 생명문화운동을 확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렇다면 연구소라는 형식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모였고,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준비되었죠. 그해 4월 19일 서울 인사동 ‘독로골’에서 한살림 기획위원회와 회의를 했고, 5월 6일 양재동에서 다시 준비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이때 이상국, 박재일 선생님과 한살림운동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연구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형근 선생이 초대 연구소 사무국장을 맡고 제가 소장을 맡아 모심과살림연구소가 첫발을 뗀 것입니다.

이어 5월 24, 25일 양일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운동, 문화운동으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5월 25일은 장일순 선생님 8주기 추모행사를 했던 날입니다. 제 박사논문이 그동안 당연시되던 동학의 남접, 북접 사이의 대립과 갈등에 관한 것인데, 일본에서 새로운 사료를 가지고 당시 동학 내부를 재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8주기 행사 때 장일순 선생님 묘소에 저의 박사논문을 헌정하고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사단법인 한살림 이사회에 참석해서 연구소 설립 보고와 인사를 드렸어요.

신명호 _ 말씀을 들어보면, 설립 당시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문화운동의 담론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맹수 _ 당시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 한살림에는 ‘이야기꾼’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비전에 대한 이야기, 거대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을 거시적이고 전일적으로 보는 이야기들입니다. 초창기 한살림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초기 모심과살림연구소를 만들 때, 우리 시대의

생명꾼들은 모두 모였어요.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021년 7월 백낙청 선생, 김용옥 선생, 그리고 제가 특별좌담을 하고 그 내용이 작년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실렸는데, 이례적으로 매진이 되었답니다. 이 좌담회는 김용옥 선생의 ‘동경대전 1, 2’ 출판기념을 겸해서 진행되었는데, 이 책도 2만 질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난 19세기 이래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초기 우리나라는 개화파와 척사파가 대립하고 이후 개화파가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질곡의 역사가 이어졌죠. 이 역사에 대한 성찰 속에서 개벽파라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게 돼요. 개벽파 1세대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꾼들, 김범부, 장일순, 조동일, 김지하, 표영삼, 채현국, 김종철 선생님을 들 수 있겠지요. 김지하 시인이 지난 5월 8일 돌아가시고 채현국 선생님도 작년 4월 돌아가셨죠. 또 2년 전 김종철 선생님도 너무 일찍 별세하셨고요. 시대 담론을 일으키는 어른, 지식인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최근 여러 곳에서 개벽파 2세대들이 뜻을 이어가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윤형근 _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전신은 ‘한살림모임’이라고 해야겠지요. 1986년 서울 제기동에서 ‘한살림농산’을 내고 이후 먹거리 중심의 밥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초기 한살림 어르신들은 우리가 하려는 게 생활협동운동이면서 동시에 화폐중심,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생명 중심의 가치 사회로 전환하는 생명문화운동이라고 하셨어요. ‘한살림모임’은 이처럼 생명을 중심가치로 하는 문화운동을 지향했고, 그런 생각을 담은 ‘한살림선언’을 만들기 위해 11차례 공부모임, 네 차례 토론회를 했습니다.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는 당일 창립한 ‘한살림모임’을 통해 생명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문화운동을 하겠다고 결의했지요. 하지만, 그 후

여러 이유로 ‘한살림모임’이 유지되지 못했어요. 재정도 어렵고 동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운영이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사무국장이었는데, 저의 부족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수 _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의 책임이 아니죠.

윤형근 _ 1994년경 한살림조직은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통합되는데, 그건 생명문화운동을 추진하던 별도의 주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밥 운동이 안정되면서 2002년경 뜻있는 몇몇 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한살림의 생활협동운동을 기반으로 이제라도 생명문화운동의 모태, 작은 근거지라도 만들어보자고 연구소 창립 논의가 시작된 거죠.

황도근 _ 1994년 장일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원주도 그때를 전후로 대부분의 1세대 선배활동가분들이 원주를 떠나면서 많이 허전해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 김지하 선생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었어요.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생명문화운동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지요. 김지하 선생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 서울과 원주에서 몇 번 뵈었고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장일순 선생님 7주기인 2001년, 김지하 선생님이 행사에 직접 오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던 시절이었지요. 그때는 김지하 선생의 건강이 괜찮아서 8주기에 오셔서 생명문화운동을 다시 해보시려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셨고, 서울과 원주를 이어나면서 생명문화운동을 확산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지요. 이런 분위기에 힘을 얻어 그때 원주에서는 2세대인 최종덕 교수, 김용우 선생, 최혁진 씨, 그리고 저도 함께 참여하여 ‘원주지역 협동운동협의회’ 결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지역에서 여러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2002~2003년경에는 일본 생협을 단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모심과살림 연구소가 태동하던 시기는 원주에서도 2세대들의 지역공동체인 협동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던 시기였지요.

신명호 _ 그 당시 ‘한살림모임’이 잘되고 성공했으면 모심과살림연구소는 만들어지지 않았겠군요?

윤형근 _ 아마 다른 형태로 이어졌겠죠. ‘한살림모임’이 하려 했던 것을 다시 잘하고 싶어서 연구소를 만든 것이니까요. 비슷한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1990년대 후반 김지하 선생님을 중심으로 ‘생명민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그물코’라는 잡지를 발간했고 이를 통해 생명담론을 확장하고자 시도했지만 잘 안되었죠. 생명민회 활동도 지속되었지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 가닥 흐름으로는 김지하 선생님의 제안으로 손학규 선생이 당시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몇 해 동안 ‘세계생명문화포럼’을 크게 개최하여 생명담론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김지하 선생님은 모심과살림연구소도 그 여러 흐름 중 하나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명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모심과살림연구소’로 하자고 하니깐 괜찮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2년 3월 15, 16일 토지문화관 행사 때는 ‘생명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그 후 당시 ‘바람과물연구소’ 이름처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모심과살림연구소’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모심과살림은 동학의 양천(養天), 시천(侍天)의 개념에서 그 용어를 잡아냈었던 것이죠.

박맹수 _ 2002년 한살림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김지하 선생님, 생명평화운동 등 당시 외부의 흐름도 활발했어요. 그해 6월 29일 ‘우리쌀 살리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에 참여할 때 ‘한살림 모심과살림연구소’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대학에 돌아가지 않고 모심과살림연구소에 전념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를 데려다 놓으려면 대우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웠죠. 그래서 연구소 출범하면서 결국 비상임 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2002년은 안팎으로 연구소가 출범할 호조조건이었습니다. 그해 7월 전진상

기념관에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라는 포럼을 개최했고 이때 김종철, 이남곡, 김지하, 황대권 등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당시 우리는 꿈이 컸습니다. 외부의 많은 분들도 연구소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윤형근 _ 초기 연구소가 진행한 ‘모심과살림 학교’에는 30~4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종교 쪽 환경운동과 당시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에 직면한 농업 농민진영,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도법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의 생명 환경 생태운동, 새만금 문제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맞물려 있던 시기였어요. 1989년 ‘한살림선언’ 당시가 ‘생명, 생태’라는 용어가 발신되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이때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담아내는 그릇들이 마련되었던 시기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명담론과 동학사상

신명호 _ 생명 담론은 우리의 자생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당대의 세계적 담론, 해외 담론과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형근 _ ‘한살림모임’에서 장일순 선생님이나 김지하 선생님은 서구의 사회운동에서 뿌리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동학을 근간으로 한 우리의 내용으로 우리 나름의 방향성과 담론을 고민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김종철, 박용남, 황대권 선생님은 서구 생태 담론과 우리 현실의 만남을 모색하셨던 것 같고, 문순홍 선생님은 또 다른 특색이 있었어요. ‘한살림모임’은 동학에서 출발해서 서구 보편 담론을 결합하고자 했는데 뜻한 대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도근 _ 70년대 중반 원주의 지학순 주교님과 김지하 선생 구속사건으로 민주화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때 화두가 정의·평화 사상이었지요. 그런데 8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만으로는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생명담론이 원주에서 시작되었어요. 장일순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난 후 2002년경 생명, 평화라는 키워드를 사회적 화두로 만든 데에는 김지하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도법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도 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지요. 두 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환경운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요. 결국 원주에서 싹트기 시작한 생명담론이 한살림운동, 생명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죠.

신명호 _ 생명에 관한 담론은 장일순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도근 _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반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 생명, 평화의 분위기가 크게 일어났죠. 이미 1977년 김지하 선생이 출옥한 후 장일순 선생님과 대화록을 보면, 장일순 선생님은 부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공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죠. 또 1978년 원주 신림 출신인 윤노빈 교수(김지하 선생의 학교 동문)가 신생철학을 발표하면서 생명과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연구하고 있었지요. 누가 처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생명이란 화두가 처음 이야기되던 시절이었던 같아요. 모심과살림연구소도 그런 시대 흐름 속에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윤형근 _ ‘생명’은 분명하게 원주 그룹에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1981년 ‘원주보고서’에서 생명담론을 본격화했고, 김지하 선생님의 저작인 ‘뱀’(1984)에도 많이 정리되어 나왔지요. 그전에 1977년 무렵부터 장일순 선생님, 김지하 선생님 등 원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우리 운동의 방향을 생명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윤노빈 교수님은 헤겔철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생명’보다는 ‘생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정신, 운동의 방향으로서 생명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내세웠던 것은 원주의 장일순, 김지하 이분들이죠. 그러다 9.11테러(2001), 이라크전쟁(2003) 이후 생명과 평화이야기가 확산하면서 시대적 화두가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호 _ 한살림에서 동학이야기를 처음 끄집어낸 사람은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맹수 _ 맞습니다. 그리고 원주그룹이 미래세대에 맞게 동학을 새롭게 해석했어요. 여기서 장일순 선생과 김지하 시인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봅니다. 장일순 선생님이 동학을 깊이 받아들이신 것은 해방 직후였어요. 또 김지하 시인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집안 내력도 있고요, 4.19가 기폭제가 되어 그때 대학가에서는 우리 역사와 사상,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붐이 일어나 동학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동학에 깊이 천착하게 된 것은 70년대 감옥에서였다고 하죠. 80년대 초 김지하 선생님은 석방되신 후 그동안 응축되었던 것들을 풀어내서 ‘남녘땅 뱃노래’ 등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동학을 특정 종교나 지나간 낡은 사상이 아니라 새롭게 이어갈 시대정신으로서 역사로 호출한 데에는 두 분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도근 _ 무위당 선생님이 동학을 빨리 접한 것은 맞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청년시절인 1946년 해방 후 진보혁신계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동학을 접하셨고, 특히 천도교 분들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되면서 깊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위당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람과 자연에 대한 측은지심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애정이죠. 무척 감성적이셨어요. 해월 선생을 매우 존경하셨고요. 1989년경 제가 찾아 뵈었을 때 방안 한쪽에 조부님 사진, 다른 한쪽은 해월 선생 사진을 옆

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모셔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무위당 선생님을 생각으로만,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무위당 선생님 말년인 1990년 해월 최시형 선생 피체지 추모비 건립행사가 원주 고산리에서 열렸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그렇게 우셨다고 해요. 해월 선생을 잘 모시고 싶었던 깊은 심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원주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밥 먹여 주시고, 해월 선생 이야기를 해 주셨지요. 밥모심 제사도 지내셨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걸어 다니는 동학’이라고 선생님을 말하곤 하셨지요. 아마 장일순 선생님은 해월 선생을 닮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윤형근 _ 그건 김지하 선생님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유가의 선비적 풍모가 있는 분인데, 해월 선생을 따르고 싶어하셨죠. 생명담론을 언어화 한 것은 김지하 선생이지만 그 기반은 장일순 선생님의 삶과 생각에 잇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호 _ 무위당 선생님이 노자 강의도 하셨지요?

황도근 _ ‘노자이야기’는 이현주 목사와의 대담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무위당 선생님은 노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말년에 옆에서 볼 때 노자 이야기보다 해월 선생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셨지요. 그때 서화에 쓰시던 호도 무위당 대신 조한알(일숙자 一粟子), 하나의 풀(일초 一草)을 많이 쓰셨지요. 풀 한 포기도 한울님 모시듯이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마도 ‘노자 이야기’라는 책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형근 _ 장일순 선생님 정도면 노자나 맹자나 논어나 다 같은 근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공자, 맹자 이러면 유교의 고리타분한 형식주의 이

런 걸 떠올리는데, 장일순 선생님이 맹자를 강의하시는 걸 듣고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일순 선생님에게는 해월이나 노자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의 20년 활동

신명호 _ 장일순 선생님은 동학사상을 이어받으셨는데 왜 협동조합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가 공자와 맹자는 저쪽 세계를 이야기하고, 노자와 장자는 현실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협동조합은 지금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지’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 모심과살림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연구소는 처음 정신에 따라 잘 이어져 온 것 일까요?

박맹수 _ 그 질문은 연구소나 한살림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만들고 난 후, 2016년 2월 제가 연구소에서 물러났는데, 저의 짧은 날들이 고스란히 연구소와 같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이곳에 올 때 반성문을 쓰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생명문화운동을 말하고 한살림선언과 생명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을 주장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꿈은 컸었는데, 과연 현실에서 실천한 것은 몇 점짜 리였을까... 돌이켜보면 아쉽고 부족하고 서툴렀습니다. 중간에 연구소 체제의 여러 변화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살림 10주년, 20주년 관련해서 현안이 생기면 연구소가 모두 스톱이에요. 그 현안과 사업에 올인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연구소를 없애자는 말은 없었어요. 그게 위안이었습니다.(웃음) 애초 설립 목적으로 내걸었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구성원들이 여전히 공감하고 지지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아쉬움이 컸지만, 애초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황도근 _ 2012년 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때도 생명담론과 동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어요. 김지하 선생님의 생명과 평화의 길, 도법스님의 생명평화결사 등 여러 그룹들과 연계했는데 그때 주요섭 소장이 많은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6년부터 제가 6년 정도 연구소 이사장을 했는데, 당시 한살림생협의 조합원들이 증가하면서, 생명담론 외에 우리 조직의 힘든 현실적 문제도 다뤄 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한살림 핵심 직원이나 임원들에게도 ‘한살림선언’은 쉽지 않은 텍스트예요. 상당히 담론적인 대화라서 일반조합원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당시 생협의 공급규모가 엄청 늘어나고 사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명담론 외에 한살림 정책,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어 달라는 요구가 연구소에 많이 전달되었어요. 특히 지역 이사장님들과 활동가분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심과살림연구소가 한살림 정책 연구소의 역할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지요. 결국 연구소 이름도 한살림을 앞에 붙이려고 했었어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연구소의 정체성 논의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2018년 후반부터 한살림 생협의 공급액이 떨어지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매장사업에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구소가 조합원 의식조사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 당시 새로 부임한 임채도 소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때 이후 연구소에 대한 평가가 조합원 사이에서 다시금 인식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찾아가는 연구소’라고 해서 현장을 다니기도 했지요. 앗튼 최근까지 연구소는 물품 문제, 노동문제 등 한살림의 주요 현안을 연구하면서 생명과 협동의 새로운 담론을 연구하고 실천사례를 모아가고 있지요. 현재 연구소는 담론연

구과 정책연구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 _ 연구소가 ‘한살림모임’을 모델로 출발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자원도 충분히 없이 몇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우선 한살림이 생협사업을 하면서 외부 운동과의 관계가 그리 많지 않았습디다. 생태·생명·환경·시민운동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이 없었죠. 왜냐면 생협 사업이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생명운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하는 기능에 대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운동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 기능, 세 번째로 한살림 내부의 연수와 교육기능을 연구소에 맡겨서 같이 진행했죠. 2006년 한살림 20주년 기념사업을 연구소가 거의 도맡아 했고요. 백서 만들고, 역사 쓰고, 기념사업하고. 그러다가 대외연대 기능은 한살림연합의 기능으로 옮기고, 연수 기능은 연수원이 만들어지면서 연구소에는 연수 기능의 일부만 남게 되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소가 생명문화운동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걸 잘했느냐 하는 거지요. 한살림 전체를 포괄해서 생명문화운동이 우리가 원래 그림을 그렸던 만큼 잘 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살림선언이 나왔을 때 세상의 모습이 아주 바닥의 상태였는데, 요즘 생명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희의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황도근 _ 저는 2016년 연구소 이사장이 되자마자 한살림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해서 핵심적인 분들과 공부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2의 한살림선언’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을 만날수록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참여 욕구도 상당히 강했기요. 그래서 공부모임 외에도 조합원, 활동가, 이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때 모았던 많은 의견들을 책자로 만들었지요. 한

살림이 처음 태동할 때 한살림선언은 몇몇 지식인 리더들이 주도했지만, 30년이 지난 후 한살림은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해졌어요.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올라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들 참여하고 싶어했고, 매우 지적이고 적극적인 조합원, 이사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한살림 30주년 기념식에서, 윤형근 전무님이 ‘세상의 밥이 되자’고 글을 썼고, 저도 기념식에서 최종발표를 하면서 무조건 바꿔보자고 얘기했지요. ‘생명은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다’라는 명제처럼, 30년 전의 한살림선언에 머물면 안 되고 새롭게 변화해야 앞으로 30년을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소가 그런 논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살림과 모심과살림연구소

신명호 _ 윤형근 전무님께서는 그런 기치로 출발한 생명문화운동이 과연 잘 해왔는가, 또 비슷한 생명 생태 담론들이 많아졌지만 세상은 여전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명문화운동을 잘하면 적어도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근 _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운동하는 거 아닐까요?(웃음) 제가 어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비관적이어도, 운동하는 사람이 비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운동가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셨는데, 요즘 제가 점점 자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웃음)

박명수 _ 저는 연구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연구소는 한살림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끼리 하는 운동은 한살림이 아니라 탄살림이죠. 외부에 생명지향 단체

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해보자는 것이지요. 둘째, 황도근 교수님 말씀처럼 한살림 조직이 커지고 매장이 늘어나고 매출이 커지면서, 연구소의 숙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초창기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독립법인을 지향했던 겁니다. 제가 연구소 이사장을 내려놓고, 대학 총장이라는 ‘지옥체험’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일을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과정 자체에 의미를 뒀야 합니다. 대학 총장을 하면서 현장경영, 소통경영, 데이터경영, 지역과 상생경영 등을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것을 해결할 실마리도 현장에 있어요. 항상 결과는 예측한 바대로 답이 안 나오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서로 열린 대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 거죠. 연구소도 역시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애초 고민했던 올바른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이 아니면 현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따로 없다는 것이 확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생명원리에 입각한 담론을 어떻게 제시하고 운동을 할 것인지에 관해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한다고 믿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연과의 대립 속에서 결국은 내가 살려면 끊임없이 타자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적 전제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둡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 모순을 어떻게 녹여 낼까 고민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총장 4년 재임 동안 많은 걸 겪었습니다. 학교 학생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참 다사다난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생명의 실상에 다가간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생명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두운 것도 있고, 항상 한쪽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윤형근 _ 전적으로 동감합니다.(웃음)

황도근 _ 저는 지금 원주 치악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생명협동교육관’에 가면 딱따구리가 딱딱거리고, 새들도 지저귀고,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곳입니다. 최근 한살림 조합원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침부터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미디어만 들여다봅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도덕적 상식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은 여러 사람들의 대화 내용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는데, 코로나와 스마트폰 영향으로 이제 자기 이야기만 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분열하고 개별화하고 있어요. 생명은 계속 바깥과 소통하는 것인데, 다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운동은 실패한 것입니다.

1800년대 중반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큰 성공을 했지만 하층민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경제 공황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회적 약자가 생존의 한계를 느꼈을 때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구가 환경위기로 망가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삶이 파괴되고 있어요. 생명운동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우리로서는 운동적 차원으로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새로운 등불을 찾아서, 치악산으로 무위당 선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큰 운동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두울 때 작은 불빛이라도 된다면 족하지요. 저희가 왔던 길이 그래도 시대의 작은 등불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살림은 100년 가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희망을 주는 한살림이 되어

야 하겠습니까.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큰 계산은 계산이 없다’

신명호 _ 한살림운동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운동, 환경생태운동, 그리고 생명문화운동과 철학. 오늘날 소비자협동조합이 많지만 철학과 등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등불이, 가치가 세상 속에서 구현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사상과 철학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조합원들이 어떻게 그 변화와 영향을 받게 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면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치나 철학의 측면에서 우리 한살림선언의 사상을 성장이나 아니냐의 견지로 본다면, 저는 탈성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있지요. 이 입장에서는 성장이 안 일어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계속 그런 딜레마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맹수 _ 한살림 초기에 지금 말씀하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두고 김지하 시인을 모시고 명동에서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운동이 성공하려면 자기 수양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주요섭 선생과 4~5년 같이 활동할 때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 조직은 살아남고,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조직은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손해를 많이 본 분이 장일순 선생이죠.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온갖 사람들이 몰려가서 선생님에게 분노나 원망을 풀어내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그것을 들어주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 자기 수양입니다. 좀 손해 보는 삶을 즐길 수는 없더라도 긍정하고

넘어갈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그게 수양이고 공부거든요. 21세기에 무슨 수양 이야기를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비전과 꿈과 이상을 가진 조직은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너 스스로가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도법 스님 말씀처럼 수양, 공부가 처음이자 끝이 아닐까요.

황도근 _ 한살림 30주년 기념식에서 윤형근 전무님이 세상의 밥이 되자고 했지요. 저도 대학이 위기에 빠졌을 때 느낀 것이 있는데, 주인의식이 없어지고 다들 제 몫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런 조직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일순 선생님은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윤형근 _ 장일순 선생님이 남긴 언어 중 가장 많은 것이,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관알 텅기다가 망한다고 하셨죠.

황도근 _ 또 무위당 선생님은 ‘큰 계산은 계산이 없네’라고도 하셨지요.

박명수 _ 예전에 비슷하게 풀무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조직의 3%가 손해 보면 그 조직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황도근 _ 조직 내 이해갈등은 필연적이지요. 하지만 ‘살짝 저 주는 것’이 길게 보면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실천이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윤형근 _ 개인으로 보면 손해이고 수양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긴 합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인데, 밥은 공양, 공희(供犧),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천식천(以天食天), 생명이 생명을 먹는다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가슴을 뛰게 해야 하는데 당위적으로 밖에 이야기를 못 하니, 솔직히 제 언어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습니다.

황도근 _ 좀 전에 성장과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처음 탄생할 때 로버트 오언처럼 이념적 협동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생존하지 못하면 오래갈 수 없다는 거죠. 로치데일에서 식료품 가게로 시작한 협동운동은 현실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노력했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일순 선생님이 뛰어난 점은 결코 머릿속의 담론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고민하면서 사회운동을 하셨고, 조직이 성장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셨어요. 한살림이 100년 이상 사회적 등불이 되려면 그 안에 꺼지지 않을 연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의 성장 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동력이 무엇일까요. 장일순 선생님의 제자인 이현주 목사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위당 선생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념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물었지요. 그때 말씀이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잘 자라서 사과가 열리면 따먹어도 될까요?’라고 저에게 되물으시더군요. 자연스러우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비료 주고 땅에 농약 뿌리면서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한 결실이라면 과실을 따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사업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한살림운동은 사회의 등불이 되기 위해 사업을 하는 조직이니 우리는 항상 ‘왜 성장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하겠지요.

한살림의 거울, 사회의 등불, 세상의 소금

신명호 _ 생명문화운동의 사상, 가치관이 한살림운동을 이끄는 등불이고 나침반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스러운 성장인지, 비료를 주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무소유의 정신처럼 해석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성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박맹수 _ 그 질문에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학의 역사에서 기본 조직이 접인데, 접과 접의 관계는 독립적입니다. 지금까지 동학 연구자들은 갑오년에 이른바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을 때 들고 일어난 것이 옳고, 반면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실제 접 중에는 봉기하기도 하고, 자기 지역에서 치안만 유지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기도 했던 접도 있었어요. 후에 보니 1894년에 봉기한 곳은 큰 손실을 당했고, 지역에서 치안만 유지하며 역량을 키운 곳은 나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3.1운동 때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생명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순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무소유를 강조하고, 때로는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이게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에요. 김지하 선생이 말한 '기우뚱한 균형'인 겁니다. 한살림도 한창 성장할 때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성찰하기도 합니다. 한살림의 큰 매력은 우리의 얼굴을 비춰볼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순과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장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황도근 _ 동학은 위에서 내려오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접들은 자발적 조직이었고 다양성이 담보되었어요. 한살림도 지역마다 독립적인 색채가 있는데, 때로 번거롭고 힘들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한살림이 자발적이고 색깔이 같지 않으니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윤형근 _ 경영의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일관되어야 하고 성과를 정돈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운동이라는 것이 공식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뒤에서 관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성과중심으로 치우치면 만남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통합된 메

시지를 내야 하는 입장과 지금 말씀하신 다양성이 모순되기도 합니다. 현실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요.

박맹수 _ 초기 연구소에서는 한살림 전체 간부진들을 모시고 난상 토론도 하고 격의 없이 어울렸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의 발언을 해도, 그게 한살림이라고 끊임없이 끌어안아 왔던 것이 한살림입니다.

윤형근 _ 한살림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도 무리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가장 건강한 모델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마다 나름의 특색을 가진 것이 건강함이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황도근 _ 언젠가 원주에 파키스탄 등 아시아지역 신용협동조합 활동가분들이 오셨어요.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았는데, 한 분이 아시아 신탁의 역사가 150년 정도인데 망한 곳과 살아남은 곳이 있었다, 정신적 가치와 리더가 튼튼한 곳은 남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라졌다고 해요. 중도의 길은 중심 깃대가 단단하게 서 있고 깃발은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적 가치가 중심에 서 있으면, 깃발의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지요. 연구소가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교육도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수록 삶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는 것이 필요하죠.

신명호 _ 좀 전에 한살림에서 큰 사업이 있을 때 연구소가 동원되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독립적인 역할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맹수 _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운동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상과 현실은 반대

편에 있는 것들이고 운동은 그 사이에서 현실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노력입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는 한살림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내부로 보면 활동가, 실무자, 생산자, 조합원들 모두 관점이 다릅니다. 연구소는 그 중간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겨레신문 기자 중에 연구소 운영위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대담론을 존중하지만 한살림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 내부 문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밖의 일만 하는 것은 연구소 본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양립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을 중간에서 잘 소통시키는 것은 연구소의 숙제이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안과 밖의 소통과 화해를 담당하는 것이 연구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명호 _ ‘연구소의 위상 및 역할 진단’이라는 보고서가 2010년에 나왔습니다. 한살림연합 지원업무로 인해 원래 연구소의 역할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웃음)

박맹수 _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균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지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기도 하고요.

황도근 _ 박맹수 총장님과 제가 이사장을 맡는 기간 동안 연합과의 관계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한살림의 새로운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수 _ 연구소 초기에 사람을 길러야 한다고 해서 ‘모심과살림 학교’를 진행하고 생명활동가 연수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 인재들이 연구소로 들어오고, 다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도 초기에는 활발했죠.

황도근 _ 연구소가 그런 인적 인프라 구축에도 역할을 하면서 업무적으로는 조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근 _ 연구소 초창기에, 당시 한살림의 전문화가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실무 영역

의 사람들을 모아 공부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같이 공부했던 것이 한살림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일하는데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살림이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서, 업무 전문성으로 인해 자꾸 직무 중심의 교육이 되면서 ‘등불’을 같이 확인하고 ‘소금’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두 시간의 강의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니까요.

신명호 _ 한살림은 조직의 기층으로부터 그런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윤형근 _ 없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인데요. 초기 세대인 제 관점이겠지만, 이번 좌담회 준비하면서 몇몇 책을 들춰보니, 박재일 선생님이 ‘우리 운동은 만나는 거야’라고 하신 말씀, 조희부 선생님이 ‘우리는 실패하고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으니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더군요. 연구소 역할 중 하나가 만나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자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한살림 선언 만들 때 한살림모임처럼 같이 길을 찾는 도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생명 평화 이야기가 부각될 필요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지금 혐오, 편 가르, 정신병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축적된 문제들을 전쟁으로 한방에 풀려고 할 거라는 두려운 생각이 떠나지 않네요. 그래서 평화담론을 다시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회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분법에 갇혀 있어요. 나는 선이고, 저쪽은 아니라는 이 구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가리지 않고 온갖 사람을 다 만났어요. 심지어 안기부 사람도 만나셨다잖아요. 평화의 방식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

게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라도 그렇게 ‘평화’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모심과살림의 길

신명호 _ 끝으로 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박맹수 _ 20년 전에 비해 시대의 요구, 지구적 차원의 요구는 더 넓어졌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가일층 심화하였다는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2014년 세월호,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 경제 위기, 식량위기는 한마디로 생명의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요. 또 과거에 비해 생명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 현실들은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도 한살림이 생길 당시 보다 더 심화하면 심화했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데올로기적 측면보다 한살림운동이 뿌리내리고 있는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구조적 변화입니다. 서너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출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고령화,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 수도권 집중 심화 등 풀뿌리에서부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도 이 모든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명의 위기는 심화하였고 생명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생명운동은 여러 시민운동 중 하나로 왜소화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살림도 30여 년 전에 비해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적 인지도나 신뢰도도 높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한살림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발언권의 크기, 생명의 세계관을 제대로 익히고 펼치고 있는지,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에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의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30~40년 전의 방법이 아닌, 오늘의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30~40대 중심의 새로운 이야기꾼을 만들자, 우리 안에서 어려우면 바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이야기 마당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대 담론은 정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상력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한데, 연구소가 20년을 맞은 지금, 다시 새로운 스타일의 나의 역할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중견 한살림 운동가들과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만나는 장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중압감을 느낄 것 같은데, 선배들이 음으로 양으로 의지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고요.

황도근 _ 2016년 한살림 30주년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키워드가 ‘앞으로 30년’이었습니다. 연구소도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려면 지금까지의 고정된 프레임을 벗어나야겠지요. 협동조합운동, 사회적경제라는 고정된 틀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프레임이 크게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 앞에서 있습니다. 윤형근 전무님이 전쟁의 기운이 돈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미래사회의 이해’ 과목을 8년째 교육하면서 산업혁명 200년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나 사회의 불평등이 커질수록 전쟁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거의 비례관계죠. 계곡에 있는 폭포의 낙차가 커질수록 물이 시끄럽게 요동치며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세계대전 발발 전 유럽은 1차 산업혁명과 세계화로 불평등이 심해졌고, 부를 쌓았던 신흥사업가들과 제국의 권력자들은 자원을 쏟아부을 곳을 찾았고, 그 결과 긴 전쟁이 시작되었지요. 요즘 그런 기운이 다시 느껴집니다. 예전에 플랫폼은 기차역을 뜻했는데 지금은 플랫폼

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IT 정보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총매출액이 엄청납니다. 잘 사는 국가의 총예산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죠. 코로나19는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했습니다.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과 음식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살림운동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운동만 쳐다보는 좁은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찌 흘러가고 있는지, 주변에 약자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른길인지, 지금의 시대 정신을 읽어야 합니다. 한살림운동을 처음 시작한 1세대 선배들은 세계사적인 흐름을 공부하며 이해했고, 그 결과로 한살림선언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1세대가 고민한 것처럼 2세대인 우리도 시대 흐름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먹거리 사업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가 그걸 끊임없이 찾아보고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한살림 내부적으로 보면 활동가와 실무자들이 너무 지쳐 보입니다. 그들을 위한 쉼터와 위안처가 필요합니다. 협동운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이어서 한살림도 상처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처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만 함께 가는 게 좋다고 말해주는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연수원이나 연구소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신명호 _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 20주년 특별좌담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8일 김지하 선생님이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1982년 원주의 동지들과 함께 작성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이후, 그의 나머지 반평생 40년은 생명사상가이자 생명운동가였습니다. 신명과 역설의 생명사상을 탐색하고, 다시개벽의 생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김지하의 생명사상은, 다시 말하면 ‘한살림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벗들과 함께 <한살림모임>을 만들고 『한살림선언』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백척간두, 끊임없이 허공을 내디디며 심오한 시적 세계와 원대한 사유의 지평을 보여준 생명시인, 생명사상가 고(故) 김지하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한 오리 희망을 찾아서

생명시인·생명사상가 故 김지하를 기리며



주요섭(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 대표)

그렇다. 김지하는 평생, 한 줄기 희망을 찾는 구도자였다. ‘팔만 사천 가지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찾고 또 전하고자 하였다.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파국의 순간, 그리고 종말의 순간, ‘한 오리 빛’이 그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는다. 그 빛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를 보내며, 또 다른 그를 다시 맞이하며 나는 ‘세 오리’ 희망을 건져 올린다. ‘땅끝의 희망’, ‘다시개벽의 희망’, 그리고 ‘부활의 희망’이 그것이다.

땅끝의 희망

땅끝에 서서
더는 갈 곳 없는 땅 끝에 서서
돌아갈 수 없는 막바지
새 되어서 날거나
고기 되어서 숨거나
바람이거나 구름이거나 귀신이거나 간에
변하지 않고는 도리 없는 땅 끝에
혼자 서서 부르는
불러
내 속에서 차츰 크게 열리어
저 바다만큼
저 하늘만큼 열리다
이내 작은 한 덩이 검은 돌에 빛나는
한 오리 햇빛
애린
나.

다시, '애린'을 읽는다. 『애린2』(1986)의 '그 소 애린' 연작의 50번째 마지막 시편을 읽는다. “더는 갈 곳 없는 땅끝”에서, “변하지 않고는 도리 없는 땅끝”에서 한 오리 빛으로 희망을 건진다. 물론 그 희망은 ‘생명’이다. 1970년대 말 긴 감옥 생활 끝에서 체험으로 얻은 것이다. ‘민들레 꽃씨’와 ‘개가죽 나무’의 신비한 생명체험이 그것이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육성으로 다시 그 현장에 함께 한다.

마침 봄이었다. 아침나절 쇠창살 사이로 투명한 햇살이 비쳐들 때 밖에서 날아 들어온 새하얀 민들레 꽃씨들이 그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며 하늘하늘 춤추었다. 그것.

그리고 또 쇠창살과 시멘트 받침 사이가 빗발에 흠이 패어 그 흠에 흠 먼지가 날아와 쌓이고 거기에 멀리서 풀씨가 날아와 앉은 뒤 또 비가 오면 그 빗방울을 빨아들여 무럭무럭 자라나니, 그것을 일러 '개가죽 나무'라 한다. 그것, 그 개가죽나무가 그날따라 유난히 푸르고 키가 크고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날, 운동을 나갔다가 붉은 벽돌담 위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담 위에 점점점점점, 무슨 점들이 찍혀 있어 눈살을 모으고 자세히 보니 풀들이었는데, 하이고! 그 끝에 풀 마다 꺾꼬맣고 노오란 꽃망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달고 있는 게 아닌가!

눈이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감방에 돌아와 앉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두세 시간은 죽히 울었을 것이다. 우는 동안 내내 허공에서 “생명! 생명! 생명!” 하는 에코가 들려왔다. (김지하 회고록 『흰 그늘의 길2』, 2003, 431쪽)

그렇다. ‘생명!’이다. 그의 ‘생명’은 감탄사일 수밖에 없다. 그의 ‘생명사상’은 철저히 체험적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질문과 탐구에서 나온 ‘생명철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생명의 존엄’ 정도로는 설명이 불가하다. 이를테면, 그것은 ‘생명을 생명으로 만드는 힘’이다.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한 감각과 사유이다. 우리는 그것을 일러 ‘생명사상’이라 부른다. 이를테면, 움직임의 배후에 작동하는 힘과 메커니즘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일 수도 있다. 생명사상은 예컨대, 이런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기체를 유기체로 유지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가며 투쟁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회를 창발

한 인간생명의 힘은 무엇일까? 화폐시스템의 심층엔 무엇이 있을까? 다시 개혁의 우주론을 창조하는 우주적 힘은 무엇일까?

김지하는 감옥에서의 특별한 생명체험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떤 힘이 엄습함을 느낀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탐문(探問)’하고 또 ‘탐문(探聞)’한다. 한국전쟁 때 죽임당한 원혼들의 해원을 노래한 시집 『검은 산 하얀 방』(1986) 서문에서 김지하는 스스로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 답한다.

“그 소리, 속으로부터 울려 나오던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무엇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조짐인가? 이런 일은 무슨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답할 자는 오직 하나—

모든 것을 아우르며 모든 것을 놓아주며 모든 것을 살아 뿔뿔하게 하는 활동하는 무(無), 신명—

지금 여기 죽임당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솟구쳐 출렁거리며 모든 존재를 죽임에서부터 살려내고 인간의 사회적 삶과 내적인 삶,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무생물. 물질과 기계까지도 거룩하게 드높이고 서로 친교하고 공생하고 해방하고 동일하여 ‘한울’로 살게 하는 가없는 저 화엄의 바다, 그 약동하는 생명의 물결 뿐이리라. (시집 『검은 산 하얀 방』, 서문)

그렇다.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다. 그렇다. 그 소리는 ‘신명’의 소리다. 김지하에게 생명은 곧 신명이다. 그러므로 김지하에게 희망이란 곧 ‘신명의 체험’이다. 죽임당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솟구쳐 출렁거리게’ 하는 힘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모든 것을 살아 숨 쉬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좌절케 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을 깨우는 일이다. 김지하는 그것에 ‘신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

하여, 김지하에게 생명은 ‘활동하는 무(無)’, ‘살아있는 없음’이 된다.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1989년에 발표된 『한살림선언』의 부제를 다시 떠올린다. 이제 ‘생명의 지평’은 ‘생명은 귀하다’거나 ‘목숨은 소중하다’에 머물지 않는다. 생명은 생명체만이 아니다. 지평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명사상은 생명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생명체가 되기 위한 조건, 혹은 생명체 너머의 생명을 묻는다. 그리고 그것을 일러 영성, 신명, 신기라고 불러본다. 김지하 생명사상의 핵심이 ‘영성’인 이유이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는 그렇게 거대한 화엄개벽을 이야기했을까? 어마어마한 우주생명학을 이야기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어렵פות하게나마 짐작해본다. 1894년 갑오년 동학혁명 이후의 민중운동을 전혀 다르게 기술한 ‘수왕사(水王史)’ 이야기(『김지하의 수왕사』, 2013), 전국의 산과 들과 숲을 쫓아 헤맨 마지막 행적들, 그리고, 정역(正易)과 천부경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그의 마지막 저작 『우주생명학』(2018)에서의 ‘묘연법’(妙衍法)과 ‘생동하는 이진법’도 어찌면 모두 ‘생명’이라는 한 오리 희망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다시개벽의 희망

김지하의 생명사상은, 다시 말해 그의 ‘활동하는 무’의 감각과 사유는 다시개벽의 ‘세계감(世界感)’으로 연결된다. ‘세계관’ 이전에 ‘세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의 어마어마한 거대 담론이 펼쳐진다. 선천과 후천의 ‘융합 대개벽’이다. 개벽은 단순한 변화와 진보나 개량이 아니다. 다시개벽은 ‘대전환’ 담론으로도 담아낼 수 없다.

개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질서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며 우주질서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질서, 인간의 역사적인 모든 조건도 또한 변한다는 뜻이며 5만 년의 인류문명사 전체가 대전환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동학에서는 5만 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과 생명운동’, 『김지하전집 제2권』, 2002)

절체절명의 위기 속 새로운 세계의 개혁적 열림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다. 이를테면, ‘다시개혁의 희망’이다.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 때문만이 아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때문만이 아니다. 자전축과 자기축의 이동을 비롯한 ‘우주적 변동’이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또한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영성, 요가, 명상의 유행 등으로 나타나는 전 인류의 ‘마음의 변화’와 뇌과학 및 생태학, 우주과학 등을 통한 사회적 자각과 ‘의식의 도약’에 주목해야 한다. 김지하에 따르면, 개혁시대란 무엇보다 ‘새로운 인간 이해’와 ‘영성에 기반한’ 섬세한 감각과 자각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전 문명사적 전환의 예감’이다.

“변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오늘, 민초들은 세상이 뒤집히기를 고대한다. 다시개혁이다. 150년 전 동학혁명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자기-구원밖에 없다. 자기-구원의 사상을 발명하고, 자기-구원의 유토피아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팬데믹-기후위기의 대전환기, 김지하의 영성적 생명사상과 개혁적 생명운동은 또 다른 자기-구원의 사상이자 자기-구원의 운동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구원의 형식 혹은 다시개혁의 형식 중 하나가 ‘한살림’이다.

생명운동, 생명문화운동, 생태운동, 환경운동, 생활협동운동, 유기농운동과 그에 연계된 모든 문화와 교육운동의 핵심 명제를 우리말로

압축하면 다음 말이 된다. 한살림! (『생명과 평화의 길』, 2005, 62쪽)

김지하의 꿈은 ‘한살림!’이었다. 그에게는 한살림 역시 감탄사였다. 그의 개벽세상은 한살림 세상이었다. 김지하는 나아가, 한살림 우주를 ‘예감(豫感)’한다.

“장바닥에 비단이 깔릴 때”, “시장의 성화”를 통해, “호혜를 전면에, 교환을 일상으로 획기적 재분배가 실현”될 때, ‘영성의 그물’로서의 신체가 느낄 수 있을 때, 남북이 새로운 차원으로의 통일이 실현될 때, 그리고 스스로 ‘지상 신선’이 될 때...

도래할 그날의 예감은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온다. 다시개벽의 소식은 귀 기울이고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는 영혼들에게 온다. 칠혹 같은 밤에, 참혹한 패배의 날에, 종말의 시간에, 역설적으로 온다. 시인 김지하는 ‘들리지 않는 샘물소리’를 ‘동짓날’이라는 시를 통해 간증한다.

첫봄 잉태하는 동짓날 자시
거칠게 흠어지는 육신 속에서
샘물 소리 들려라
귀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샘물 소리 들려라
한 가지 희망에
팔만사천 가지 괴로움 걸고
지금도 밤이 되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날 뿐
아무것도 없고
샘물 흐르는 소리만
귀 기울여 귀 기울여 들려라

잘 듣기, 잘 보기는 생명운동의 원리이기도 하다. 틀을 전제하면, 대안을 전제하면 생명운동이 아니다. 김지하의 생명운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같은 틀을 적용시키지 않고 복잡한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법칙과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접근 노력, 모색 노력”이다.¹ 그는 그런 활동을 생명운동이라 부른다.

김지하에게 한살림운동은 생명운동이었다. 생명운동은 곧 한살림운동이었다. 그것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활동이었다. 생활협동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이 그것이다. 생활경제와 생명문화가 그것이다.² 그러므로 그의 한살림은 ‘생산-소비 하나’의 한살림에 머물지 않는다. 김지하는 한살림 생명운동의 또 다른 한 바퀴인 생명문화운동을 자임했다. 그리고 한살림선언이 발표된 다음 해, ‘개벽과 생명운동’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그 대강(大綱)을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줄곧 김지하는 생명사상을 체계화하고, 모심과 살림의 말들을 창안하고, 풍류와 율려의 미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활동하는 무’를 통해, ‘신령한 카오스모스’를 통해 생성하는 생명의 무궁한 이치를 살피고 또 밝히고자 했다. 지금 이 땅에, 한살림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또한 김지하에게 한살림은 ‘대전환의 징표’였다. 삶의 전환과 문명전환의 원형적 형식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법적 대표로서 활동했던 <사단법인 생명과 평화의 길> 역시 모시고 기르고 살리는 ‘한살림의 길’이었다. 그의 우주생명학은 ‘한살림우주론’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한살림선언』에 의하면, 한살림은 생명운동의 ‘이념’이자 ‘활동’ 형식이다. 그러나, ‘살림’도 중요하나, ‘한’이 중요하다.³ 그런데, 이때 ‘한’은 통합과 조화의 생명세계만이 아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하나이면서 모두였

1) 『김지하전집 제2권』, 2002, 308쪽

2) 『생명과 평화의 길』, 2005, 215쪽

3) 『생명과 평화의 길』, 2005, 360쪽

다. ‘한’이라는 말의 다중적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김지하에게 한살림은 불연기연(不然其然), 무엇보다 ‘역설’의 한살림이다. 아울러 역설의 배후에 숨어있는, 한살림을 한살림으로 살아있게 하는 힘인 ‘신명’의 한살림이다.

김지하에 따르면, ‘살림’은 ‘모심’과 함께 한살림운동의 핵심가치이다. 살림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해하는 ‘죽임’에 대한 대응 개념이자 극복운동이다. 그러나 이때 살림은 삶과 죽음의 대립에 토대를 두지 않고, 삶과 죽음을 모두 포함하는 한살림을 의미한다. ‘상극’을 버리고 ‘상생’만을 취하는 한살림이 아니라, ‘상생/상극’의 역설적 공존의 한살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김지하에 의하면, ‘살림’의 소극적인 차원을 포함하되 훨씬 높이 비약하는 곳에 ‘한살림’이 있다. 이때 비로소 한살림은 ‘신령한 카오스모스’가 된다. 화염개벽의 한살림이 된다.

그리고 한살림이라는 희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요체는 ‘시간관’이다. 한살림-우주는 기존의 시간관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김지하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삶의 생명리듬과 생태적 적정성을 파괴하는 초고속의 양적 시간이 지배하고 있다. 다시개벽은 ‘선형적 시간의 강제’, ‘양적 시간의 지배’에 맞서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진보/보수의 낡은 구도도, 성장 신화의 타파도 요체는 시간관에 있다. “새로운 시간관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바로 이 시간이 긴 동서문명사, 특히 현대에 있어서 인류의 거짓된 삶, 목적론, 선적인 시간, 미래주의, 순환적 상고주의, 자동 기계의 유토피아, 속도 생산에 의한 공산주의 낙원, 엔트로피 최대 증대점에서 지구 물질의 붕괴와 함께 그로부터 분리된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의 거대한 하나의 꽃인 지구 영권(地球 靈圈, noosphere, 페이야르 샤르댕의 비전)의 상승이라는 과학적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생명과 평화 길』, 2005, 276쪽)

부활의 희망

‘한 인간’ 김지하를 보낸다. ‘한 생명’ 김지하를 떠나보낸다. 경계 없는 ‘무궁한 울’에서, 흐르고 또 흐를 것이다. 약동하고 또 약동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사실은 이미 그는 부활했다. 매일매일 수련을 통해 신체적으로 부활한다. 그의 시 ‘줄탁’⁴은 그의 ‘부활의 열망’과 ‘부활의 방법’, 그리고 줄탁의 동시발생이라는 ‘부활의 우주론’을 잘 보여준다. ‘타 죽은 나무에서 태어나는’ 역설의 생명사상, ‘탄생의 미묘한 때를 알려주는’ 신명의 생명사상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저녁 몸속에

새파란 별이 뜬다

회음부에 뜬다

가슴 복판에 배꼽에

뇌 속에서도 뜬다

내가 타죽은

나무가 내 속에 자란다

나는 죽어서

나무 위에

조각달로 뜬다

4) 시집 『중심의 괴로움』, 1994

사랑이여
탄생의 미묘한 때를
알려다오

겹질 깨고 나가리
박차고 나가
우주가 되리
부활하리

잊힌 그의 아호 ‘우형(又形)’을 떠올린다. ‘우형’은 수운 최제우의 『동경대전 (포덕문)』에 나오는 말이다. ‘기형태극 우형궁궁(其 형태太極 又形弓弓)’의 그 우형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영부(靈符)의 형상이 태극 모양, 혹은 궁궁 모양이라는 말이다. 김지하는 이를 카오스모스, 혼돈적 질서의 자기조직화로 재해석한다. 이를테면, 우형은 ‘또 다른’ 생명형식의 태동이다.

‘또 다른 무늬’로 다시 태어나는 수많은 ‘김지하들’을, 수많은 ‘생명사상들’을 그려본다. 김지하는 필명이다. 김지하의 본명은 김영일(金英一)이었다. 또한 그는 아호로 노겸(勞謙), 노헌(勞軒), 우형(又形), 묘연(妙衍) 등을 사용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다른 꽃으로 살아온 썸이다. 81년 전(1941년)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얻은 그의 이름 영일(英一)처럼, 또 다른 꽃이 되어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꽃으로 피어날까?

물론 알 수는 없다. 무슨 꽃으로 피어날지 그 스스로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가 강조했던 이야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전했던 수운 최제우의 시구가 있다.

“꽃 문이 스스로 열려야 봄바람이 분다(花扉自開 春風來)”

스스로 열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한살림이라는 조직도, 한국 사회도, 스스로 열어야 세상도 다시개벽한다. 그렇다. “꽃 문이 스스로 열려야 봄바람이 분다.”

그는 무슨 꽃으로 다시 태어날까? 어떤 무늬의 꽃 문을 스스로 열까? 1970년대 저항시인 김지하를 돕던 일본 사람들이 ‘지하’라는 필명에 한자 지초 지(芝)와 강물 하(河)를 써서 지하(芝河)로 썼다고 한다. 그는 이미 화초들의 강물이었다.

혹 연꽃일 수도 있다. 1981년 12월 긴 감옥 생활 끝, 뒤늦게 두 개의 상을 받는 시상식을 원주에서 치르게 된다. 하나는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위원회가 주는 인권상이었고, 또 하나는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 준 로터스상이었다. 그런데, 이때 수상한 로터스상의 로터스(lotus)가 연꽃을 의미했다. ‘연꽃상’인 셈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지하는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생명사상의 원형, 생명운동의 원형이 될 만한 내용의 수상 연설을 한다. 그는 이때 이미 또 다른 꽃으로 태어난 셈이다. 그는 이미 연꽃으로 부활해 있는지도 모른다. 2022년 7월 어느 연못에서 백련(白蓮)으로, 혹은 홍련(紅蓮)으로 피어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로터스’는 우리말로 ‘연꽃’입니다. 저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전체 우리 민중과 제3세계 민중, 전 인류와 전 중생의 생명의 연꽃은 진흙 수렁 속에서만 피어날 것입니다. (중략) 탁류 속에 들어가 오래 기다려 그 탁류 전체를 스스로 맑아지게 하는 ‘도(道)’를 말할 때, 그것이 다름 아닌 연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요, 부드러움 즉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수동적 적극성'입니다. 수동적 적극성이야말로 참된 용기요 참된 결단이며, 생명을 본래 있는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생명 자신의 가장 생명다운 활동양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로터스’, 즉 ‘연꽃’입니다.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 『김지하전집 제3권』, 2002)

가장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또 교사가 되는 나라, 한국
우리는 어떤 교사들을 길러 내고 있는가
한국의 교직과 교사 교육을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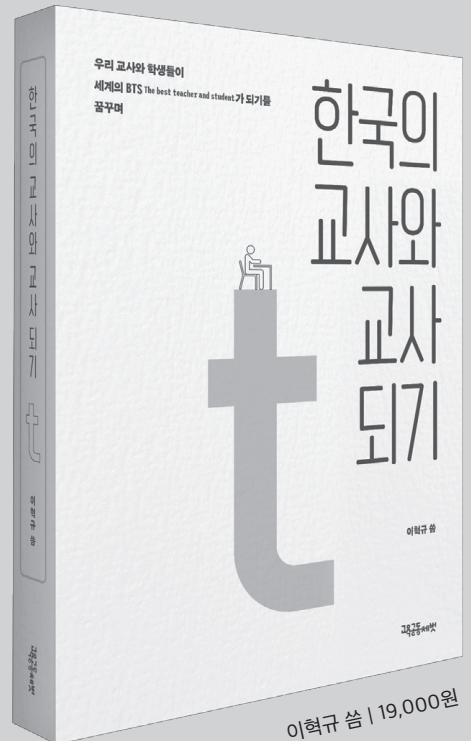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세계의 BTS The best teacher and student 가 되기를 꿈꾸며

한국의 교사와 교사 되기

미래의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계몽의 주체로 학생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과 더불어 배우기를 잘하는 존재여야 한다. 따라서 한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교사는 매일매일 '되기'를 연습하는 역동적인 학습자여야 한다. (중략) 이런 '교사 되기'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 이가 더 많아지면 한국 교사들은 마침내 좁은 벽장을 힘차게 깨고 나와 더 넓은 초원을 달리고 광활한 창공을 비상할 것이다. 그리고 거인의 어깨에 앉아서 학습자들은 각자 자신의 되기를 연습하며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 있는 주체들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역동적 '되기'의 공동체 — 학습자 되기, 교사 되기, 교사 교육자 되기, 민주 시민 되기 등 — 로 함께 만나는 날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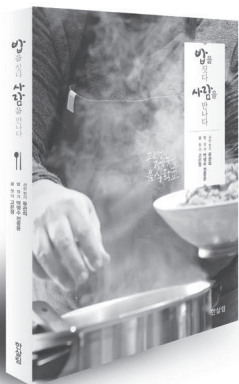
- <책을 펴내며> 가운데



이혁규 씀 |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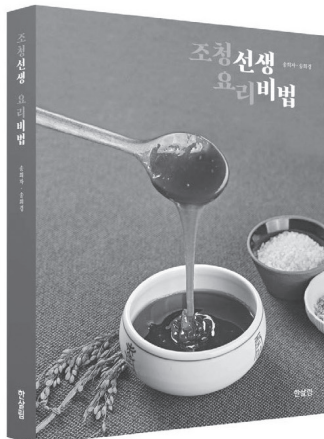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밥상을 모색하는 한살림 요리책



밥을 짓다
사람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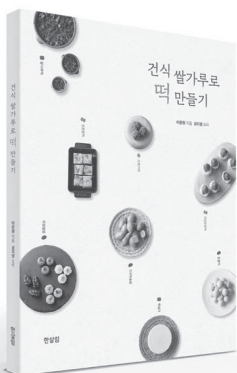
고은정 지음
값 19,000원



양념의 통념을 깨고 조연에서
주연으로 등장한 조청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음식에세이 & 요리책

조청선생 요리비법

송희자·송희경 지음 | 값 23,000원



건식 쌀가루로
떡 만들기

이준원 지음
값 17,000원



밥상과 농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밥상차림, 이웃과 세상과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한살림 살림밥상을

한살림이 제안하는 살림밥상 차림

한살림식생활센터 지음 | 값 17,000원



우리 땅 친환경
제철 먹을거리로 만드는
한살림 요리

채송미 지음
값 18,000원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www.salimstory.net 이메일 story@hansalim.or.kr 전화 02-6931-3612

<모심과살림>지를 함께 만들어 나갈 분을 모십니다.

지원 자격

- 모심과살림지 구독자, 한살림조합원,
그리고 모심과살림지에 애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
-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 편집과 교정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 원고 교정 교열(재택근무, 발간호 당 계약 후 연장가능)
- 기타 상세 업무는 별도 협의

대우

- 호당 150만원
- 원하시는 모심과살림지 과월호 전권 증정(16호 제외)

지원 방법

- 편집과 교정관련 이력이 담긴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소개서(형식자유, A4 1장 이하)를
다음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mosim@hansalim.or.kr
- 문의하실 곳: 02-6931-3609



재생종이로 만든 책



ISSN 2287-5972



값 8,000원